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 18일(토)

장소 | 비대면 온라인

주최 | (사)한국사회학회

주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후원 | 한국연구재단

누리미디어

한국리서치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초대의 글 INVITATION

한국사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사회학대회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사회학대회의 대주제는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소통부재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적 논의와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제를 정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이번 사회학대회도 플레너리세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사회학대회는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을 넘어 회원들이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면서 학문공동체로서의 동료의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작년 온라인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경험이 있기에 이번 사회학대회도 성황리에 개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사회학대회는 예년과 같이 플레너리세션, 일반세션, 특별세션, 대학원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두 개의 플레너리세션은 대주제에 맞추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감교육”과 관련된 세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일보와 공동기획하였던 “탈진실시대의 사회”와 관련된 세션입니다. 두 세션 모두 소통과 공존의 사회를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분과학회와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반세션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세션에서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와 연구팀들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세션에서도 신선하고 창의적인 연구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번 사회학대회에 모든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서로의 안부도 묻고 고민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학문적 동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장원호 드림



환영의 글 INVITATION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정기 사회학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정기 사회학대회도 플래너리 세션을 제외한 세션들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소통 부재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적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정기 사회학대회의 대주제는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분과학회와 연구팀 및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성과들로 사회학 대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 사회학대회에서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의 주옥같은 연구성과들이 두루 발표되고 활발한 학술토론이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사회학대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소통과 공존의 사회를 위한 사회학적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기 사회학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많은 분이 노력 하였고 플래너리세션은 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준비하는 측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기 사회학대회를 위해 애쓰신 조직위원회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학회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국사회학회 정기 사회학대회 준비위원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염미경 올림



대회일정

SCHEDULE

12월 17일(금)

8:50~9:00		개회식						
9:00~10:45	종교	사회사	의료/건강	농촌	환경			
10:45~11:00		휴식						
11:00~12:30	플레너리세션 1 (유튜브 및 줌 생중계)							
12:30~13:30		휴식 (점심시간)						
13:00~13:30		이사회						
13:30~15:15	이론 1	문화 1	동양사회/ 동양사상 1	다문화/ 소수자	조직경제	사회계층/ 불평등 1	복지/평등	특별 (한중) 1
15:00~15:30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 회의							
15:15~15:30		휴식						
15:30~17:15	이론 2	문화 2	동양사회/ 동양사상 2	가족, 인구/노년	산업/노동	사회계층/ 불평등 2	특별 (연대BK)	특별 (한중) 2
17:15~17:30		휴식						
17:30~18:30		정기 총회 (줌 온라인)						



12월 18일(토)

9:00~10:45	대학원 1 (노동)	대학원 2 (젠더)	대학원 3 (교육)	대학원 4 (사회 심리)	대학원 5 (팬데믹/ 건강)	대학원 6 (이론/ 문화/ 사회운동)	특별 (한일)	특별 (학술)	특별 (지역) 1
10:45~11:00	휴식								
11:00~12:30	플레너리세션 2							특별 (지역) 2	
12:30~13:30	휴식 (점심시간)								
13:30~15:15	정치/ 사회운동	사회심리학	젠더 1	과학/정보사회학 1	특별 (자료원)				
15:15~15:30	휴식								
15:30~17:15	국제정치 사회학	법사회학	젠더 2	과학/정보사회학2	글로벌/ 인권				

목 차

CONTENTS

Day 1
FRI

17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세션1

09:00~10:45

종교

책임: 채병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이정연 (서울여자대학교)

1.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Religious Field in South Korea and Its Possibility on the Habermasian Post-Secular Society
발표 : 이시윤 (공주대학교)
토론 : 장형철 (인덕대학교)
2. 세대 간 종교전승: ISSP 2018을 중심으로
발표 : 주익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3. 다시 보는 피터 버거의 종교사회학
발표 : 최현종 (서울신학대학교)
토론 : 이성우 (감리교신학대학교)
4. 제2의 기축시대(The Second Axial Age)
발표 : 송재룡 (경희대학교)
토론 : 전명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

사회사

책임: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 박천웅 (전북대학교)

1. Incorporating Dynamics: A Method of Analysing Nineteenth-Century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통합적 역동성: 19세기 중국의 편입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 5
발표 : 유성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이병호 (아주대학교)

의료/건강

책임 : 심재만 (고려대학교)

사회 : 심재만 (고려대학교)

1. Transitions in Adherence Trajectories from Intervention to Maintenance of a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9
발표 :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2. Family and Work Pathways and Their Association to Health for Women: The Case of Korea 11
발표 : 김여진 (강원대학교), 우혜영 (Portland State University), 한신원 (Harvard University)
3. 삶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와 건강
발표 :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임동균 (서울대학교), 강현욱 (서울시립대학교), 박현아 (서울대학교), 유찬기 (서울대학교), 이다예 (서울시립대학교)
4. 일상 경험으로서의 미묘한 차별과 대응: 이주배경청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13
발표 : 송영호 (동국대학교), 최영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농촌

책임 :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 : 김원동 (강원대학교)

1. 농촌사회의 수직적 자본: 창업농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7
발표 : 정하나 (서강대학교)
토론 : 조옥라 (서강대학교)
2. 한국인의 먹거리 신뢰: 10년의 변화와 영향요인 18
발표 : 김흥주, 이현진, 안윤숙 (원광대학교)
토론 :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3. 소비자의 먹거리 대안 인식과 생산자 신뢰: 10년의 변화
발표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윤병선 (건국대학교), 이효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 : 이창한 (지역재단)
4. 농업농촌농민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20
발표 : 이해진 (충북대학교), 김철규 (고려대학교)
토론 : 황영모 (전북연구원)

환경	책임 :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 : 홍덕화 (충북대학교)
-----------	--

1. 한국 청소년 기후변화 운동의 함의: 청소년 권리담론의 참신성과 녹색합리주의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27
 발표 : 최규연 (중앙대학교)
 토론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2. 환경 갈등 해결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 29
 발표 : 김미숙 (전북대학교)
 토론 :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Day 1

FRI

17

◆◆◆

플레너리세션1

11:00~12:30

플레너리세션1: 사회적 공감과 미래교육	사회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	---------------------------

- 기조발제: 사회적 공감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의 길을 찾다
- 발표 :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 종합토론 :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장원호 (한국사회학회 회장)
 홍창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사범대학장)
 이중현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신중화 (서울특별시교육청, Univ. of Warwick 사회학박사)
 박석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

Day 1
FRI

17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세션3

13:30~15:15

이론1

책임 : 김봉석 (성균관대학교)

사회 : 홍찬숙 (서울대학교)

1. 도덕 경제, 국가, 사회운동: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저항 정치의 이론화 35
발표 : 강민형 (연세대학교)
토론 : 임운택 (계명대학교)
2.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어디도 아닌 곳’을 향하여: 후기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구상에 대한 논의 36
발표 : 오선진 (도쿄대학교)
토론 : 정일준 (고려대학교)
3.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의의와 한계: 미드-블루머 논쟁과 민속방법론적 비판을 중심으로 38
발표 : 진세환 (서강대학교)
토론 : 이시윤 (공주대학교)

문화1

책임 : 왕혜숙 (홍익대학교)

사회 : 김은정 (동덕여자대학교)

1. N-잡러 시대, 사회초년생의 일과 여가 의미 43
발표 : 이현서 (아주대학교)
토론 : 윤명희 (송실대학교)
2. 죽음의례의 문화적 기억과 정동의 배치 44
발표 : 서경원 (전북대학교)
토론 : 한성훈 (연세대학교)
3. 코로나 이후 여가생활의 변화와 우울: 세대별, 혼인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45
발표 : 신아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성연주 (서울대학교)

**동양사회/동양사상1:
사회학 관점에서 기본소득론 탐구**

책임 : 박세준 (덕성여자대학교)

사회 : 이일래 (부산대학교)

1.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세계의 다양한 사례) 49
발표 : 최인숙 (성공회대학교)
토론 : 오세근 (동신대학교)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지자체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53
발표 :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광주대)	
토론 : 최우영 (전북대학교)	
3.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담론 전개	55
발표 : 김세현 (부산연구원),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 이혜수 (강원대학교)	
4. 화엄사상의 보살행과 현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57
발표 : 윤기혁 (동명대학교)	
토론 : 이명호 (경희대학교)	

다문화/소수자	책임 : 이소훈 (경북대학교) 사회 : 이소훈 (경북대학교)
----------------	--

1. 한국 이주민 차별척도의 한계: 차별 개념과 측정의 재검토	61
발표 : 손인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송영호 (동국대학교)	
토론 : 김철호 (전북대학교)	
2.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갈등 이주여성 중심으로	
발표 : LUANGEGE (경희대학교)	
토론 : 문경연 (창원대학교)	

조직/경제	책임 :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 :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	--

1. 순위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조직의 지위형성과 전략적 활용	65
발표 : 강수환 (고려대학교), 배소현 (전남대학교)	
토론 : 백경민 (송실대학교)	
2.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자의 영향: 주유소 간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67
발표 : 윤은성 (University of Arizona)	
토론 : 이원재 (KAIST)	
3. 각인과 계승: 1948년 이후 법원 조직화와 일본제국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생존과 출세	69
발표 : 박천웅 (전북대학교)	
토론 : 김수한 (고려대학교)	
4.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거복지 분야 시험 사례	70
발표 : 김정원 (전북대학교)	
토론 : 이가람 (연세대학교)	

사회계층/불평등1

책임 : 정인관 (숭실대학교)

사회 : 정인관 (숭실대학교)

1. 사회이동의 이중적 과정: 사회이동의 생애과정적 접근 75
발표 : 문수연 (중앙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토론 :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2. COVID-19 전후 학업 성취도 불평등: 가족배경, 성별, 지역에 따른 격차 77
발표 : 최성수 (연세대학교), 임영신 (서울대학교), 고원태 (연세대학교)
토론 : 황선재 (충남대학교)
3. The Widening Gap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Korea 78
발표 : 장상수 (순천대학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복지/평등

책임 : 김도균 (제주대학교)

사회 : 김도균 (제주대학교)

1.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세대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83
발표 : 윤민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임정재 (연세대학교)
토론 : 김종우 (연세대학교)
2.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85
발표 : 양종민 (서울대학교)
토론 : 김윤영 (전북대학교)
3. 아시아지역 사회적 웰빙 비교: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87
발표 : 박상희 (서울시립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구혜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토론 : 김재우 (전북대학교)

특별(한중)1

책임 : 예동근 (부경대학교)

사회 : 김부용

1. 后疫情时代城市社区韧性建设 (포스트코로나시대 도시커뮤니티 재생)
발표 : 루 형 (중국 길림대학교)
토론 : 윤종석
2. 嵌入式治理: 社会工作对后疫情时期社区治理的影响 (발현적 거버넌스: 사회워크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커뮤니티 통치에 대한 영향)
발표 : 리일남 (중국 난주대학교)
토론 : 강광문 (서울대학교)

이론2

책임 : 김봉석 (성균관대학교)
사회 : 이종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1. 소스타인 베블런과 미국 경제학 장의 과학화 93
발표 : 이용승 (서강대학교)
토론 : 민병교 (서강대학교)
2. 공동체 가치와 코로나19 방역 성과: 시민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집단분석 방법 96
발표 :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심영희, 박병진 (한양대학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문화2

책임 : 왕혜숙 (홍익대학교)
사회 : 이희정 (공주대학교)

1.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99
발표 : 이희정 (공주대학교)
토론 :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2.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 블로그와 신문기사·칼럼 텍스트 마이닝 101
발표 :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토론 : 김종우 (연세대학교)
3.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게임 기사 분석, 2010-2020년 104
발표 : 이은정,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토론 : 왕혜숙 (홍익대학교)

**동양사회/동양사상2: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책임 : 박세준 (덕성여자대학교)
사회 : 안효성 (대구대학교)

1. 천도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107
발표 : 박세준 (덕성여자대학교)
토론 : 정승안 (동명대학교)
2.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고찰 109
발표 : 이미림 (성균관대학교)
토론 : 이동일 (창원대학교)

3. 원불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111
 발표 : 염승준 (원광대학교)
 토론 :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4. 불교의 공동체(승가)의 원리에서 기본소득 이해하기 113
 발표 : 이명호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토론 :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가족, 인구/노년	책임 :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 : 김주현 (충남대학교)
------------------	--

1. Profiles of met and unmet needs of cognitively impaired older Singaporean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aregiver well-being 117
 발표 :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토론 : 이민아 (중앙대학교)
2. When Home Becomes Classroom: The Shifting Roles of Korean Immigrant Mothers in the Management of Children's Education during COVID - 19 in the US
 발표 : 정고운 (경희대학교), 임세정 (The Graduate Center, CUNY),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토론 :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3.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비교: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118
 발표 : 임서연 (충남대학교), 황선재 (충남대학교)
 토론 : 송유진 (동아대학교)

산업/노동	책임 :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 : 황현일 (창원대학교)
--------------	--

1.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노사 권력관계와 이중노동시장: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성과와 한계 ... 123
 발표 : 최희선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토론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분석: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126
 발표 : 남윤철 (고려대학교)
 토론 :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3. 한국의 산업별 임금총액의 변화, 1990-2020: 다른 선진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127
 발표 : 유한희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계층/불평등2

책임 : 정인관 (송실대학교)

사회 : 정인관 (송실대학교)

1. 중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연구 133
발표 : SHAO HONGDUO (경희대학교)
토론 : 박 우 (한성대학교)
2. 대학서열과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 초기 소득불평등 분석 136
발표 : 이수빈, 고원태 (연세대학교)
토론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3.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138
발표 : 연혜원 (서강대학교)
토론 : 임영신 (서울대학교)

특별(연세대학교 BK21):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책임 : 임정재 (연세대학교)

사회 : 임정재 (연세대학교)

1.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토론과 혐오: 시민 참여의 양면 143
발표 : 권은남 (연세대학교)
2. 모성의 의료화: 맘카페의 모유수유 담론을 중심으로 145
발표 : 송민이 (연세대학교)
3. 토픽 모델링을 통한 무작위 쌍대비교 문항 분석
발표 : 송준모 (연세대학교)
종합토론 : 이선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특별(한중)2

책임 : 예동근 (부경대학교)

사회 : 김부용

1. 코로나확산 후 부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의 변화에 대한 소고
발표 : 예동근, 조아약 (부경대학교)
토론 : 주아평 (중국 난주대학교)

대학원1(노동)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황현일 (창원대학교)

1. 야간노동자의 여가시간활용 연구: 2019 생활시간자료를 중심으로 155
 발표 : 민우정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2. 한국 기업의 다양성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 157
 발표 : 이지연 (고려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3. 2010년대 한국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노조효능감에 대한 성차를 중심으로 159
 발표 : 김기성 (연세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4. 노동시간이 청년층의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161
 발표 : 조예지 (고려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대학원2(젠더)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박주연 (연세대학교)

1. 초등교실에서 수행되는 젠더교육의 현실: 교사의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165
 발표 : 서세혁 (경희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2.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형태와 우울: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167
 발표 : 최지원 (고려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3.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균열으로서의 젠더 168
 발표 : 김가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대학원3(교육)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정인관 (송실대학교)

1. Converging Intention but Diverging Intensity?: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Use in Childcare from 2004 to 2019 173
발표 : 이수정 (연세대학교), 최성수 (연세대학교)
토론 : 인 정 (옥스포드 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2.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175
발표 : LUO JUNJIAN (경희대학교)
토론 : 인 정 (옥스포드 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대학원4(사회심리)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김상학 (한양대학교)

1. 빈곤 원인 인식의 이질적 구조 181
발표 : 김일송 (고려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2. 한국 반개신교현상의 원인 탐구: 절대성과 다양성의 대립 183
발표 : 김선한 (전북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3.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갈등: 이주여성 중심으로 185
발표 : 환격격 (경희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4. Social Trust and Learned Helplessness as Civic Design Elements: A Case Study on the Spy Camera Detector Application “Relief’s Map” 187
발표 : 배윤빈 (서강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대학원5(팬데믹/건강)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임정재 (연세대학교)

1. 2001년 이후 국경관리 동향 탐색: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중심으로 191
발표 : 최효원 (연세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2. 전염병 시대의 양극화: 20세기 페스트와 21세기 코로나바이러스를 중심으로 193
발표 : 윤병연 (고려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3.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지향이 정부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196
발표 : 김노을, 이율리, 김기성 (연세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4.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 우울 담론의 사회적 구성 탐구	197
발표 : 배진태, 조수민, 김영서, 윤병연 (고려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대학원6(이론/문화/사회운동)	책임 :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 : 지주형 (경남대학교)
-------------------------	--

1. 도덕 문화가 소수자 혐오에 미치는 영향	203
발표 : 김경준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2. 생태위기와 파국적 전환담론의 차원들: 김홍중과 김지하를 중심으로	204
발표 : 주요섭 (전북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3. 누가 거리로 나가는가?: 2013-2020년 한국의 집회·시위 참여자 분석	206
발표 : 전누리 (중앙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4. 정치 성향과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208
발표 : 왕정하 (서강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특별(한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현상	책임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	--

1.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초기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토픽모델	211
발표 : 조원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토론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2.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요인을 중심으로	212
발표 : 황선재 (충남대학교),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3. 코로나19 감염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건강격차를 중심으로	213
발표 : 오지은 (오사카쇼인여자대학)	
토론 : 최가영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일한 협동을 통한 재해복구연구: 동일본대지진부터 코로나 위기상황까지 214

발표 : 야마 요시유키 (칸사이 가쿠인대학)
토론 : 오독립 (와세대대학교 도시지역연구소)

특별(학술)	책임 : 김귀옥 (한성대학교) 사회 : 최 윤 (고려대학교)
---------------	--

1.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상, 실행방안 217

발표 : 김귀옥 (한성대학교)

2. 한국 학술생태계의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자의 연구환경 221

발표 :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세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센터)

3. 지역 소재 연구자와 독립연구자를 위한 거버넌스 구상

발표 : 홍덕구 (포항공과대학교)

종합토론 : 강명숙 (배제대학교), 강정석 (지식순환협동조합), 강태경 (고려대학교), 김명환 (서울대학교),
김진균 (성균관대학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종렬 (전남대학교),
신명호 ((사)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특별(지역): 지방인구의 현재와 미래	사회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	---------------------------

기조연설: 지역 발전의 당위와 현실

발표 : 전상인 (서울대학교)

1. 지방인구 위기와 인구 이동

발표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지역청년의 마음 읽기

발표 : 고우림, 조영태 (서울대학교)

3.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시설 사회화: A시 사례

발표 : 박효민, 안준희 (서울시립대학교)

종합토론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정은 (창원대학교)

Day 2
SAT

18



플레너리세션2

11:00~12:30

플레너리세션2:
진보와 보수를 넘어: 탈진실 시대의 사회학

사회 : 장덕진 (서울대학교)

진보와 보수를 넘어: 탈진실 시대의 사회학

좌담: 장원호 (서울시립대학교), 한 준 (연세대학교), 신경아 (한림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권현지 (서울대학교), 임동균 (서울대학교)

Day 2
SAT

18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세션2

11:00~12:30

특별(지역2):
지역사회와 삶의 질

사회 : 송유진 (동아대학교)

1. 동남권 청년들의 일 경험과 구직: 창원, 울산 남성 청년들의 사례
발표 : 양승훈 (경남대학교)
2.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지방 도시의 쇠퇴와 청년의 경험
발표 :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나윤영 (서울대학교)
3. 문화도시로의 지역 도시 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발표 : 안지연 (상명대학교 글로벌예술교육연구소)
4. 노인의 고립과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의 조절 효과
발표 : 박소현 (서울대학교)
종합토론 : 박천웅 (전북대학교), 김주현 (충남대학교)

정치/사회운동

책임 :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 : 임동균 (서울대학교)

1.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단결하는가?: 독일의 배달 노동자 조직화 사례 231
발표 : 신솔아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토론 :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2. 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233
발표 : 서찬석, 이 상, 김효경, 신광영 (중앙대학교)
토론 : 하경희 (아주대학교)
3.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를 중심으로 235
발표 :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토론 : 김형주 (5.18연구소)

사회심리학

책임 : 김상학 (한양대학교)
사회 : 김상학 (한양대학교)

1. Religion Shapes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239
발표 : 정종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토론 :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2. 가치 연구의 복원: 인지사회학적 방법론 적용
발표 : 김지혜 (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상학 (한양대학교)
토론 : 민응기 (목원대학교)
3.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위험에 대한 태도 연구 242
발표 : 홍은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천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젠더1

책임 :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 : 김영미 (연세대학교)

1. 한일 성역할태도 비교: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247
발표 : 사사노미사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오지혜 (경남 여성가족재단)

2. 혼인 상태별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젠더 이데올로기 지형 249
 발표 : 문지선 (고려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3. ‘박카스 아줌마’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종로3가 중·고령 성매매의 행위자
 네트워크 251
 발표 : 이희영 (대구대학교), 윤선미 (중앙대학교)
 토론 : 정고운 (경희대학교)

과학/정보사회학1	책임 : 전 준 (충남대학교), 백경민 (송실대학교) 사회 : 백경민 (송실대학교)
------------------	---

1. 한국의 오픈마켓 플랫폼 만들기, 1998-2009 257
 발표 : 김경필 (고려대학교)
 토론 : 정지연 (나라살림연구소)
2. 위기의 한국 공학 전문직주의 258
 발표 : 한경희 (연세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3. 늘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민주화 260
 발표 : 최봉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토론 : 백경민 (송실대학교)

특별(한국사회과학자료원):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이야기하다	책임 :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 배 영 (포스텍)
--	--

기조발제: 소셜미디어데이터를 연구에 쓰기 위한 방법

- 발표 :** 구혜란, 김혜진, 허혜옥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배윤경, 홍리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백영민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김란우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재관 (카카오 정책팀 부장), 김용학 (Tapacross 대표),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국제정치사회학

책임 : 박 우 (한성대학교)
사회 : 박해남 (원광대학교)

1. 5월 광주를 둘러싼 국제 정치: 1979-1982년 외교 문건을 중심으로
발표 :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김학재 (서울대학교)
2. 메가아시아의 발현과 아시아의 변동: 아시아화 vs 중국화? 265
발표 :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3.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266
발표 : 박해남 (원광대학교)
토론 : 박치현 (대구대학교)
4.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인 이민자의 시민권 정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268
발표 : 박 우 (한성대학교)
토론 : 송영호 (동국대학교)

법사회학

책임 : 한민경 (경찰대학교)
사회 : 한민경 (경찰대학교)

1.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 271
발표 :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민경 (경찰대학교)

젠더2

책임 :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1.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275
발표 : 김혜경 (전북대학교)
토론 : 김 영 (부산대학교)
2. From Solidarity to Fluidarity: Young College Women's Flexible Feminist Identity Formation and the Corset Free Movement in South Korea 278
발표 : 정고운 (경희대학교)
토론 : 김조은 (KDI)

3. 해방 후 국가에 의한 성폭력과 과거청산 과제 284
 발표 :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토론 : 김명희 (경상대학교)

과학/정보사회학2	책임 : 전 준 (충남대학교), 백경민 (송실대학교) 사회 : 전 준 (충남대학교)
------------------	---

1. 유전자 변형 모기 환경방출실험의 현황과 쟁점: 옥시텍 Freindly™ 모기의 미국 플로리다 실험을 중심으로 289
 발표 : 박주형 (고려대학교),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토론 : 우태민 (카이스트)
2. 미래로 만든 도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골재 이동의 정치 292
 발표 : 김준수 (카이스트)
 토론 : 박서현 (Virginia Tech)
3. 세월호의 과학기술학, 해결된 문제와 미해결 질문들 295
 발표 : 홍성욱 (서울대학교), 황정하 (서울대학교)
 토론 : 박상은 (충북대학교)

글로벌리제이션/인권	책임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 :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	--

1. Merits of Social Protection? Correlates of Work Bank Project Performance 299
 발표 :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토론 : 김수경 (한신대학교)
2. Moving Apart, Coming Together: The Dynamics of Coalition Building in the South Korean LGBT Movement 300
 발표 : 정성조 (중앙대학교), 정다을 (중앙대학교), 이희영 (SUNY Albany), 서찬석 (중앙대학교)
 토론 : 정진원 (카톨릭대학교)
3.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뉴욕타임즈와 중앙일보 토픽 모델링, 2000-2020 303
 발표 : 김나현 (성균관대학교)
 토론 : 백승민 (이화여자대학교)



종교

종교

사회 : 이정연 (서울여자대학교)

1.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Religious Field in South Korea and Its Possibility on the Habermasian Post-Secular Society
발표 : 이시윤 (공주대학교)
토론 : 장형철 (인덕대학교)
2. 세대 간 종교전승: ISSP 2018을 중심으로
발표 : 주익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3. 다시 보는 피터 버거의 종교사회학
발표 : 최현중 (서울신학대학교)
토론 : 이성우 (감리교신학대학교)
4. 제2의 기축시대(The Second Axial Age)
발표 : 송재룡 (경희대학교)
토론 : 전명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7일(금요일) | 오전 세션1



사회사

사회사

사회 : 박천웅 (전북대학교)

1. Incorporating Dynamics: A Method of Analysing Nineteenth-Century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통합적 역동성: 19세기 중국의 편입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

발표 : 유성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이병호 (아주대학교)

Incorporating Dynamics: A Method of Analysing Nineteenth-Century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통합적 역동성: 19세기 중국의 편입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

유성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정'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은 19세기 중국사회의 전례없는 변화들을 추적하는데 많은 이점들을 제공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연구들이 지금껏 소개되었다. 이를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자면, 1)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중국의 도시 (혹은 지방)의 관계를 다룬 연구 2)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청나라 (국가단위)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 3)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동아시아 지역 (중국 포함)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간추릴 수 있다.

이렇게 다양화된 접근은 한편으로 중국과 세계체계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접근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편협하고도 협소한 관점만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침투로 인해 변해버린 특정 중국의 도시 (혹은 지방)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동 (예) 은부족 사태)이나 도시-배후지 간 연관성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청나라 (국가단위) 사이의 관계를 다룬 일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 - 중국의 편입과정 동안 주요 외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고,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변화에 있어 편입과정은 얼마만큼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 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이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중국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용된 지역적 관점 (e.g., 세계지역)은 중국을 넘어 다른 동아시아 지역들과의 연계성, 공통점을 확인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중국 내부의 중요한 질적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기존의 편입연구들이 가지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연구자는 통합적 역동성을 제시했다. 통합적 역동성은 기존의 세계체계 방법론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방법론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기존 세계체계 방법론의 2가지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메 뉴얼 윌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 개념이다. 윌러스틴은 기존의 비교국가연구들이 가지는 약점 (: 국가의 비역사화 및 절대화)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세계 체계를 선보였다. 윌러스틴은 세계체계적 관점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성장·쇠퇴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세계체계라는 초국가적인 단위체들 (e.g., 자본주의 세계체계)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팽창해나가는지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방법론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러 세계체계 및 비교역사사회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전체론적 사고'와 '기능론적 관점' 때문이었다. 즉 세계체계라는 초국가적인 단위체에 집착한 나머지, 세계체계 내 하부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부단위들과 세계체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다. 나아가 그는 세계체계 속 하부단위들이 세계체계의 존속(혹은 팽창)을 위해 하나의 '기계부품'과도 움직인다고 바라봤는데, 이는 여러가지 역사적 사례들 (e.g., 국민국가체계가 정말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팽창에 큰 도움을 주었는가?)을 통해 반박되어지곤 했다.

이런 기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립 맥마이클은 통합적 비교 (incorporating comparison)을 제시했다. 맥마이클의 주장에 따르면, 윌러스틴은 너무도 견고한 ‘전체론적-기능론적’ 사고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전체 (the whole) 내 하부단위 (parts)들의 역할에 무관심했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맥마이클은 전체와 파트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각 파트들은 세계체계라는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부단위들이지만 (incorporating), 동시에 이들을 관계·비교시킴으로써 (comparison) 전체와 각 하부단위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는 바라봤다. 다시 말해, 그의 통합적 비교방식은 ‘전체와 하부단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맥마이클의 ‘통합적 비교’는 분명 윌러스틴의 ‘기능론적-전체론적’ 세계관을 어느정도 극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방법론 역시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하부단위’ (parts)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족한 관심이었다. 즉, 비록 전체와 하부단위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 맥마이클이 노력했지만, 전체에 속한 하부단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세계 체계적 관점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부단위들이 전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하부단위들은 오로지 전체와의 관계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부단위들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때도 있고, 나아가 전체 또한 하부단위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역동성으로 인해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하부단위들과 전체의 관계만큼, 하부단위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상대적으로 맥마이클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시하는 ‘통합적 역동성’은 하부단위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체계 방법론이다. 물론 내가 제시하는 ‘통합적 역동성’은 윌러스틴과 맥마이클의 방법론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기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윌러스틴과 맥마이클이 방법론 아이디어에 새로운 방법론을 보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통합적 역동성을 통해 어떻게 19세기 중국의 편입연구에서 나타난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가? 첫째, 중국의 편입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도시-배후지 간의 관계성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의 남부지역은 편입기간동안 상당부분 수출지향적 작물 (e.g., 생사, 차)을 생산·수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기존의 편입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항구도시들 (e.g., 상하이, 홍콩 등)의 전례없는 변화에만 관심을 가질 뿐, 상대적으로 도시-배후지가 어떻게 새롭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적 역동성 - 하부단위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 은 이런 도시와 배후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세계체계의 영향력 하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통합적 역동성을 통해 우리는 중국편입기간 동안 청정부가 시도한 외교를 보다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 편입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충격, 중국의 대응’이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서구를 ‘능동적’ 중국을 ‘수동적’ 존재로 가정하고, 중국의 편입을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면서, 청나라 정부는 자본주의 세계체계로부터 습득한 외교적 기술 및 관계전략을 다른 주변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서 써먹은 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청상 민수륙장정’ (1882)이다.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조선과 근대적인 형태의 국가간 조약을 조선과 맺으려 했다. (이를 위해 조선과의 관계를 ‘속방’에서 ‘속국’개념으로 등치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편입기간동안 청정부의 국가간 관계를 세분화시키는데에도 통합적 역동성은 유용하다.

셋째, 통합적 역동성을 통해 중국의 편입과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세력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중국 편입연구들은 아편전쟁을 전후로 중국에 침입해 들어온 주요 유럽세력들 (영국, 프랑스)에만 관심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태평양 세력이라 지칭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의 개입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유럽세력들보다 태평양 세력들이 중국의 편입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럽세력과 태평양세력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세력들과 태평양세력들 간의 관계 또한 중국의 편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하기에, 이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역동성’은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의료/건강

의료/건강

사회 : 심재만 (고려대학교)

1. Transitions in Adherence Trajectories from Intervention to Maintenance of a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발표 :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2. Family and Work Pathways and Their Association to Health for Women: The Case of Korea
발표 : 김여진 (강원대학교), 우혜영 (Portland State University), 한신원 (Harvard University)
3. 삶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와 건강
발표 :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임동균 (서울대학교), 강현욱 (서울시립대학교), 박현아 (서울대학교), 유찬기 (서울대학교), 이다예 (서울시립대학교)
4. 일상 경험으로서의 미묘한 차별과 대응: 이주배경청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송영호 (동국대학교), 최영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Transitions in Adherence Trajectories from Intervention to Maintenance of a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Sung, Pildoo^a, June May-Ling Lee^a, Kok Yang Tana, Rahul Malhotra^{a,b}, Angelique Chan^{a,b}
^a Centre for Ageing Research and Education (CARE),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b Health Services and Systems Research (HSSR),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Abstract

Backgrou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hinges on self-maintenance after active intervention. We investigate if adherence to intervention is related to adherence to self-maintenance, and whether exercise self-efficacy, a modifiable belief that one can exercise despite given constraints and impediments, is associated with continued exercise.

Methods

We use data on 143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a 12-week, group-based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followed by a 6-month maintenance phase, in 2018-2019. Sequential process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estimates distinct adherence trajectories during the active intervention and the maintenance phases and their transition patterns. Multivariable regression examines the association of baseline and change in self-efficacy during the active intervention with transitions in adherence trajectories.

Results

We identify four types of adherence trajectories - high, moderate, low, and non-adherence - in the intervention phase and three types of adherence trajectories - high, re-, and low - in the maintenance phase. Four transition patterns from intervention to maintenance phases are then distinguished: high-high, low-low, low-high, and high-low. Baseline and increase in exercise self-efficacy during the active intervention phas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taining high adherence at both phases.

Discussion

The findings capture heterogeneity in exercise adherence patterns within and across the activ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phases of the falls prevention exercise program for older adults. In so doing, the importance of exercise self-efficacy in continued exercise is highlighted.

Family and Work Pathways and Their Association to Health for Women: The Case of Korea

김여진 (강원대학교), 우혜영 (Portland State University), 한신원 (Harvard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work for women's health has been documented in a number of studies, and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marriage, parenthood, and employment are associated with health are relatively well known. However, existing studies tend to overlook that decisions around marriage, having childre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often conditioned by one another. As results, the influences of family and work statuses on health conditions are captured either as a net effect with the other conditions are adjusted or as a variation using interaction terms. While these estimations are informative, they are limited in fully understanding individual's health over the life course associated with family and work. Family and work statuses are not static, and when a change in one domain happens, it is often driven by changes in the other domain. Additionally, changes in family and work lead to consequences, which may result in a long term influence on health.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we attempt to discern patterns in pathways of family and work among women whose decisions towards marriage, childre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s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social constraints and gender norms. To achieve this goal we employ latent class analysis (LCA), a person-centered dimensionality reduction method. Second, once we identify distinct pathways, we examine if and how women experience their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their marital and parental statuses, and work over time. For this study, we use data from a longitudinal survey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 women in Korea, not only to consider complex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of family roles (marriage, fertility, and employment) over time, but also to examine the associations of family pathways with health in later life.

By utilizing the multigroup LCA with data from the 2007-2018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we identified eight classes as pathways of family and work among women in Korea. For unmarried women in the baseline survey, 4 classes were distinctive in terms of their family formation pathways: no marriage, no children, and some work (15.4%), delayed marriage and children with steady employment (30.3%), marriage, children, and interrupted work (21.3%), and no marriage, no children, and continued work (33.3%). For married women in the baseline survey, 4 types of family formation pathway

were identified: married, no children, and some work (5.3%), married working mother (27%), staying home mother (41.2%), and married mother going back to work (26.5%).

Next, we found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s well as family values appear strong in predicting the pathways: Having a 4-year college degree seems responsible for delayed marriage or no marriage and traditional attitudes for marriage and childre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mily formation behaviors. Lastly, the membership of the classes is associated with later health outcome as well: Women who are not married, do not have children, and are not active in the labor force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health. This may imply that no role acquisition (“non-normative pathway”) may increase the risk of exposing to stressful situation, especially in a society where “normative” family pathways are highly expected like Korea.

일상 경험으로서의 미묘한 차별과 대응: 이주배경청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영호 (동국대학교), 최영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회 이주배경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대응을 미묘한 차별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특히 차별의 교차성 관점에서 ‘이주배경’과 ‘청년’으로서 경험하는 주류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적 낙인이 어떻게 발현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배경청년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상황을 대처(copying response)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11명의 이주배경 청년의 심층 면접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차별보다 애매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모욕이나 무시를 누적적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행위는 차별이라고도 꼭 짚어서 말하기 애매하고, 잘 알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자신의 이주배경 자체가 사회적 차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주배경 정체성이 드러내지 않도록 ‘연기’(acting)하거나 한국인으로 보이게 하는 ‘통과(passing)’, 이주배경에 관한 정보를 은폐(covering)하는 소극적인 정체성 관리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차별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그 상황을 회피(quitting), 침묵(silence)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와 상급자, 또는 둘 모두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대응은 드물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미묘한 차별과 마주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상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그 신호를 서로 인지한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인 “예의바른 무관심”(civil inattention)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농촌

농촌

사회 : 김원동 (강원대학교)

1. 농촌사회의 수직적 자본: 창업농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발표 : 정하나 (서강대학교)
토론 : 조옥라 (서강대학교)
2. 한국인의 먹거리 신뢰: 10년의 변화와 영향요인
발표 : 김흥주, 이현진, 안윤숙 (원광대학교)
토론 :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3. 소비자의 먹거리 대안 인식과 생산자 신뢰: 10년의 변화
발표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윤병선 (건국대학교), 이효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 : 이창한 (지역재단)
4. 농업농촌농민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발표 : 이해진 (충북대학교), 김철규 (고려대학교)
토론 : 황영모 (전북연구원)

농촌사회의 수직적 자본: 창업농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하나 (서강대학교)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는 농촌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된 수평적 사회자본을 강조하거나 마을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수평적인 지역 사회의 사회자본보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사회자본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에서 부모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자본에 따라 농촌에 진입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배제는 매우 상이하였다. 먼저 부모의 사회자본은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승계농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자본으로 인해 농촌 지역 사회에 진입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반면 새로운 지역에서 농업을 시작하는 창업농 청년들은 마을 구성원들의 텃세로 인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부모의 사회자본 영향이 부족한 창업농 청년들은 마을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농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승계농 청년과 달리 창업농 청년들은 정보 소외와 공정성이 담보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부모의 사회자본의 영향에 따라 농촌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자본은 승계농 청년에게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하였고 창업농 청년에게는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만의 부모의 사회자본은 청년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서로 다른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농촌 지역 사회에서 창업농 청년들의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수평적 사회자본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부모의 사회자본을 지니고 농촌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재생산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업농 청년들의 생존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농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자본으로 인해 경험하는 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에서 청년들이, 특히 높은 진입장벽을 겪는 창업농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생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농촌, 귀농, 사회자본, 승계농, 창업농, 청년농업인, 부모의 사회자본, 폐쇄성

한국인의 먹거리 신뢰: 10년의 변화와 영향요인

김흥주, 이현진, 안윤숙 (원광대학교)

1. 이론적 논의

먹거리 신뢰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 보장, 정책, 기관, 생산, 유통, 시장, 정보 등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소비, 농(農)과 식(食)이 분리된 근대의 먹거리체계에서 소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생산했는지를 알 수 없는 먹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알 수 없음'은 소비자에게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은 정의상 위협과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Furedi, 2004: 138-139).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먹거리 신뢰구조는 매우 다층적이다. 대상을 보면 정보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등이 있고, 유형으로 보면 구조적(제도적) 신뢰와 관계적 신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신뢰구조와 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먹거리 불안과 위협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위협, 불안, 공포, 파동, 운동의 동학(dynamics)과 먹거리 정치의 메커니즘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 신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모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낮은 신뢰(불신)의 원인과 그 변인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둘째, 신뢰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파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전자는 결과로서의 신뢰, 후자는 원인으로서의 신뢰를 설명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는 원인으로서의 신뢰형성의 과정과 변인을 설명하려 했다. 이를 테면 신뢰와 위험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신뢰가 위험 인식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lynn, Burns, and Slovic, 1992; Siegrist, 2000; Pennings et al. 2003).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뢰구조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먹거리 신뢰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뢰의 구조적 특징과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이 연구의 경험 자료는 2011년 7월, 2015년 3월, 2021년 8월 세 번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30명(2021년은 1,000명)을 일대일 대인면접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 층화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으로 가구를 추출하고, 지역과 성, 연령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방식으로 개인을 추출하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6\%p$ 이다.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조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먹거리 불안

의식이 팽배했던 2011년 이후 5년 마다 전(全)국민 대상 먹거리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은 먹거리 신뢰의 수준과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세 번의 조사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에 있어서 전국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주시할 만하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읍·면 지역을 포함하였으며(전체 표본의 15.0%),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인구비례에 맞춰 포함하고 있다.

3. 분석

생산, 소비, 유통, 가공 등 먹거리 관련 항목에 대해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2011년에 비해 2021년의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항목 평균 신뢰 점수가 2011년에는 3.11점이었지만 2015년에는 3.35점으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3.51점으로 높아졌다. 둘째, 2011년에 비해 2021년 신뢰 수준을 보면 식품행정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0.51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대규모 식품가공 국내 식품업체가 0.48점, 대형마트가 0.47점이 증가해 구조적 신뢰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생활협동조합이나 농민시장, 직판장 등에 관한 신뢰가 3.70점으로 가장 높아 관계적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규모 식품 가공 해외 식품업체에 대한 신뢰가 2.92점으로 가장 낮아 우리 국민의 글로벌 먹거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농촌농민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이해진 (충북대학교), 김철규 (고려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제설정으로 농과 사회의 관계 회복과 농과 시민 사회의 연대를 의미하는 농의 사회화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농의 사회화는 농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정과 사회적 지지의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가 농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미화했다. 이러한 농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기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개념을 대체하여 농의 사회적 가치를 개념화했다.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 농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농의 사회적 가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국민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농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농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였다. 특히, 농과 사회의 관계를 매개하는 먹거리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농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 시민권 의식과 행동을 중심으로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먹거리 시민권의 행동으로 연결된 먹거리 시민일수록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요리, 채식주의와 같은 먹거리 행동이나 자연 친화적인 대안가치를 지닌 시민일수록 농의 사회적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먹거리를 매개로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먹거리 시민권이 농의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는 시민사회의 토대로서 농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고 농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건임을 밝혀냈다. 농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주의를 넘어서 농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먹거리 시민권을 지닌 먹거리 시민을 확대하는 사회운동과 정책들이 요구된다.

1. 문제설정: 농의 사회화

지금까지 농업·농촌·농민(이하 농農으로 표현)의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이거나 산업으로서의 농업이나 농촌 지역의 문제로만 간주되었다. 농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위기에 직면한다. 농은 먹거리공급과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다양성,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의 보전 등 사회 전체에 필요한 공동자원과 공공재를 생산하고 유지한다. 최근 들어 농의 위기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지역위기, 먹거리위기와 맞물려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농의 문제는 과연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농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란 질문에 부쳐서 이제 농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연관 짓는 농의 문제의 사회화가 필요하다(이해진, 2018).

그러나, 농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잘 모른다. 농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가 아닌 그들만의 문제로만 간주하게 된 것은 농과 (시민)사회의 단절 때문이다. 농촌과 도시의 단절, 생산과 소비의 절단은 농업·농촌문제 원인이자 효과로서 결국 농과 사회의 분절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과 사회의 단절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농과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구조화한다. 농촌은 도시에 먹거리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한다. 농업은 발전국가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해 동원되고 통제되면서 세계화된 자유무역 시장의 비교우위를 위해 희생해왔다. 농민은 농업과 농촌을 지탱하며 땅과 자연을 지켜온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시민으로 간주되고 자신들의 몫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은 여전히 물가 인상의 주범을 애꿎은 농산물 가격으로 몰아간다.

농에 대한 무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국가와 시장의 착취 구조 아래서 지금까지 농업 농촌 문제를 농과 경제, 농과 정책의 관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일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적 농업과 대표되지 않은 농민을 수탈하면서 자본축적을 이루어왔다. 시장과 농, 국가와 농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폭력적으로 농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농의 구조 속에서¹⁾ 농의 문제를 경제와 국가 정책으로만 다루다보니 시민들도 농을 정책 지원의 시혜 대상으로 보거나 시장경쟁을 위한 불가피한 도구로만 여긴다. 농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농의 현실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 내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의 문제를 경제와 정책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농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와 시민들은 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문제들을 바꿔서 농과 사회의 관계로 농업농촌문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과 사회의 단절이 원인이기 때문에 농과 사회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농의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의 문제를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을 포함한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동안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논의 구조가 농과 경제, 농과 정책의 틀에만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서 이제 농과 한국사회, 농과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농과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과 실천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가 농에게 생산주의의 시장경제의 논리와 성장주의 사회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희생이나 도구적 수단이 되기를 강요했다면, 이제 농이 사회를 대상으로 농의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나아가 농과 사회의 관계 설정은 호혜적이고 대칭적이어야 한다. 농촌문제의 대책이란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문제의 지속불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농의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틀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농의 사회적가치를 공론화하고 시민과의 연대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이 사회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의 상상력을 사회에 제공하고 사회가 농의 가치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의 문제가 아니라 농과 사회의 공통적인 위기이고 이를 운명공동체로서 시민권을 기반으로 농과 시민사회의 협력과 농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설정이 요구된다.

농촌사회학은 농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농과 사회에 대한 연구는 농촌사회학의 본령 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농촌사회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새로운 문제설정은 농의 사회화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농의 사회화란 농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고 농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농의 위기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사회화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중심으로 농과

1) 자본주의 농업체제에서 시장과 농의 관계는 자본주의 산업화와 세계시장의 경쟁 구조 하에서 재벌체제의 자본 집중과 독점의 희생양으로 수탈되었고, 국가와 농의 관계는 발전주의 국가의 성장주의 전략의 도구로서 억압당하고 농정의 실패를 무마하는 지원 정책의 시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사회의 연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또한, 농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시민사회와의 연대에서 찾는 것이고,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을 농의 가치에서 얻는 것이다. 농의 사회화는 이중의 과정을 함축한다. 한편으로 농이 사회를 향해 농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침투시켜 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가 농을 향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농의 가치로부터 찾아서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다. 시민사회가 농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농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의 대안을 모색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농과 사회의 단절을 넘어서 농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농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농과 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농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생산자의 사회적 연대, 계급적 유대의 복원과 계급적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김철규, 2018).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통각각을 통해 시민들은 농의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공통의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농과 시민, 농과 사회의 연대를 회복하는 보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촛불집회 이후의 협법 개정안 논의, 공익형 직불제, 사회적 농업과 같은 농의 주요 이슈들은 농의 사회적 가치라는 문제설정의 중요성과 이러한 경향들이 쟁점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17년 촛불집회 이후 개헌 논의 국면에서 농업 농촌 진영은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으려는 적극적인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농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농민 공익형 직불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사회적 농업도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김태연, 2018). 국가를 상대로 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정부와 정책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의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가치 담론이 드러낸 국가 편향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를 넘어서 농의 사회적 가치에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생, 평등, 기본권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공동체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권 정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의 사회적 가치 개념의 정립과 역할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분석이 요구된다. 농의 사회적 가치 담론과 연구의 필요성과 농의 사회적 가치 개념의 핵심적 구성요소, 그것의 사회 구조적 조건은 바로 한국 자본주의 사회와 문명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농과 사회의 관계는 지속가능성의 위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농의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이고, 한국의 지속가능성도 위기(이재열, 2019: 2)라는 점에서 농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서로 연결된다. 농과 사회의 위기는 사회적 생태적 지속불가능성, 불평등, 부정의라는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농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정의,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먹거리 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농연대와 농과 사회의 새로운 연대의 기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은 한국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작업이다(김철규, 2018). 농과 사회의 관계에서 농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을 농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과 사회의 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의 척도로서 시민들의 농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을 사용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농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누가 농을 자신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시민 대중들이 농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농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농의 사회화의 조건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와 시민권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먹거리이다. 농과 사회의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농과 식의 관계를 복원하고 식과 사회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먹거리를 매개로 농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과 식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먹거리야말로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고리이다(김철규, 2018). 그러나 실제 시민 대중들의 삶에서 농과 식의 관계를 연결짓는 사고방식은 매우 낮설다. 먹방과 음식에 열광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것이 농업 농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고 하지 않는다. 먹거리가 허구적인 상품이 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자본주의의 쾌락주의적 소비자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먹거리는 농촌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을 쇠락하는 산업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일상 속에서 먹거리의 문제와 욕망과 더불어 살아간다.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대하는 데 먹거리만큼 좋은 수단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권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를 농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이 자신들의 권리로 요구하고 책임져야 할 보편적 가치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시민권 개념과 조응한다. 농의 사회적 가치를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 지원의 근거나 농민과 농촌주민의 이익만을 위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다수의 국민들의 공익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권리들을 가진 권리의 실행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농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시민의식이고 시민역량이라는 점에서 시민권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민권은 농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시민사회의 핵심 요소인 시민권이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앞서 논의한 농의 사회화란 문제들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요인을 종합해서 본 연구는 먹거리 시민권과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농과 식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식품의 지속가능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농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농시민정치가 필요하다. 먹거리를 매개로 농의 가치를 체득한 먹거리 시민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농과 시민사회의 연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강조하는 먹거리 시민권이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는 농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먹거리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농업농촌농민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서 농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농의 문제와 대응을 사회화하고 나아가 사회가 농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을 찾는 사회화 방식으로 농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목적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누가 농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지,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 시민권이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경험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의 사회적 가치 개념의 발명과 먹거리 시민권 개념 연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농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농시민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실천 방안들을 제안할 것이다. 농의 사회적 가치 담론과 연구의 함의로서 농의 사회적 가치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불평등과 성장주의, 신자유주의, 능력주의의 폐단으로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의 사회적 가치의 사회화는 농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구축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농시민정치와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환경

환경

사회 : 홍덕화 (충북대학교)

1. 한국 청소년 기후변화 운동의 함의: 청소년 권리담론의 참신성과 녹색합리주의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발표 : 최규연 (중앙대학교)
토론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2. 환경 갈등 해결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
발표 : 김미숙 (전북대학교)
토론 :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 청소년 기후변화 운동의 함의: 청소년 권리담론의 참신성과 녹색합리주의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최규연 (중앙대학교)

2018년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Skolstrejk för klimatet”) 피켓을 들고 시작한 1인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217개국(2021년 기준)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이 기후변화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각인하였고,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던 유럽 환경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였다. 그 결과 여러 유럽 국가가 기후 정책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채택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결석시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청소년 기후행동(Youth for Climate Action)’이 결성되었고, 2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참여한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지난 3년 동안 축적한 경험은 기후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국 청소년 집단이 가지는 권리의 윤곽을 드러냈으며, 이들의 요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논제와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그 논의는 한국 환경운동의 지형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 지금까지 정착된 한국 환경운동 담론의 범주에서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분류되며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가? 본고는 청소년 기후 운동이 산출한 담론과 조직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의 역사에서 축적된 다양한 논의로 채워져 있다. 최초의 환경운동은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며 산업화와 개발국가에 대한 체제변혁적 비판 담론을 생성했다. 1990년대 이후 환경단체는 지지기반이 확장되고 내외적 제도화를 수행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시민운동으로 진화해 갔다. 이들의 담론은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녹색 낭만주의와 가용한 기술 및 경제적 기제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을 도모하는 녹색 합리주의로 구별된다. 환경단체가 정책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부와 기업의 환경 관련 지식이 개선되면서, 환경운동조직은 전문성 향상을 통해 녹색 합리주의 담론을 고도화하였고, 그 같은 전문화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일단 시민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캠페인을 통한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200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담론은 산업화에 대한 성찰을 넘어서 친환경적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담론으로 확장된다. 환경정의 혹은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그것이다. 이로써 환경운동의 담론은 단순한 개발 담론 구성체와의 경쟁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관계와 이들 간 자원 배분의 원칙을 규정하는 설명체계로 진화해왔다.

이와 같은 환경운동 담론은 산업주의와 개발주의 역사를 반성하는 성찰담론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경로에 대한 대안담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둘러싼 권리와 정의에 대한 담론을 포함한다. 환경운동조직은 장기적 의제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개별 환경 사건에 대한 저항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집단의 권리담론과 보상적·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환경운동의 담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환경운동의 담론이 급진적인지 아닌지를 논할 때는 체제 비판의 유무를 주로 기준으로 삼는다. 즉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나 사회 구조 개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급진적 운동으로 여겨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연대했던 환경운동 세력만이 급진적 운동담론을 추구해왔으며 이후로는 온건한 담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더 강력한 운동 담론을 모색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권리담론과 녹색합리주의의 급진화가 주요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당사자’ 논리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기후변화의 (미래) 피해자 집단으로 현시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에서 피해자 집단은 불분명했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소도서국’ 정도가 구체적인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청소년 활동자들은 그들이 기후변화에 더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스스로를 기후변화 피해의 당사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피해자-가해자 의미쌍에 따라 기성세대를 가해자 세대로 규정하는 적대적 관계설정에는 회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세대간 정의 문제’로 심화되기 보다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대한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의 권리담론에 집중된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권리담론은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인권 보장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다. 이들의 기후변화 운동 경험담은 청소년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학교, 제도정치, 시민사회의 반응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에서 ‘청소년’이 지구온난화라는 전면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참여도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는 집단’임을 드러낸다. 제도권 교육은 청소년을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한국의 운동정치와 제도정치는 강한 연령주의의 시각으로 청소년 집단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청소년 기후운동의 담론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는 현실에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임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은 기존 환경운동이 제시한 환경합리주의적 대안(가량, 석탄산업 투자 제한이나 탈석탄 정책)의 즉각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정책 기제를 실천에 옮길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후변화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없어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그 대안의 적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가들은 선언적 환경정책의 기만성에 집중한다. 기후변화 정책의 외연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근거로 정치체제의 역량과 진정성을 비판한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 기후변화가 심화된 것은 지구 온난화가 인지되고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즉각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제도정치 의사결정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온건한 녹색 합리주의적 대안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면 전혀 급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체제 내 권력구조의 급속한 전환과 이해관계의 즉각적 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녹색 합리주의를 과정적 차원에서 급진화한다.

이와 같은 특징에 비추어 보아, 청소년 기후변화 운동은 한국 환경운동에서 새로운 세력과 담론을 생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이 제도교육의 억압 구조를 기후변화 대응 문제로 끌고 들어온 것은 담론적 참신성을 증명한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즉각적 행동은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와 과정을 중심으로 체제 비판을 진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급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기후운동의 담론은 특징이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한국 환경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 갈등 해결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

김미숙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환경갈등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과정 및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민 활동 및 보상소송, 마을 환경 복원, 사회적 관심 및 파장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이와 유사한 주민과 유해공장 간의 환경 갈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인과성 이후의 절차 및 주민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대상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이다. 이 마을 주변으로 2001년부터 비료공장이 설립·가동하면서 2017년까지 다양한 환경변화와 주민 건강피해가 있었다. 특히 암 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였으며,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언론인, 법률가 등과 함께 역학적 관련성 조사를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 최종 발표회에서 그 인과성을 인정하는 발표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 과정과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갈등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성 질환 중 비특이성 질환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질환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역학적 관련성을 조사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마을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회, 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시하였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의 작동이 잘 이루어졌다. 셋째, 유해물질로 밝혀진 연초박과 관련하여 담배 피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연초박의 비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피해 원인과 연관된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및 배상에 참여하고 있다. 여섯째, 일반 시민들은 주거지 주변 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7일(금요일) | 플레너리세션1



플레너리세션1: 사회적 공감과 미래교육

플레너리세션1:
사회적 공감과 미래교육

사회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기조발제: 사회적 공감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의 길을 찾다

발표 :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종합토론 :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장원호 (한국사회학회 회장)

홍창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사범대학장)

이중현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신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Univ. of Warwick 사회학박사)

박석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



이론1

이론1

사회 : 홍찬숙 (서울대학교)

1. 도덕 경제, 국가, 사회운동: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저항 정치의 이론화
발표 : 강민형 (연세대학교)
토론 : 임운택 (계명대학교)
2.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어디도 아닌 곳'을 향하여: 후기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구상에 대한 논의
발표 : 오선진 (도쿄대학교)
토론 : 정일준 (고려대학교)
3.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의의와 한계: 미드-블루머 논쟁과 민속방법론적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 진세환 (서강대학교)
토론 : 이시윤 (공주대학교)

도덕 경제, 국가, 사회운동: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저항 정치의 이론화*

강민형 (연세대학교)

도덕 경제와 대항운동 개념은 시장 근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학 이론 연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칼 폴라니, 에드워드 톰슨, 제임스 스콧의 도덕 경제 이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대항운동 이론의 현재성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도덕 경제 이론의 핵심은 민중 저항(아래로부터의 대항운동)과 국가 개입(위로부터의 대항운동) 사이의 상호작용이 시장화와 상품화에 맞선 대항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래로부터의 대항운동은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20세기 중반 규제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쇠퇴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항운동의 공간적 규모가 지역 수준에서 전국적 규모로 성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 노동권의 축소와 사회적 시민권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비제도적이고 비규범적인 집단 저항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21세기 초반 아래로부터의 대항운동은 복지의 팽창과 같은 위로부터의 대항운동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도덕 경제 이론이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민중 저항과 국가 개입, 계급 투쟁과 계급 타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함을 강조한다.

주요 단어: 도덕 경제, 민중 저항, 대항운동, 신자유주의, 칼 폴라니, 에드워드 톰슨, 제임스 스콧

* 이 연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의 일환인 연세대학교 '위험사회와 탈진실 시대 성찰적 사회학자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음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어디도 아닌 곳’을 향하여: 후기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구상에 대한 논의

오선진 (도쿄대학교)

From ‘elsewhere’ to ‘no place (non-lieu)’: An integrative exposition regarding Utopia and Dystopia in the late thoughts of Z. Bauman

이 발표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후기이론에 있어서 형성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구상을 대상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에 각각 부여된 의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비판이론적인 의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자아에 대한 긍정’,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며 어느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이, 때로는 정신안정제로서, 때로는 풀리지않는 수수께끼로서 자주 목격된다. 2000년 이후 바우만의 유동하는 근대론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슬로건에 둘러싸여 정치 경제적인 자산으로서 비대화한 자기동일성의 병리다. 진학, 취직, 이직, 실직의 이야기는 모두 자기자신에 대한 투자와 분석에 연관지어지고, 언제 어디서 불운한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이 혼자 힘으로 짊어져야하는 책임은 여느때보다 막중하다. 유동하는 근대의 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생존가능성” (Butler [1993]2011=2021) 을 위해— 더욱 더 ‘나’를 식별가능한 무언가로 만들고, ‘나’를 무기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동일화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 있어서도 자기동일성은 완전하게는 달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정하고 영원히 불완전한 지위에 있다는 자기동일성의 진실”을 직시하게 된다. 바우만에 의하면, 개인화가 진행되는 유동적 근대에 있어서 이러한 진실에 직면하는 기회는 근대의 서막에 비해 월등히 많이 주어지고 있다. 유동적 근대의 개인에게 있어, 자기동일성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대하며, 가장 깊이 느껴지는,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양가성의 현현(顯現)” 인 것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Bauman 2004: 32=2007: 63).

그런데 실질적인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레트로토피아』(Bauman 2017=2018)에서 바우만은 그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사회의 유동성에 기인하는 자기동일성의 불안과 자기동일성에 대한 고집이라는 주제를, 과거와의 관계를 통해 풀어가려고 한다.

왜 과거지향성은 개인화 하는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여겨져온 자기동일성을 둘러싼 강한 불안과 집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가?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바우만의 ‘결코 도래하지 않는 미래’로서의 유토피아와 ‘레트로토피아’로서의 디스토피아는, 지금까지 행해져온 연구에 있어서는 각각 ‘미래 지향적 유토피아’와 ‘과거 지향적 디스토피아’ 로 인상 시워져 왔다.

그러나, 바우만의 유토피아론과 디스토피아론에서 미래와 과거는 현재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로서 지정되는 형식상의 구분도 아니며, 진취적인 태도와 퇴행성의 단순 명쾌한 대비와도 상이한 개념이다.

이 점에 의거하여, 이 발표에서는 <타자를 위하여>(being for the Other) 와의 관계를 통해 유토피아론에 있어서의 미래의 의미를 검토하고, <무>(nothingness, le néant)가 되는 자기동일성(identity)을 통하여 바우만 디스토피아론에서 과거가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상호적 연관 속에서 바우만의 미래는 자기동일적인 '나' 라고하는 세계내적인 사태를 수반하면서도 '나'의 영위 그 자체로서 타자를 향해 열린다는 의미에서 자기동일성에 내재한 양가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볼 수 있다. 이 발표는, 이러한 미래 개념에 대한 구상이 어떠한 이론적 수준을 밝아 바우만이 유토피아의 핵심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하여 노스탤지어, 부족주의의 재림, 자궁에의 회귀 현상의 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가 되는 '나'라는 시점이 가지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문 중 인용 문헌

- Butler, Judith, [1993]2011, *Bodies That Matter (Routledge Classics)*, Routledge. (= 佐藤嘉幸監
訳, 2021, 『問題=物質となる身体』以文社.)
- , 2004, *Identity: Conversations with Benedetto Vecchi*, Cambridge: Polity Press. (=伊
藤茂訳, 2007, 『アイデンティティ』日本経済評論社.)
- , 2017, *Retrotopia*, Cambridge: Polity Press.(= 정일준역, 2018, 『레트로토피아: 실패한 낙
원의 귀환』북이십일.)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의의와 한계: 미드-블루머 논쟁과 민속방법론적 비판을 중심으로

진세환 (서강대학교)

블루머는 당대의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관행을 비판하며, 대안적인 경험 과학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제시한다. 그는 미드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인식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과학적 연구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 현상은 인간 행위, 그리고 그 행위가 지니는 의미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인간의 행위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결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법칙에도 언제나 예외는 존재한다 (Garfinkel, 1979: 2). 기존에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던 전통적 실재론과 실증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인간 행위가 지니는 상황-맥락적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블루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이러한 지점을 비판한다. 다만,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관념론의 영역에도 빠지지 않는다. 상황-맥락적인 행위자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유아론적 관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다. 블루머는 이러한 지점에서 실재론과 관념론의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는 실용주의의 철학적 관점을 사회학의 학문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대안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경험세계가 저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 (실재론의 입장처럼) 영원불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재가 영원불변하지 않다는 것이, (관념론의 입장처럼) 외부적인—즉 사회적인—기준이 부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점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공간을 구성한다면, 그들은 실재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는 단일한 무언가가 아니다. 실재는 집단마다, 그리고 각각의 시대마다 다르게 존재하며, 동시에 그 내부의 성원들에게는 “저 밖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블루머의 업적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있다. 블루머의 이론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기존에는 법칙의 수동적인 꼭두각시였던—혹은 그저 요인들에 ‘반응하는 자(reactor)’들이었던—행위자들은, 이제 제각기 다른 실재를 영유하며 해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위를 실천하는 말 그대로의 ‘행위하는 자(actor)’가 된 것이다.

이러한 블루머의 입장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 미드-블루머 논쟁은 블루머를 미드의 계보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획을 부정하려는 이들의 주된 비판의 장이었다. 미드-블루머 논쟁은 우리로 하여금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것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맥페일과 렉스룻은 블루머가 영원불변하는 실재를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미드를 배반하고 모순이 존재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장했다고 비판한다. 블루머는 이에 반박하며 오히려 그들이 미드를 곡해함으로써 자신들의 방법론을 지지하고자 했음을 지적한다. 사실상, 그들이 주장한 사회적 행동주의야말로 실증주의적 입장임을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비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세 가지 비판 중 마지막 비판은 매우 큰 단초를 던져준다.

마지막 비판이자 가장 중요한 비판인 연구자가 행위자에 대해 인식론적 우월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다. 맥페일과 렉스룻은 스스로가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이

비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본 논고는 이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이 질문이야말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역린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행위자에 대해 인식론적 우월성을 지닌다는 것은, 즉, 행위자의 실재에 대해 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블루머 그 자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에서 제시한 바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실재는 그들의 실천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행위자의 실천을 그들 외부에서 강요된 이론적 틀에 집어넣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블루머이다.

그의 전제에 따르면, 행위자는 실천을 통해 의미를 제안, 확인, 유지, 보수, 변화시키며 상호작용을 수행하여 공동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렇게 서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의미는 그 자체로 실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간은 행위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재는 그에게 의미를 지니는 것들로 구성된 것이며, 블루머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행위자는 “자신이 구성한” 실재 내부에 그가 알 수 없는 원리가 존재하고, 그는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에 따라 자가당착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민속방법론의 논의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 민속방법론은 ‘실질적인 의미’, 즉 상황-맥락 속에서 행위자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미 질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그들의 방법을 밝히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민속방법론에 있어서 행위자의 상황-맥락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의 실천은 “지시성(indexicality)”을 그 특성으로 지니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그 상황-맥락 속에서만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상황-맥락 밖에서 사후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스스로 잘 조직화된 모습으로 성취해낸 질서에 대해 다시금 이론가의 언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민속방법론이 이러한 블루머의 모순에 대한, 그리고 실증주의적 관점들에 대한 완벽한 처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지점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들 또한 “급진적 성찰성”에 대한 논쟁을 통해 자신들 또한 이론가의 언어로 행위자의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지점에서 마찬가지로의 비판에 놓이기 때문이다(Kim, 1999; 2005: 53-97).

결론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본 논고의 비판이 그 의의를 저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존에는 무시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실제 행위자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에서의 의미들을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와 숨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론적 관점이다. 기존의 이론들이 구조와 문화, 그리고 변수들을 통해 행위자를 재단하고 꼭두각시처럼 만들었다면, 블루머는 그러한 행위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을 전면에 나서 피력한 사회학자였다. 그리고 후대의 상호작용론 분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논의 그 자체도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미에 대한 존중이, 행위자의 상황-맥락적 의미를 포착해내거나 재현해낼 수 있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블루머의 전제는 행위자가 일상적인 실천에 있어서 행하는 바를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려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재현’해내고자 하는 시도를 수행하는 것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제로 인해 그 모순을 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결론적으로 모순을 안게 되었지만, 그가 이뤄낸 업적, 즉 행위자의 손 끝, 즉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현상의 모습을 그려낸 그 업적이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블루머,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드-블루머 논쟁, 이론적 정합성, 민속방법론, 인식론적 단절, 이론적 성찰성



문화1

문화1

사회 : 김은정 (동덕여자대학교)

1. N-잡러 시대, 사회초년생의 일과 여가 의미
발표 : 이현서 (아주대학교)
토론 : 윤명희 (송실대학교)
2. 죽음의례의 문화적 기억과 정동의 배치
발표 : 서경원 (전북대학교)
토론 : 한성훈 (연세대학교)
3. 코로나 이후 여가생활의 변화와 우울: 세대별, 혼인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 신아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성연주 (서울대학교)

N-잡러 시대, 사회초년생의 일과 여가 의미

이현서 (아주대학교)

이 연구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갓 졸업하여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자 15명을 대상으로 12-18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여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찰한 생애사적 접근의 현상학적 연구이다.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주목할 사항이 나타났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대학시절의 일-여가 관계 인식을 보면 ‘동시대 일-여가 관계’와 ‘생애과정 일-여가 관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시절의 일-여가 관계가 당시에 전공학과 활동(전공공부)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정서적 안정감, 성취감, 사회적 유대감을 여가생활을 통해 충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 일-여가 “대립(opposition)(Parker, 1965)” 관계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대학시절 여가생활이 졸업 후에 구직활동과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긍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생애과정 일-여가 관계에서 보면 일-여가 “촉진(facilitation)(Liang, 2018)” 관계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1차 면접에서 직장인으로서 현재 생활의 일-여가 관계를 대립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2차 면접 때는 일-여가 촉진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면접참여자들이 직장생활 경험이 축적되면서 ‘여가’를 단순히 일에 대한 대립 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여가’가 현재 직장생활에서 얻는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로 여기는 인식이 발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1개의 직장 생활을 근간으로 발전한 전통적인 일-여가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여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가활동을 일(노동활동)과 다르게 무목적의 재미 추구를 위한 놀이 활동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을 재미와 잠재적 경제적 이익추구 활동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생애과정의 일-여가 관계’를 촉진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대학시절에 전공공부, 취업준비 등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겼던 여가생활이 졸업 후에 직장생활이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현재 직장인으로서 여가생활을 일-여가 대립 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촉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여가활동을 현재 직업 외에 추가로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게 된다.

죽음의례의 문화적 기억과 정동의 배치

서경원 (전북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죽음과 의례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죽음 기억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의례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여, 그 속에서 생성되는 정동의 배치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전쟁으로부터 발생한 죽음이 어떤 특정한 인식의 기반 속에서 의미화되는지, 그 의미 구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의례를 작동시키는 정동적 기반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안동 지역의 두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죽음의례의 전통을 살펴본 결과, 죽음의례 구조는 일회적으로 수행되는 상장례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제례로 분화·작용하여, 죽음에서 비롯된 충격·공포·슬픔 등 정동의 문제를 근원적·순환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는 죽음의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죽음에서 비롯된 정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한 기억은 의례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공식적인 기억과 비공식적 기억으로 유형화된다. 이같이 유형화된 기억의 의미 구조를 기호학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죽음의례와 기억이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을 기념하거나 망각하는 데 의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례를 수행한 죽음은 기념되는 반면에 의례를 수행하지 않은 죽음은 망각된다. 또한 어떤 의례 방식을 통해서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달라진다. 공식적 의례에서 기념하는 죽음에는 정상적인 죽음의 의미가 부여되는 반면, 비공식적 의례에서 기념하는 죽음에는 비정상적인 죽음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공식·비공식적 기억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는 행위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미체계를 생성한다. 행위의 차원에서는 의례의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죽음의례는 죽음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곡(哭)은 죽음의례의 절차의 한 부분으로, 죽음에 대한 충격, 공포 등의 다양한 정동 가운데 슬픔을 특정하게 유교적으로 배치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안정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죽음에 대한 정동은 그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이 갈등하면서 생겨난 것이므로, 그 정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합적인 정동의 배치가 필요하다.

죽음의례는 죽음에 대한 기억을 특정하게 선택하고 배제하면서 사회의 정상성을 유지해왔다. 예컨대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다양한 죽음 기억 가운데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죽음에 대한 기억은 선택하여 의례를 통해서 기념하였다. 반면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기억은 배제하여 의례를 치르지 않고 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의례를 통해 봉합된 죽음 기억은 언제 다시 돌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 통합이 된다.

주제어: 정동(affect), 죽음 사건, 죽음 기억, 기호학, 한국전쟁, 곡(哭)

코로나 이후 여가생활의 변화와 우울: 세대별, 혼인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신아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I. 들어가며

코로나 19 사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재택근무 및 단축근무제, 비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변화 중 여가시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건강의 대표지표인 우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코로나 이후 여가시간(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와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둘째, 여가시간의 변화와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 '세대'와 '혼인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한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20년 수행된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이다. 2020 <서울서베이 시민조사>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 응답자 4734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 4734명 중 남성은 2279명, 여성은 2455명이다. 세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841명, 30대 877명, 40대 884명, 50대 882명, 60대 1004명, 70대 이상 246명이다. 혼인여부별 분포는 배우자 있음 2879명, 배우자 없음(미혼, 별거, 이혼, 사별 포함) 1855명이다. 응답자들은 우울에 대해 10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여가시간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의 변화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에 대해 10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후 '감소' -1, '변화없음' 0, '증가' 1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후 혼자 보내는 시간의 변화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가졌다. 둘째, 코로나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 역시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가졌다. 셋째, 코로나 이후 우울에 대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변화의 효과는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우울을 높이는 효과는 배우자 없는 집단에 비해 배우자 있는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이후 여가시간(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세대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코로나 이후 여가시간(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혼인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양사회/동양사상1: 사회학 관점에서 기본소득론 탐구

동양사회/동양사상1:
사회학 관점에서 기본소득론 탐구

사회 : 이일래 (부산대학교)

1.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세계의 다양한 사례)
발표 : 최인숙 (성공회대학교)
토론 : 오세근 (동신대학교)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지자체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 :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광주대)
토론 : 최우영 (전북대학교)
3.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담론 전개
발표 : 김세현 (부산연구원),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 이해수 (강원대학교)
4. 화엄사상의 보살행과 현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발표 : 윤기혁 (동명대학교)
토론 : 이명호 (경희대학교)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세계의 다양한 사례)

최인숙 (성공회대학교)

▲ 기본소득의 부상

경기 침체와 4차 산업 혁명은 기존복지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는 실업률과 빈곤율을 대폭 늘려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대공황에 버금가는 이 위기 앞에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급부상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조건이나 의무 없이 일정액을 매월 지급한다. 인간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유토피아(Utopia)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COVID 19 앞에 이런 생각은 구시대적 유토피아로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기본소득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미 뜨거워졌다. 사회당의 대선후보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은 누적된 청년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쟁점화했다. 하지만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승리하자 이 이슈는 차차 식어갔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프랑스 사회에 기본소득을 재조명하고 있다.

독일 역시 기본소득에 적극적이다. 그 동안 간만 보던 독일은 올 2월부터 기본소득 실험국으로 급선회했다. 기존의 만성적 복지제도로는 지금의 코로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쓰나미가 지나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기본소득 시제는 초고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실업자가 90만 명 늘고, 생필품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섰다. 산체스(Pedro Sánchez) 수상은 긴급히 포데모스와 협의해 '최소생활소득(revenu minimum vital)'을 창설했다.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대표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대처(Margaret Thatcher)와 블레어(Tony Blair)의 이데올로기는 과거형으로 연대와 존중이 결핍돼 있어 남유럽 모델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남유럽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4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들 나라 중 몇 개국을 골라 그 나라의 기본소득 운동의 배경과, 자원, 실험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기본소득이란?

자유주의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공개입을 줄이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규정했다. 기본소득은 실업수당이나 연금·건강보험 철폐로, 그리고 최저임금과 일자리 보호 철폐로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공립의료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감소를 도모한다. 프리드먼의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노동을 거부할 수 없게 소득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안 된다. 반면에

철학자 고르(André Gorz)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사회적 계획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고르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과도하게 줄여서는 안 되고, 소득 수준도 열악한 노동이나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게 충분해야 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좌·우파적 관점에 따라 매우 모호하고 상반된 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프랑스 시민단체 MFRB(Mouvement Français pour un revenu de base: 기본소득을 위한 프랑스 행동연대)의 중립적 개념을 제시하면, “기본소득은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출생에서 사망까지 지급하며, 다른 배당소득과 병행할 수 있다.” MFRB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권리로 누구에게나 지급되기 때문에 낙인도 찍지 않고, 신청도 필요 없어 현행 복지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 기본소득운동의 부상과 발전(프랑스의 예)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경제학자 스톨렐뤼(Lionel Stoléru)는 프리드먼의 기본소득 개념을 프랑스로 가져왔다. 이에 중도 우파의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은 크게 고무되었고, 지식인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푸코(Michel Foucault)는 프리드먼의 개념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기본소득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르 역시 자본주의의 부과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단으로 ‘자율소득’을 창설하자고 주장했다.

1980년대 들어 브레송(Yoland Bresson)은 벨기에 철학자 파리즈(Philippe van Parijs)와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를 창설했고, 2004년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확장했다. 그러는 동안 프랑스의 많은 싱크탱크는 기본소득 모델들을 개발해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정부는 1989년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최저통합수당)를 신설했다. 하지만 한계가 드러나자 2009년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능동적 연대소득)를 신설해 대체했다.

2013년에는 ‘MFRB’가 설립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공공토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800여명의 회원과 50여 개의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반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진짜 기본소득인 “시민의 디딤돌(Socle citoyen)”을 창설하기 위해 45명의 여·야 의원들과 법관, 기업인, 철학자, 대학교수, 작가, 시민단체대표들, 대학원생 총 85명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이에 동참한 사람은 현재 1160명이 넘었다. 인간의 실존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좌·우파 이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명분을 건 이 거국적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계속 늘고 있다.

▲ 세계 기본소득의 실시 및 실험

1.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페이스북 창업자인 휴즈(Chris Hughes)는 캘리포니아 스톡턴(Stockton) 시의 기본소득 실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스톡턴 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야만 했던 빈곤 가정 중 125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019년부터 2년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했다. 그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우울과 걱정이 줄고 취업률도 12% 증가했다. 또한 수당을 식료품비, 가스·전기 사용료, 자동차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Oakland) 역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가난한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 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집이 없거나 불법이민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600가구를 뽑아 최소 1년 6개월 동안 그 어떤 조건 없이 매월 500달러의 수당을 지급 한다"라고 말했다. 샤프 시장은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실패"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클랜드 역시 재정은 모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브라질의 기본소득 실험

브라질 사람 6천만 명이 코로나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초로 시민기본소득법(Act of Basic Income of Citizenship)을 법제화한 나라다. 2004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다. 모든 브라질인과 5년 이상의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단지 지역 단위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60킬로 떨어진 마리카(Maricá)가 그 중 한 곳이다. 마리카의 몐부카(mumbuca) 시는 시민기본소득(BIC)으로 지역화폐를 마리카 주민에게 지급하고 이 화폐는 브라질 화폐 헤알과 바꿀 수 없다. 이 기본소득은 마리카의 경제를 활성화 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마리카의 기본소득을 브라질 연방정부의 극빈층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케냐의 마가와 기본소득 실험

세계 NGO단체 Give Directly가 소로스(George Soros)의 오픈 소사이어티와 이베이(ebay) 창업자 오미디아르(Pierre Omidyare)의 오미디아르소사이어티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케냐의 마가와(Magawa)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마가와 주민들은 매월 초, 케냐 돈 2,250실링(약 2만 7천원)을 받는다. Give Directly 수혜자들이 기본소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개념이 깔려 있다. 결과는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고, 암소나 염소를 사서 자립의 발판을 다지고 있고 자기 돈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기본 소득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다.

4. 이란 기본소득, 세계 최초 보편소득

2010년 이란정부는 에너지와 식료품 보조금 대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445,000레알(reals)을 각 개인 계좌로 매월 입금시킨다. 이 금액은 2800만 이란인의 월 지출액 보다 많고, 비숙련노동자 월급의 10%에 육박한다.

이란의 이러한 기본소득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공헌하고 있다. 2002년에 0.44였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지금은 0.399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그 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란의 소득불평등은 적신호를 벗어난 상태다.

이란의 기본소득은 세계 최초의 보편 기본소득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전 인구의 95%인 7,500만 명이 기본소득 대상이고 노동과 무관하다. 이처럼 이란은 전국 단위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 적이 있다. 단지 이란의 기본소득은 세금을 통한 자원의 일부를 배분하여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서구복지국가 모델과 달리 석유판매와 같은 외부적 지대수익을 분배한 것이다.

▲ 결론

기본소득제의 실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좌·우파에 따라 개념도 상반되고 모델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 국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안을 제시하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표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 대선에서 아몽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이슈를 선점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제시한 기본소득 개념은 너무 모호해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급여 수준은 얼마가 적정한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따라서 치밀한 연구와 모형 개발은 물론 실험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충분히(빈곤선,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부의 분배구조를 재조정하여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을 준비해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시민을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은 단어만 외치다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지자체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광주대)

코로나 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의 선별적 복지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가 노출되면서 보편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경우 프랑스 사회학자 안드레 고르츠(Gorz)의 포디즘에 기반한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에 대한 요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Gorz, 1986).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개인이 시장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치적인 합의를 거치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전강수, 2019; Friedrich Ebert Stiftung, 2009).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국가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에는 다소 유토피아적이며, 그 성공가능성 또한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자체형으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지자체형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이미 수행되고 있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점검하였다. 기본소득의 이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관계를 노동, 빈곤, 자유, 성별분업 네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박수범 외, 2018). 노동, 빈곤, 자유, 성별분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박수범 외 연구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논의를 일생활균형의 관점에서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박수범 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완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돌봄의 책임을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성평등의 핵심은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것이며, 성별분업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생활균형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생활균형에 관한 논의를 돌봄에 국한시키지 않고, 1인 가구가 가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학자들은 남성적 일과 여성적인 일의 구분에 기초한 성별분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강이수 외, 2011; 김미경 2012). 그러나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을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현재의 성별분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하여 왔다. 갈수록 직장생활에 의존하는 노동중심의 사회(Arbeitsgesellschaft)가 되면서 진행되어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동은 사회적 재생산의 어려움을 수반함으로써 여성에게 주로 책임이 전가 되어온 일가정양립을 넘어 개별 노동자의 일생활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지만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김원정

외, 2018).

기본소득에 대한 성평등한 관점은 일생활균형 효과에서 가장 크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생활 균형정책이 성별분업구조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실험을 필요로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개인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때 현재의 고착화된 성별 분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생활균형에 대한 논의는 비단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모분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일생활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존성을 벗어난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논의를 기본소득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것이다.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담론 전개*

김세현 (부산연구원),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본소득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계의 연구 성과물과 언론의 보도, 그리고 SNS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학술 영역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언론이나 시민사회 영역보다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기본소득'으로 검색되는 학술연구 논문 초록을 크롤링 하였다. 한편,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 언론 및 SNS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기본소득'으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와 트위터의 트윗을 크롤링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학술논문은 총 311편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 27,149편의 뉴스기사가, 트위터의 경우 82,375개의 트윗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서들이 담고 있는 심층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 기반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의 경우 24편만의 논문이 발간되어 기초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후 2016년까지도 연평균 14.6편의 논문들이 발간되어 상대적으로 논의 수준이 미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성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42편의 논문이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언론과 SNS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2016년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관련 텍스트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공적 부조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던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 영역과 언론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진행된 기본소득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기별로 토픽 분석을 진행, 논의 주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술 영역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이데올로기, 노동 및 복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정의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과 기본소득을 사회운동의 측면으로 강조하거나 보편적 교육,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과 연계시켜 기본소득을 논의하던 흐름은 크게 감소한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과 이에 따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언론 영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16년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준

* 이 연구는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한국사회 기본소득 담론 탐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

으로 내용적 전환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들뿐만 아니라 2016년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2019년 이탈리아 기본소득 논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관해 다양한 기사들이 작성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영역의 행위자들이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담론의 전개를 살펴보면 2016년 이전에는 사회운동이나 소수정당 차원의 이슈로 다루어졌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중요 공약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요 정치이슈로 다루어 지게 되었으며,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개념이 포함되면서 정파성을 뛰어넘어 보편적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재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이라는 단어가 혼용되면서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SNS에서의 기본소득 담론 역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SNS에서는 앞서 언론 영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본소득 정책 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 이전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을 고려하거나 시범적으로 제도를 수행한 국가들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내용들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기본소득 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학술 영역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 제도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해외의 사례에 주목할 뿐 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2016년 무렵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와 2020년의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의 종말에 대한 압력은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 담론을 언론 영역 및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대 및 재생산 시켰다. 또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기본소득 정책이 재난상황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학술 영역의 경우 2020년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아직까지는 학술적 결과로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엄사상의 보살행과 현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윤기혁 (동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승불교 화엄사상과 현대 사회복지사상의 관련성에 파악하기 위해서 화엄경 십회향품의 실천행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화엄경의 52위 보살수행계위(菩薩修行階位)와 사회복지사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신(11위~10위): 보살 수행의 발심 단계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의 근본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십주(11위~20위): 십주는 보살의 발심하는 마음인 십신에서부터 스스로 진여의 법계에 머무르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상을 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십행(21위~30위): 십행은 다른 중생들에게 직접 돕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십회향(31위~40위): 십회향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십지(41위~50위): 십지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계가 아닌 사회복지의 이념, 사상, 가치를 승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화엄경 십회향품의 실천행과 현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호 일체중생 이중생상회향은 어떤 중생도 항상 친구와 같이 대하며 이끌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대도사로서 중생을 이끌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둘째, 불괴회향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물리침이 없고, 모든 중생이 선근을 가져서 일체의 고통을 여의도록 하는 것이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중생들이 알지만 실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보살의 실천행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조력자와 계획가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등일체제불회향은 부처님과 같이 평등한 회향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 자는 모두 만족시켜 주고,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은 자는 모두 청정하게 해 보리심에 안주하여 일체의 지혜에 있어서 물리침이 없도록 하여 태만한 마음을 떠나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교육자와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지일 체처회향은 10가지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함으로써 중생들이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의 자재를 얻고,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무진공덕장회향의 열 가지 공덕장 중 1~6은 자리행을 나타내고, 7~9는 이타행을, 마지막 10은 실천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를 나타낸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조력자로서 다양한 집단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유용성을 알리고, 만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수순견고일체선근회향은 세간, 오온, 말(문자), 생각, 몸, 의지처, 짓는 일, 가진 것, 애욕과 세상법을 영원히 벗어나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실천으로 전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곱째, 등수순일체중생회향은 보살이 선근을 닦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하는 것으로 대열반을 얻었지만 세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선근으로써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수순하여

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교사와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덟째, 진여상회향은 보살이 중생 제도를 바라며 원하는 것이 지옥이나 장애가 될 업장을 벗어나, 평등한 지혜를 얻도록 하고, 모든 중생을 안락케 하며, 지혜를 통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8회향의 보살의 원(願)이 바로 옹호자와 집단촉진자의 역할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무착무박해탈회향은 선근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문제상황에 잘 대처하는데 돕는 상담가라고 볼 수 있다. 열 번째, 등법계무량회향은 중생들이 올바른 범행을 행하여 피안의 언덕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한 경전에서는 보살과 중생이 모든 것을 성취케 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와 욕구를 사정해서 주도면밀하게 원조를 해나가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 십회향품의 경문 전체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쌓게 하겠다”는 서원으로 충만해 있다. 그 서원의 중심에 보살이 있고 서원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중생이 있으며,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보현행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십회향의 내용임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보살은 현대적 의미로 보면 구원자, 의인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역할 측면에서 볼 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화엄경의 내재된 구체적인 보살행과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관한 연구를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사회복지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현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동양의 불교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는 화엄사상 보살행의 역할을 비교하여 동서양의 사회복지사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문화/소수자

다문화/소수자

사회 : 이소훈 (경북대학교)

1. 한국 이주민 차별척도의 한계: 차별 개념과 측정의 재검토
발표 : 손인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송영호 (동국대학교)
토론 : 김철효 (전북대학교)
2.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갈등 이주여성 중심으로
발표 : LUANGEGE (경희대학교)
토론 : 문경연 (창원대학교)

한국 이주민 차별척도의 한계: 차별 개념과 측정의 재검토

손인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송영호 (동국대학교)

이주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차별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차별은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이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차별경험을 중요한 조사항목으로 포함해왔다.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이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동일한 차별측정 척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국내 차별측정 척도에 대한 개념적 혹은 측정상의 비판적 검토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차별 개념과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차별척도의 한계와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이주민 차별 척도는 협소한 차별 개념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 유형을 조사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차별경험의 상황과 대응에 있어서도 개념적 그리고 측정상 재검토가 요청된다. 연구는 국내 이주민 차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다중 차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는 차별 척도 개발을 촉구한다.



조직/경제

조직/경제

사회 :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1. 순위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조직의 지위형성과 전략적 활용
발표 : 강수환 (고려대학교), 배소현 (전남대학교)
토론 : 백경민 (송실대학교)
2.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자의 영향: 주유소 간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윤은성 (University of Arizona)
토론 : 이원재 (KAIST)
3. 각인과 계승: 1948년 이후 법원 조직화와 일본제국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생존과 출세
발표 : 박천웅 (전북대학교)
토론 : 김수한 (고려대학교)
4.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거복지 분야 시험 사례
발표 : 김정원 (전북대학교)
토론 : 이가람 (연세대학교)

순위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조직의 지위형성과 전략적 활용

강수환 (고려대학교), 배소현 (전남대학교)

오늘날 대학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거의 대학은 독립된 학술 기관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지만, 이제 각 대학은 여러 유형의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대외에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 물론 대학을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사료(史料)에도 나올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오늘날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하다. 그것은 대학이 지역 수준이 아닌 세계수준에서 질적 우수성을 위한 경쟁을 하며, 그 경쟁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학의 성과를 측정하는 순위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amirez and Meyer, 2013; Shin and Kehm, 2013). 이 변화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며 세계 각국의 대학들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확대는 대학이 세계수준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Hasse and Krücken, 2013: 188). 대학은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단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주로 해당이 되던 품질관리(quality control)와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의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러 평가방식 중에서 순위평가체계(ranking system)는 특정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계대학평가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도 한다(e.g.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10개 대학 상위 100위권 진입 목표). 개별 대학에서는 순위를 운영목표 중 하나로 삼아 해마다 발표되는 평가 순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의 구조, 운영방식,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임무를 변경하기도 한다(e.g. 아시아 30위권 대학 도약, 세계 100위권 대학 목표). 이러한 흐름에서 순위평가가 대학조직과 나아가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계속되었다(e.g. 한준·김수한, 2017; 이기홍, 2019; Neave, 1998; Monks and Ehrenberg, 1999; Morphew and Huisman, 2002; Meredith, 2004; Sauder and Lancaster, 2006; Hazelkorn, 2007; Bowman and Bastedo, 2009; Garrod and Macfarlane 2009; Shin and Jang, 2013; Collins and Park, 2016).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체계가 대학 간의 순위 차이를 반영하는(reflect) 것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략 방향까지 만들 수 있음(create)을 잘 보여줬다.

그런데 순위평가와 대학 전략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에는 암묵적으로 세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대학 내부에서 순위가 조직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판단하는 척도로 널리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의 운영전략 방향에 순위를 기준으로 경쟁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위평가가 고등교육체제 내의 자원이 차별적으로 배분되게끔 한다는 점을 각 대학이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단과대학, 각 단과대학 내 학과들, 그리고 운영진과 교수회 간의 관계 등이 대학의 운영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평가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대학 내 조율의 과정과 결과가 평가 때문에 달라지는지, 그리고 달라진다면 대학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대학에서 기업과 유사하게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제시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직의 비전은 조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른 조직들과 구분되어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대학들은 자신들의 열망과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Kim, Hwang, Cho, and Jang, 2019). 그러나 이러한 열망의 표현이 구성원이 모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표면상에서만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대학의 전략적 측면이 강화된 가운데 각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 안에서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간극이라 할 수 있는 대학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루기 위하여 “대학구성원들은 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하였던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세 개의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각 대학의 핵심 운영자를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게 되었다. 먼저, 대학평가 순위는 조직 내부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 각 대학은 전략적으로 순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으로, 순위의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 조직 내부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학 사이에서 순위를 중심으로 지위집단이 형성되고, 조직의 전략들에는 지위 기반의 차이(status-based differences)(Huisman and Mampaey, 2018; Stensaker et al., 2019)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는 전략적 주체로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대학의 움직임 심도 있게 이해하게 하며, 대학평가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자의 영향: 주유소 간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윤은성 (University of Arizona)

경쟁자의 의사결정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조직은 수많은 경쟁조직들 중에서 참고/견제할 만한 경쟁자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특히 불확실성과 사회적 학습의 관계에 대해 조직들은 상황이 불확실 할수록 다른 조직들을 모방한다는 모델과, 불확실성은 모방의 큰 걸림돌이라는 모델이 모순적으로 공존해왔다. 본 연구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경쟁자 그룹(가격 결정의 준거집단)의 구성과 그들이 가격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639 주유소의 2019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격변동 패턴을 분석한다. 먼저, Deep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통해 누가 누구의 가격 결정에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경쟁자 그룹(가격결정의 준거집단)을 규명하고, 시계열 분석 모델(ARIMA 1,1,1)을 적용해 가격결정에 미치는 경쟁자 그룹의 구성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시장이 안정적인 때 vs. 시장 변동이 클 때), 경쟁자의 가격 결정이 어떤 조직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long-term vs. short-term)를 분석한다.

Project Summary

Overview. How does the decision making of competitors affect our own decision making? Not much is known about how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decide whom to observe and exactly how much they are influenced by these observations. This study recasts three sociological theories (neo-institutionalism, network theory, and ecological organization theory) to tests their premises about social learning mechanisms and the choice of reference groups. The proposed research extends theories by explor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composition of reference groups change at moments of external shock (e.g., price change in crude oil)? **Second**, does the composition of reference groups and the influence of competitors on price changes differ by urban neighborhood context? **Third**, how much impact do neighboring competitors have on price changes in the short term versus the long term? To see the social influence on decision making among competitors, the daily price data of all gasoline stations in Seoul during a recent year (2019) prior to the pandemic will be analyzed. The chain effect of price fluctuations will be examined to identify which neighboring actors function as the reference group for price decisions, and to what degree. Deep neural network algorithms and regression methods will be used to identify reference groups based on price behavior, as well as to estimate the magnitude of

the reference groups' influence on pricing decisions.

Intellectual Meri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lucidates aspects of decision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relegated to the realm of assumption and guesswork in sociological studies on decision making and social learning. It contributes to advancing the theory and methods of reference group studies. Specifically, the proposed research uses AI algorithms on big data to test, refine, and complement untested premises in current theory. We move beyond the vague hypothesis of “more uncertainty, more mimicry” that permeates existing research by considering the level of uncertainty (the period of stability vs. that coming after external shock), neighborhood context (affluent vs. poor neighborhoods), and time (long-term vs. short-term effect).

While it is well known that machine learning methods are highly successful at pattern recognition tasks, their use in social science studies has been scarce. AI methods enable the processing and analysis of large datasets in a manner agnostic to, and thus less vulnerable to, subjective biases, in comparison to existing procedures. Especially as the majority of social science projects using AI methods are concerned with text analysis, this study gains additional significance by expanding the range of AI applications in sociology to numerical analyses that are non-textual.

Broader Impacts. The proposed research will aid government policy makers in mitigating economic inequality between neighborhoods by identifying the different price decision mechanisms in affluent versus low-income neighborhoods. Findings will reveal how competition among market actors results in different price patterns among rich and poor neighborhoods, which may add hidden costs to living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This study can inform policies to target more accurately the channels by which social influence is spread. Understanding whom people benchmark under competition enables us to comprehend how social influence spreads in market competition. For example, illegal activities for profit, or misinformation, may diffuse as a result of competition and mimicry, even when there are no intentional efforts for diffusion. In this context,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allow for more accurate oversight and intervention to prevent or contain misinformation and other forms of undesirable diffusion.

Finally, the dataset and scripts will be shared in the format of a beginner-level teaching module for (under) graduate students on the application of AI to the familiar topic of social influence processes in decision making. By helping (STEM and non-STEM) social science students engage with machine learning methods, our work can facilitate interdisciplinary academic activities and stimulate further explorations of state-of-the-art machine learning methods relevant for the social sciences. This will benefit not only academic researchers, but also policy consultants of NGOs, data journalists, and business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 in public decision making in their localized competition.

각인과 계승: 1948년 이후 법원 조직화와 일본제국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생존과 출세

박천웅 (전북대학교)

이 연구는 일본제국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출신 법률가들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법원 관료 구조 속에서 살아남고 또 출세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어떤 조직이 창설될 때 환경적 조건과 내부의 중핵 행위자들에 의해 조직 인사의 양상이 각인되고, 일단 각인된 양상은 이후에도 관성처럼 굳어져 계승된다. 미군정기 사법부로의 격상 및 역할 확대, 한인 법률가 집단의 대외적 배타성과 집단 내 변호사 자격에 따른 위계, 남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그리고 사법부 조직화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료제 경험과 국가 행정 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이 중점적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미군정관보, 대한민국관보와 신문 자료, 그리고 일제시기 고등고시 합격자를 다룬 여러 이차 문헌에서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사법과 이외의 법률가 자격을 가진 이들과 법원 관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민형사소송의 2심과 행정소송의 1심을 전담하였던 고등법원 판사들의 면면에 주목하여, 1948년 8월부터 12월 사이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들의 법률가 자격을 분석하고, 이를 1945년의 서울고등법원, 같은 연도의 다른 법원 판사의 법률가 자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1950년 이후 서울, 대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된 이들의 법률가 자격을 분석하였다. 194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대다수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45년 8월까지 조선총독부 관료로 근무했던 이들이 임명되었고 이 임명 양상은 1945년의 서울고등법원은 물론 같은 연도의 다른 법원과도 달랐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중심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들이 195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용, 우대받았다는 점도 찾을 수 있었다. 사다리 같은 사법부의 승진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각인과 계승의 과정은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들이 1960-70년대 대법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거복지 분야 사협 사례

김정원 (전북대학교)

1. 서론

이 연구는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조직된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주거복지사협)을 사례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작동한 구조와 동학을 살펴본다. 이 연구가 주거복지사협을 사례로 선정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뤘다고 평가해서인데, 성공적인 조직화로 평가하는 근거는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비록 내부의 굴곡은 있었으나 여러 변곡점을 잘 헤치면서 꾸준히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규모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조직의 경험과 현재의 모습이 사회적 소유(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식)-사회적 자본(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사회적 가치(빈곤층 당사자가 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라는 사회적 경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서 이 연구는 성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화에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고 그것을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사회적기업가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했다.

2. 이론적 배경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 환경체계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생과 공존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한다(이인재, 2014).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생태계와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구성에 따라 그 성과의 결과물이 달라지게 된다. 이 연구는 CASE(2008)가 제시한 자본 인프라(capital infrastructure)와 환경 요인(context-setting factors)이라는 두 범주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성 부문으로 수용한다. 사회적경제생태계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의 행위 주체이다. Peredo & McLean(2006)에 의하면,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를 파악하고 이용하며, 혁신을 채택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가용 자원의 한계에 굴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협력적인 작업, 집합적 결정, 정보교환, 집합적 프로젝트는 필수이다(Pereira & Bacic, 2020).

3. 주거복지사협의 현황과 역사

2016년에 설립한 주거복지사협은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전국의 97개 업체가 2020년 현재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니 명실공히 전국적인 조직이다. 한편,

주거복지사협은 복합적인 성격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단일 기업이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자이므로 연합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프랜차이즈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은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주거복지사협의 역사적 기원은 자활사업의 제도화와 함께이다. 자활사업은 1990년대 빈민밀집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자협동조합 조직화 운동의 경험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건축 분야였고 이런 경험이 반영되어 시범사업 시절에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들이 건축 분야의 사업단들을 조직했는데, 기술 수준이 낮아 건축보다는 시설이나 주택 개보수가 중심이어서 집수리사업으로 불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자활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조직되면서 집수리 자활사업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각 시기별 성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각 시기별 성격과 주요 내용

기간	성격	주요 내용
2001년 ~ 2004년	원형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 사업 5대 표준화 사업의 하나로 선정 • 주거현물급여 실시(2002년 하반기부터) • 집수리 자활사업단들의 전국네트워크화 작동 • 기업 및 NPO의 지원 활동과 집수리 자활사업의 결합
2005년 ~ 2012년	정체성의 정립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의 담론화/정책화(주거복지, 에너지복지) • 전국적인 연합조직 시도 • 새로운 사업의 모색(연관 사업 시도, 광역사업단 시도) • 주요 외부 파트너 조직
2013년 ~ 현재	전국적 활동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사업 중심(사업조직)으로 고착화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출발 • 주거현물급여 주관 부처 변화(복지부 → 국토부)

4. 분석

자본 인프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무적 자본, 인적 자본, 지식자본, 사회정치자본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무적 자본으로는 정부의 자활사업 지원 재정(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의 사업비, 자활근로 수익금, 자활기금,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공모사업)을 비롯해 기업사회공헌과 제3섹터의 외부지원사업 등이 결합했다. 둘째, 인적자본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한 주거복지 자활사업의 실무자들로 현장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셋째, 지식자본은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운영되던 자활정보센터에서는 소속 연구원들을 비롯해 우호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넷째, 사회정치자본은 지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대표체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그리고 중앙 단위의 전달체계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비롯해 2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환경정의나 주거복지연대같은 시민 조직들을 들 수 있다.

1) 환경요인

환경 요인은 사회적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으로서 사회적기업가와 자본 공급자가 작동하는 조건을 창출하는데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과 제도, 유관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경제적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실업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복지 공급 확대와 사회적경제 조직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낳은 정책과 제도는 재무적 자본 형성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주거복지 자활사업의 규모화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유관 분야는 사회정치자본으로 역할을 한 각 조직들로 이들은 지원자로서 역할이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했다.

2) 사회적기업가의 역할

주거복지 자활사업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현장의 활동가들 중에는 사회적기업가로 불릴 수 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자활근로사업단을 넘어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 조직들을 잇는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각종 프로젝트를 만들어 재무적 자본을 확충하려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주거복지센터 위탁 사회주택 운영과 같은 실험을 했으며, 해외 사례를 학습하고 자본 인프라를 활용해 가용자원의 한계를 돌파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적인 작업과 정보 교환, 집합적 프로젝트 수행이 빈번했다.

3) 소결

결국 전국 각지의 주거복지 자활사업이 현재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 역사에서 자본 인프라와 환경요인, 그리고 행위 주체로서 사회적기업가군의 실천이 잘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계층/불평등1

사회계층/불평등1

사회 : 정인관 (송실대학교)

1. 사회이동의 이중적 과정: 사회이동의 생애과정적 접근
발표 : 문수연 (중앙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토론 :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2. COVID-19 전후 학업 성취도 불평등: 가족배경, 성별, 지역에 따른 격차
발표 : 최성수 (연세대학교), 임영신 (서울대학교), 고원태 (연세대학교)
토론 : 황선재 (충남대학교)
3. The Widening Gap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Korea
발표 : 장상수 (순천대학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이동의 이중적 과정: 사회이동의 생애과정적 접근

문수연 (중앙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 내에서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는 가장 양적인 연구가 축적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상대적일 문제를 의식을 공유하고, 표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국제비교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사회이동 연구는 개인의 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대 간 직업이동을 통해서 사회의 개방성과 불평등 구조를 밝히는 연구의 하나로 세대 간 직업이동이 표준적인 분석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OED 모형으로 알려진 교육을 매개로 하는 세대 간 직업이동은 이미 60년대부터 표준적인 분석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산업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OED 모델이 변화된 불평등 구조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상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교육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가족 배경은 소년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교육, 취업, 결혼, 소득 획득, 중장년기의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과정에서 자녀 세대에게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이 생애 과정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1999년, 2009년, 2019년 3개 시점으로 구분하여 42-51세에 해당하는 부모 세대가 62-71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 세대의 생애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자녀의 교육 획득, 이후 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 그리고 소득 획득을 차례로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부모 세대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도 초기 커리어에서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부모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소득의 변화를 겪었고, 고용지위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분석 결과는 크게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대 간 사회이동모형을 생애과정 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다. 자녀의 청소년기-부모의 중년기, 자녀의 청년기-부모의 장년기, 자녀의 중년기-부모 노년기 생애과정을 분석모형으로 제시한다. 생애과정의 단계 별로 자녀 세대에 미치는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모형으로 제시한다.

둘째,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세대를 42-51세, 52-61세, 62-71세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녀 세대를 17-24, 27-34, 37-44세로 구분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분석틀을 다룬다.

셋째, 자녀의 교육 성취와 관련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보다 재산의 영향력이 커서 재산 상위 40%가 자녀 대학진학에서 나머지 60%와 큰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로는 홀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과 비교해서 대학진학이 훨씬 낮았다. 직업 이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가족 배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녀의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교육이지만, 부모의 대학 교육과 부모의 재산도 자녀의 직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D 모형에서 O-D 관계에서 부모의 재산도 매우 중요하게 자녀의 직업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이 불평등 체제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자녀의 직업획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계급(직업)과 교육수준이지만, 부모의 계급과 소득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중간계급인 경우, 자녀는 부모가 노동계급인 경우보다 17% 정도 더 높은 근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도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계급과 소득은 자녀들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스펙과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전체 생애과정에서 젠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성취, 직업획득, 소득획득, 계급(직업) 지위 획득에서 자녀 세대의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모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았고, 직업획득에 있어서 남성은 본인의 교육과 부모 교육에 영향을 받고 자산 분위 20-60%에서 하위 20%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성의 경우는 상위 20%만이 나머지와 차이를 보였다. 소득획득에 있어서도 남성에게는 본인의 교육이 중요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교육 이외에 부모의 재산이 유의미한 근로소득 차이를 만들어 냈다. 계급(직업) 획득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부모가 중간계급에 속하고, 재산이 상위 20%에 속하고, 자녀가 대학을 나온 경우에, 자녀가 중간계급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여성은 부모가 중간계급이고, 본인은 전문대 이상으 졸업한 경우에 중간계급이 될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계급격차, 젠더 격차, 교육 효과의 차이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더 커졌다. 이것은 청년기에 격차가 가장 적었다고, 점차 격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과 기성세대(중장년) 간의 격차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대 간 격차보다 기성 세대 내 격차가 대단히 클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OVID-19 전후 학업 성취도 불평등: 가족배경, 성별, 지역에 따른 격차

최성수 (연세대학교), 임영신 (서울대학교), 고원태 (연세대학교)

COVID-19 이후 학교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불평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COVID-19 이전에 비해 이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가능한 성취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우리 연구는 2020년 11월 실시된 자료를 포함해 새로 제공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이 문제를 분석했다. 2020년 가족배경(부모학력, 사회자본, 문화자본), 지역, 성별에 따른 격차를 2012-19년 추세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추가로 학생들의 시간 사용 정보를 활용해 2020년 격차 변화가 게임/음악/영상, SNS, 사교육 등에 사용한 시간에 의해 매개되는 양상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VID-19이전인 2012-2019년 기간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는 증가하지 않거나 일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 추세를 감안한 COVID-19이후 2020년 성취도 격차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3학년) 학생들의 경우 가족 사회자본에 따른 격차 및 지역에 따른 격차(도시지역 학생 대비 읍면지역 학생의 열위)가, 일반고등학교(2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격차(여학생 우위)가 두드러졌고 그 외에는 일관적인 양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성별 격차에 대한 SNS 사용 시간과의 매개 관계가 일관성있게 나타났다지만 그 외에는 유의미한 매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중3과 고2 학생들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에서 우려와 달리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과에 대한 학술적, 방법론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The Widening Gap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Korea

장상수 (순천대학교)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fers to the effect of an individual's born attributes (e.g., sex, race,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outcomes (e.g., cognitive outcomes, emotions, organization skills, graduating school). This article will look at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Quite a few studies have dealt with such a topic. However, these studies featured several limitations: First, most research did not compare the inequality in Korea with that in other countries. Second, only a few studies have dealt with temporal changes in Korea's inequality.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mentioned above: First, this study looks at Korea's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It considers the inequality in Korea with that in the OECD countries. Second, it tries to show the temporal changes of the inequality in Korea. It compares the inequality in the later 2010s with those in the early 2000s.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as the socioeconomic gradient in Korea larg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Second, has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s? Noting that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increasingly differentiated over the past few decade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 both the gap between students and the disparity between schools would have widened during the past few decades. Second, the average scores students achieved would have been lower; the *efficiency* of education would have deteriorated. Third, the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ould have been greater over the last decades; the *equity* of education would have decreased. Analyzing the PISA data, this paper found that these three hypotheses were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results.

Why has the efficiency declined during the past decades? Why has the equity deteriorated? Prior research on Korea's educational inequality speculated that the greater differentiation in secondary education resulted in lower educational efficiency or fairness. Following these, I tried to explain Korea's increasing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by the changes of secondary education. However, this kind of explanation does not seem to be perfect, although it is persuasive to some extent. After finding the increase in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s over recent 50 years across the majority of countries examined, Chmielewski (2019) concluded that changes in tracking policies cannot explain the global trend of increasing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s, because more countries have moved the age of track selection later rather than earlier and because more countries have chosen the various de-tracking policies. If that is the case, what are the other reasons for the increase in socioeconomic gradient in Korea? Three candidates are noticeable; the expanding diversity of students, the increasing positional inequality, and the widening disparity in parental investments of time and energy in children. The more diverse students enrolled in schools may lead to the growing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s due to the relatively disadvantaged population (Baker, Gosling, and LeTendre, 2002). The greater inequality of outcomes resulted in greater variability and disparity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the wider disparity in the family environment resulted in larger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Sørensen, 2006). Greater inequality in parents' income caused stronger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sping-Andersen, 2004; Reardon, 2011). The more disparities in parental investments of time and energy in children, which may be due either to the increasing competitive college admissions or to the increase of competition caused by de-tracking reforms which leave a growing share of students potentially eligible for university admission, led to the increase in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s (Alon, 2009). Which candidate is more plausible? This question should be answered in another work.



복지/평등

복지/평등

사회 : 김도균 (제주대학교)

1.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세대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윤민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임정재 (연세대학교)
토론 : 김종우 (연세대학교)
2.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발표 : 양종민 (서울대학교)
토론 : 김윤영 (전북대학교)
3. 아시아지역 사회적 웰빙 비교: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발표 : 박상희 (서울시립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구혜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토론 : 김재우 (전북대학교)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세대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윤민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임정재 (연세대학교)

최근 경제불평등 연구는 공정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불평등 수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문제인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불평등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불공정성 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 공공정책 발굴 및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불평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넘어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불평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불평등을 해소할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해법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여 왜 이러한 점들이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분석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불평등 인식은 현실에 대한 개인들의 다차원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는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인식의 특징과 집단별 차이 등을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불평등 인식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믿음이자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는 특정 행위지향을 낳을 수 있고 특정한 선택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 인식은 개인의 행복감,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 불평등 인식의 차원은 다차원의 영역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정성 논의는 분배공정성 논의의 흐름과 일치한다. 분배공정성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이 자원과 기회의 배분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분배공정성은 불평등한 분배문제 뿐만 아니라 적게 노력하고 투입한 사람이 상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절차와 과정도 문제 삼는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소득분배와 기회공정성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층이동 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해진 것은 공정성 인식이 특정 사회에서 형성되는 당시의 상황적 조건, 이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은 단순히 심리적, 철학적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영역인 것이다. 공정성 논의가 분배체계에 대한 거시적 측면을 설명하지만 성원들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미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세대 간 문제와 갈등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배와 보상을 넘어서 공정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그 계층이동성에는 기회의 문제가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과 교육의 기회공정성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와 법 앞의 평등은 앞의 두 공정성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실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조건공정성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법 앞의 평등으로 조건공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성원들에 대한 대우와 혜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회전반적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공정성과 유사한 문제이다. 이처럼 공정성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바라볼 때 불평등인식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불평등 관련 정책수립도 보다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와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공정성과 경제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정성을 '기회 공정성', '분배 공정성', '조건 공정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하위문항 두가지 씩 총 여섯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 및 자산격차로 대표되는 '경제불평등 인식'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에서 실시한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웹조사를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을 적용하여 총 2,001명의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경제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불평등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주관적 인식 변수들이 불평등 인식과 뚜렷하게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공정성 변수들의 경우, 취업기회 공정성, 여성에 대한 대우 공정성, 소득분배 공정성, 과세 및 납세공정성이 경제불평등 인식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세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20-30대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주관적 계층 인식 변수는 20-30대, 40-50대 모두에게서 경제불평등 인식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 공정성 변수의 경우, 세대간 모두 공통적으로는 소득분배 공정성이, 20-30대와 40-50대는 법집행 공정성과 과세 및 납세공정성이, 60대는 여성에 대한 대우 공정성이 경제불평등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세대별·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은 계속해서 20-30대(특히, 남성)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정성 변수의 경우, 20-30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대우 공정성이 높을수록 경제불평등 인식정도가 높았고,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교육기회 공정성이 높을수록 경제불평등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공정성 변수들의 경우, 조건공정성과 분배공정성 관련 변수들에서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뚜렷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분배공정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자원을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불평등 인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조건공정성의 경우,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법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경제불평등 문제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성의 대우 공정성은 특정 집단에 따라 상관관계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젠더 이슈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사회인구집단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공정성과 경제불평등 인식간의 관계는 사회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양종민 (서울대학교)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는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redistribution)다. 이러한 두 관점은 정치적으로 상이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전자가 시민이 실업, 질병, 은퇴, 출산 등 수입이 중단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Barr, 2001; 양재진, 2020), 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원 재분배를 의미한다. 우선 사회보험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수평적 재분배라면, 공공부조와 같이 누진적인 조세제도와 사회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제공되게 하는 방식의 수직적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묵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아픈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같이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도 있다(Esping-Andersen and Myles, 2018). 재분배가 필요한 이유는 복지국가의 첫 번째 목표인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윤홍식, 2021).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비용 절감을 최대화 하기 위해 노동의 시장소득 인상을 억제하고, 공적복지 확대를 최소화하였다. 대신에 낮은 자세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혹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위험에 개인(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김도균, 2018).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취약 계층이 아닌 소득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었다(양재진, 2017; 윤홍식, 2019). 이와 같은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 때문에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천문화적인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2021년 7월 기준 4.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비판하며 소득불평등, 빈곤,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적 지지는 서구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다(Jæger, 2006). 복지국가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그 원칙과 운영을 지지하고 요구 조건과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van Oorschot, 1999).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특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복지국가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제도개혁을 위한 방향 혹은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Chung, Taylor-Gooby, and Leruth,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잠재집단 분석결과 복지국가의 목표인 사회보험, 재분배에 대해 찬성하고 이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집단이 전체의 49.28%이며,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회보험과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집단이 전체의 14.25%다. 마지막으로 재분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회보험과 증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36.47%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재분배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재분배-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사회보험과 증세에 대해 유보적인 비율이 약 36%, 사회보험과 증세에 반대하는 비율이 약 14%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며,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36%에게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많아질수록 사회보험-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 사회보험-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다. 공적복지의 기능적 등가물인 사적자산축적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 복지의 포괄성과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 납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공적 복지의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생애주기 효과를 반영한 연령 제공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이는 소득과 자산의 축적수준이 높아지는 중장년층까지는 사회보험-재분배-증세 찬성형에 비해 사회보험-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낮아지고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보험-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여성의 경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 확대에 대해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기간효과와 관련하여 2007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사회보험-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회보험-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0년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통해 무상급식 논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과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 사회적 웰빙 비교: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박상희 (서울시립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구혜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러한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자살비율이 다년간 가장 높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은 불행한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행복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변수는 소득이었다. 그러나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을 따르면, 소득이 높으면 웰빙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에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의 소득은 높지만 그에 비해 행복하지 않은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동아시아에 비해 소득이 낮지만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높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웰빙의 다차원성이 주목하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즉, 관계변수와 사회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두 가지이다. 이 연구는 첫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관계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둘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관계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사회적 웰빙의 다차원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사회적 웰빙은 개인적, 관계적 및 사회 차원의 웰빙 세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특징 지어진다. 개인적 웰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관계적 웰빙은 다른 사람과 풍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의 웰빙은 기관의 질과 사회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형성된다. 이 정의는 신뢰하고 포용적인 사회에 살고, 다른 사람들과 풍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개인이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기준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나 원하는 삶과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의존한다. 삶의 만족도를 관계와 사회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계적 웰빙, 즉,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대,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차원(정치경제적 안정성, 즉, 부패 수준, 불평등, GDP per capita 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성,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 혼인상태, 실업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도 웰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웰빙 선행연구는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지만, 웰빙의 다차원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웰빙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 사회적 웰빙 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 Studies, ICSWB)의 “아시아 사회적 웰빙 조사, 2015-2017”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 등 총 7개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비교 연구를 위해 통합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독립변수는 경제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으로 측

1)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20S1A5A2A 03045598). 이 글의 일부는 2018년 3월 제3차 국제 사회적 웰빙 컨소시엄(The 3r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했다. 경제적 차원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경제적 위험 경험'으로 구성했다. 관계적 차원은 가족·친척 신뢰, 친구·지인 신뢰, 기관 신뢰, 이웃 신뢰, 일반신뢰로 구성했다. 신뢰를 공공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사적 신뢰~공적 신뢰로 확대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했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 도시 거주 여부이다. 이 연구는 SPSS 26.0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사회적 웰빙과 사회의 질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가가 발전해서 산업화되고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또 사회 차원의 거시지표(투명성)는 좋아도, 그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차원의 웰빙은 낮았다. 관계적 차원(신뢰)의 경우, 기술통계분석에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차이가 관찰됐다. 평균값과 응답분포를 비교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모두 가족·친척 신뢰, 친구·지인 신뢰가 높지만, 동아시아는 이웃 신뢰가 동남아시아보다 낮고 기관 신뢰보다 일반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이웃 신뢰가 동아시아보다 높고 기관 신뢰도 높은 편이다.

이 연구는 경제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효과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각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진 효과가 모두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7개국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회귀분석을 했다. 독립변수 중 경제적 차원은 중간 수준보다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중간 수준보다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즉, 경제적 차원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지지됐으나, 신뢰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친척 신뢰, 친구·지인 신뢰, 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이웃 신뢰와 일반신뢰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았다. 국가 비교를 위해,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차원은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나 관계적 차원(신뢰)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뚜렷했다. 또 신뢰의 정도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족·친척 등 사적 신뢰부터 기관 신뢰까지 확장된 형태였다. 동남아시아는 신뢰 평균이 더 높았지만, 가족·친척 등 사적 신뢰 이외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남아시아의 신뢰 평균이 동아시아보다 높았지만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동아시아보다 낮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분석과제를 알려준다. 먼저, 연구결과는 국가 간 비교와 개인 간 비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 수준에서는 동아시아의 산업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국가가 된 이후에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 이외에도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공동체적이고도 가족주의적인 긴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도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신뢰 구조'를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신뢰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신뢰 구조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차원의 상호작용 빈도(양적 척도)와 사회적 지지(질적 척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종교를 가진 것을 고려하면, 정신적 웰빙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Person-environment fit)"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신뢰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이익이 있고', '종교적인 나라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웰빙은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경제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 더하여, 사회적 차원(투명성과, 공정성, 포용성 등)을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필요도 있다.



특별(한중)1

특별(한중)1

사회 : 김부용

1. 后疫情时代城市社区韧性建设 (포스트코로나시대 도시커뮤니티 재생)
발표 : 루 형 (중국 길림대학교)
토론 : 윤중석
2. 嵌入式治理 : 社会工作对后疫情时期社区治理的影响 (발현적 거버넌스: 사회웁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커뮤니티 통치에 대한 영향)
발표 : 리일남 (중국 난주대학교)
토론 : 강광문 (서울대학교)



이론2

이론2

사회 : 이종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1. 소스타인 베블런과 미국 경제학 장의 과학화

발표 : 이용승 (서강대학교)

토론 : 민병교 (서강대학교)

2. 공동체 가치와 코로나19 방역 성과: 시민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집단분석 방법

발표 :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심영희, 박병진 (한양대학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소스타인 베블런과 미국 경제학 장의 과학화

이용승 (서강대학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9)은 1890-192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활동하며 독창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경제학 연구들을 발표한 당대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베블런에 대한 많은 연구서는 서두에 미국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의 하나로 그를 칭찬하면서 연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관용적으로만 사용될 뿐 베블런의 독특한 경제학 이론과 주장은 그의 사후 경제학과 사회과학 일반에서 사라졌다. “유한 계급”, “과시적 소비”와 같이 몇 가지 개념만이 베블런의 이름과 함께 남은 채 그가 자신의 경제학 이론으로 제시하였던 “진화론적 경제학”은 학문적 논의 안에서 잊혀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크게 두 범주-내재적 설명과 외재적 설명-로 구분될 수 있는 베블런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그의 이론을 그가 위치한 학문적 맥락과 괴리시켜 해석함으로써 본능 결정주의로 오해하거나 노르웨이 이민자 집안 2세대의 열등감 표출의 결과로 오해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베블런의 이론이 그가 위치한 1890-1920년대 미국 경제학 장의 맥락 위에서 평가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왜 경제학자 베블런이 미국 경제학 장에서 중요한 인물인지를 논의하겠다.

베블런이 경제학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1890년대는 미국 경제학의 제도화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특히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은 1870-1910년대 미국에 경제학과와 미국 경제학 협회가 설립되고 이후 2-30년의 시간을 경제학이 전문화되는 과정으로 포착하고 분석한다. 정책 주창자(advocate)이자 직접적으로 대중 강연을 하는 경제학자의 역할이 학문의 자율성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객관적인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주장하며 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언하는 전문가(expert)의 역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집단이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로서 미국 사회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행동 전략에서의 수정과 더불어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경제 현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표현을 따르면, 과학자는 “과학적 진리 생산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성취함으로써 자연 세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담지자로서 사회 내에 인정받게 되었다. 자연 현상에 대해 종교인도 일상인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학자만이 자연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원한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현상이 학문 장 외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경제학 외부인들-정치인, 기업가, 저널리스트, 일상인-이 경제학 장에 개입할 요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의 전략은 현실 경제 문제와 경제학적 문제를 구분하고, 지식 그 자체를 위한 학문으로 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 경제학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경제학에 적합한 방법론은 무엇인가와 같은 경제학적 논쟁은 경제학 장을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는, 학자들의 자율성이 높은 공간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 투쟁의 끝에 구성된 자율성이 높은 경제학 장은 경제학자 주장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며 객관성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블런과 그의 경제학 이론이 당시 미국 경제학 장의 과학화 과정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800년대, 특히 남북전쟁(1861-1865)을 전후로 하여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농촌 문제, 독점 기업 문제, 노동조합 문제, 관세 문제, 화폐 문제, 도시화 문제, 등-에 직면하였다.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하였던 문제들에 대해 미국 사회는 세속적인(과학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대학의 학장(목사)에게 대학 과정 중 한 강의만을 들을 수 있었던, 도덕 철학의 하위 과목으로서의 정치 경제학 역시 사회적 요구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였다. 1871년 하버드 대학이 최초로 경제학만을 담당하는 전공 교수를 임용하였으며, 1875년에 경제학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1875년에 최초로 경제학 박사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1885년 미국 경제학회가 설립되면서 1800년대 후반 미국 경제학은 빠르게 분과 학문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경제학이었다. 1870년대 독일 유학을 다녀와 역사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젊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개입 정책을 지지하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자유방임주의 정책과 갈등을 일으켰다. 1885년 미국 경제학회 설립을 둘러싼 논쟁과 당시 대중지였던 *Science*에서 이루어진 1886년의 논쟁은 두 집단 모두 경제학이 현재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점을 당연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베블런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일상 세계와 분리된 세계로서 지식 그 자체를 위한 경제학의 구성을 주장한다. 진화론적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주장하고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베블런은 경제학 장의 과학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과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선형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학문의 탄생 과정에 대한 과학적(진화론적) 탐색을 한다. 이를 통해 과학이 근대 사회의 특수한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베블런은 “쓸데없는 호기심”(idle curiosity)이라는 본능(성향)에 전념할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이 “사실의 관점”(matter-of-fact)에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인과적 “과정”(process)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부터 근대의 과학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진화론적 역사관 속에서 설명한다. 실용적 관점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인간이 가진 본능으로서 쓸데없는 호기심은 과거 원시 부족의 주술이나 신화, 종교와 연결되어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은 사실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spiritual kind)을 가정하고 부여하는 애니미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사회는 “기술 지식”이 변화함에 따라 원시 사회에서 중세 야만 사회를 거쳐 장인 사회, 산업 사회로 넘어온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물질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 지식이 과거 생산 업종에 종사하던 하층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생산과 관련하여 하층민들에게 당연시되는 사유습관(habit of thought)들이 사회 전체로 저변을 넓힌다. 따라서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었던 사회에 대한 해석들도 하층민의 전유물이었던 물질 사실(material fact)의 관점과 결부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과거 자연 현상을 해석했던 종교의 역할을 자연과학이 이어받으며 사회 현상들에 대한 신화적 해석들은 사회과학이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과학에 대한 과학, 다시 말해서 과학에 대한 성찰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베블런은 과학의 목적이 실용적 관점과 대비되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목표나 이상향에 대한 “선입견”(preconception)으로 인해 대상이 되는 사회 세계를 선입견이 가정하고 있는 특정 목적에 지향적인 영적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근대 과학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서 베블런은 노동의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을 자연의 본질로 미리 가정하는 것, 혹은 공산사회나 시장의 균형과 같이 도달해야 할 이상향을 미리 전제한 채 근대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 과거 영적 존재에 대한 선입견의 잔재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학은 사회 현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변화)해 왔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인과적 설명에서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 조연하고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가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베블런은 경제학을

지식 그 자체를 위한 학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베블런의 학술적 주장은 베블런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1906년 시카고 대학 조교수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후 교수 자리를 얻는 데도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의 과학화라는 과정에서 보면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과와의 대립 속에서 미국의 방법론 논쟁을 점화시킨 1920년대 제도주의 학파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한 경제학자였음이 분명하다.

공동체 가치와 코로나19 방역 성과: 시민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집단분석 방법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심영희, 박병진 (한양대학교)

코로나19 도전에 응전하는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이 연구는 공동체 가치 또는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사회학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해왔으나, 근래에는 개인화 또는 개인의 권능화 패러다임에 압도당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은 방역의 성패에 작용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쟁점을 다룬다. 1) 이론적 쟁점 및 선행 연구: 코로나19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왜 공동체 문제가 중요한가? 2) 설문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관한 30개 대도시 시민조사 자료로부터 변별력 있는 사회집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3) 세계의 다양성: 이렇게 구성된 사회집단이 어떻게 공동체 가치와 연결되며, 이들의 도시 별 분포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4) 분석의 테크닉 문제: 이 연구가 시험적으로 탐색해본 “잠재집단 분석방법”은 사회학의 전형적인 행위자 유형분류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만일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5) 이론적 함의: 이런 통계적 분석을 둘러싼 논의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사회학의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5가지 쟁점을 현학적 전문가적 통계분석의 스타일을 넘어 평이한 언어로 정리 해보는 것이 이 발제의 목적이다.



문화2

문화2

사회 : 이희정 (공주대학교)

1.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 : 이희정 (공주대학교)
토론 :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2.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 블로그와 신문기사·칼럼 텍스트 마이닝
발표 :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토론 : 김종우 (연세대학교)
3.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게임 기사 분석, 2010-2020년
발표 : 이은정,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토론 : 왕혜숙 (홍익대학교)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희정 (공주대학교)

소득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OECD 국가중 심각한 소득불평등 국가군에 속한다. 소득불평등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상위 1% 또는 10%와 하위 99% 또는 90%간 불평등이 사회 집단간 불평등중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갈등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꼽는다. 이처럼 청년들이 소득불평등 현실을 무엇에 기반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사회갈등을 비롯한 소득 불평등 이슈들과 관련하여 소득불평등 현실 못지않게 중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황선재·계봉오, 2018).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을 심층 분석하여 기존의 소득불평등 연구 결과들을 보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의 내적 분화와 그 원인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소득불평등이 교육, 노동, 결혼, 건강 등의 여러 차원의 불평등과 결합하여 구조화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청년 집단내부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소득불평등 현실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소득불평등이 왜 다르게 인식되는지, 무엇을 토대로 정당화되거나 비판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연구는 대체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사회계층지위에 따라 결정되는지(structural position hypothesis) 아니면 사회의 문화나 지배적 가치에 의존하는지(Ideology hypothesis)를 규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이분법적인 접근에 치중하면서 사회계층 지위와 사회 가치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회 가치의 소득불평등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사회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되기보다는 사회계층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탐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 소득불평등 인식의 사회계층지위 속성과 사회 가치 속성을 파악하는 한편, 사회 가치 속성이 사회계층지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별화가 소득불평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색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의 사회 가치 속성을 분석하면서 능력주의(meritocracy)에 주목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능력주의가 한국사회 공론장에서 빈번하게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과 밀접한 입시, 채용 등의 논란들에서 노력과 재능에 따른 보상과 불평등을 정당하게 수용하는 능력주의 관점이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거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능력주의 믿음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흠수저-금수저 담론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더욱이 가족배경이나 사회관계 등은 한국사회에서 성공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청년 10명중 7명이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노력, 재능 등의 능력주의적 요소

(meritocratic element)와 가족배경, 사회관계 등의 비능력주의적 요소(non-meritocratic element)의 소득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최근 연구들이 능력주의적 요소와 비능력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파악하여 능력주의 믿음의 강도를 엄밀히 분석하고 능력주의 인식을 보다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주의 믿음의 강도를 능력주의적 요소와 비능력주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한 능력주의 믿음이 소득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탐색할 연구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가? 둘째, 청년층의 능력주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에 대한 능력주의 인식의 영향력은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소득불평등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소득불평등 인식이 집단내부에서 분화되고 다소 이질적이다. 청년들이 대체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청년 개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나 사회 가치와 믿음에 따라 소득불평등 인식이 다르다. 둘째, 청년들의 능력주의 인식은 노력이라는 능력주의적 요소와 가족배경 등의 비능력주의적 요소의 결합 양태에 따라 상이하다. 전반적으로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비능력주의적 요소의 중요도가 능력주의적 요소의 중요도보다 더 높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 청년들의 능력주의 인식이 소득불평등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지만 제한적으로 발휘된다. 주관적 계층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의 영향을 단순히 구분하여 추정하면 능력주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인식수준이 약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주관적 계층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의 교차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소득불평등을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모든 청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중하층이나 중간층 청년집단에서만 현저해지고 있음이 포착된다.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 블로그와 신문기사·칼럼 텍스트 마이닝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언제부터 대전시는 ‘노잼 도시’로 불리게 됐을까? 무엇이 ‘있거나’ 혹은 ‘없을’ 때 ‘노잼 도시’가 되는 걸까? 대전시가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왜 가지게 됐고, 어떻게 해야 이 불명예를 벗고 ‘대우잼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구가 시작됐다. 그러자면 우선 대전시가 진짜 재미없는 도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시’와 ‘재미’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대전 유입 방문자 수를 늘이는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는 대상에 대한 평가와 말이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SNS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노잼 도시’ 담론에 등장하는 단어와 주제, 시간 흐름에 따른 주제의 변화, 그리고 ‘노잼 도시’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 간 관계구조와 함축된 의미를 파악한다. Python을 통해 BeautifulSoup, gensim 등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여러 수집·분석 도구들을 활용한다. ‘노잼 도시’를 키워드로 수집된 신문기사와 칼럼 156건, 2015년에서 2021년 8월 사이 게시된 블로그 포스팅 5,875건이 최종 분석 대상이다. 신문기사와 칼럼은 당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정치와 무관하게 다룬다는 특징 때문에, 블로그는 장소 방문 경험과 느낌 등을 일기처럼 기술하는 점 때문에 분석 대상 텍스트로 선정됐다. 신문과 블로그 텍스트는 분리돼 분석됐으며, 형태소 분석에 필요한 신조어(꿀잼, 성심당 등)가 추가되고, 불용어는 삭제됐다. 분석에 활용된 품사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다. 신문 텍스트 분석 대상 형태소는 모두 7,254개이며, 블로그는 41,704개다.

‘노잼 도시’를 키워드로 한 신문기사와 칼럼, 블로그 포스팅은 2019년을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이전까지 ‘노잼’은 영화와 게임,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대전과 강력하게 연관돼 언급됐다. 출현 빈도에 기반한 핵심어를 찾기 위해 TF-IDF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 대전은 가장 높은 가중치값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수치도 증가했다. ‘노잼 도시’와 ‘대전’은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SNS에 등장했다. 달리 말하면, ‘노잼 도시’ 담론에서 대전광역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비중 있게 등장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노잼 도시’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브랜드라 볼 수 있다.

신문과 블로그 데이터에 대해 각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수행했으며, LDA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픽 수 결정 과정에서 coherence 값을 계산했다. 신문의 경우 최종 7개의 토픽 모델을 추출했고, 지역 문화사업과 시민, 특히 청년을 위한 도시개발·관광콘텐츠 관련 담론이 형성됐다. 개인 기록장의 특성을 지닌 블로그는 신문과 달랐다. TF-IDF 결과에서 블로그는 ‘대전’ 다음으로 ‘사진’과 ‘카페’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다. LDA에서 도출된 토픽 모델링은 사람들이 ‘노잼 도시’인 ‘대전’을 ‘여행’하면서 ‘예쁘고’ ‘느낌’ 있는 ‘카페’에서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드러냈다. 토픽 모델링을 2015년부터 시계열로 살펴보면, 사람이나 영화에 대한 ‘노잼’ 담론이 줄어들고, 대전 여행과 사진찍기 토픽이 확연히 중요하게 떠오른다는 걸 알 수 있다.

networkx를 통해 블로그 담론 내 주요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살펴보면, 대전과 동반 출현한 주요 단어들이 ‘카페’와 ‘여행’ ‘예쁘’ ‘사진’이며, 이들은 대전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연계를 구축한다. 의미 연결망 결과는 대전을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문화 콘텐츠들)이 그저 1:1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 대전과 성심당, 대전과 대전역, 대전과 소제동 등이 연계될 뿐, 보다 확장된 대전 방문의 연결망 커뮤니티는 생성되지 않았다. 수목원과 대동 하늘공원 등 유명한 장소들이 연결망에 등장했지만, 이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한다. 즉, 대전의 다양한 장소로 확장성 없이 특성 장소만 소비되고 마는 경향이 드러난다.

‘노잼 도시’ 답론 텍스트 마이닝 결과는 대전이라는 노잼 도시를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히로키(Azuma Hiroki)가 ‘데이터베이스 소비’에서 얘기하듯, 거대한 서사에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이 되려는 소비(여행)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다. ‘노잼 도시’라는 ‘모에 요소’가 ‘힙’하기 때문에, 그 요소를 즐기고 대표적인 요소 한두 개만 빨리 소비하고 이를 전시해야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힙스터)’이 된다. 그래서 ‘카페’와 ‘사진’이 중요했다. 카페는 이미 장소성이 잘 만들어진 곳이고, 스펙타클한 경관에 압도당할 장소도 아니다. ‘노잼 도시’ 대전에서 ‘숨어 있는’ 어떤 곳을 찾아내 자신이 이런 특별한 곳(문화 콘텐츠)을 소비하는 힙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여행이고, 요즘 장소성 소비 트렌드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 두고 대전시는, (여행 트렌드에 역행해) 역지로 장소들을 연계하고 서사를 확장하는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차라리 협소한 장소, 숨겨진 장소들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잼 도시’ 모에 요소도 곧 휘발될 수 있다. ‘힙’이 너무 잦아지면 더이상 ‘힙’하지 않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 결과는 어찌 되었든 대전이 ‘재미’와 연계돼 있다는 걸 드러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소비 콘텐츠를 제시하면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장소를 형성하는 정책 지원은 흔하지 않다. 대전의 모든 곳을 방문하라는 리드보다, 무심하게 있는 작은 장소를 은근히 드러내는 게 훨씬 ‘힙’할 수 있다.

REFERENCES

- 곽수정·김현희(2019),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트위터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 및 주제 분석”,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8(1): 13~18.
- 김건우·염기준(2019), “모에요소로 본 힙플레이스 지역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4): 37~52.
- 김남시(2015), “발터 벤야민 예술론에서 기술의 의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다시 읽기” *미학* 81(2): 49~86
- 류영진(2015),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과 한국소비문화에의 시사점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18(3): 187~223.
- 박명숙·오세연(2018), “사람들은 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가?-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쏘카이용자 소비감정 분석”, *소비문화연구* 21(2): 121~143
- 송지성·안병진(2020), “TF-IDF 알고리즘 분석법을 활용한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1): 233-244.
- 이기웅(2015),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흥대지역 문화유민의 흐름과 대안적 장소의 형성” *도시연구* 14: 43~85.
- 이민영·윤지성·정우성(2019),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난제 지형도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11.): 506~518
- 이수안(2011), “혼중 공간으로서의 카페와 유목민의 문화풍경” *문화와 사회* 10: 34~66.
- 정병화·김준우(2020), “도시재생의 장소성 변화 토픽 모델링: 대구 방천시장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 19(1): 27~44

- 홍성희·박준서·임승빈(2011), “환경계획·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Sense of Place’와 ‘Placeness’ 용어 비교 분석”, 한국경관학회지 3(1): 14~29.
- Ahn, Gayoung & Eun-Kyung Han(2019), “#Looksperfectgra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Contru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Use Insta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317~329.
- Hiroki, Azuma, Yuriko Furuhashi & Mar Steinberg(2007), “The Animalization of Otaku Culture” *Mechademia: Second Arc* vol.2, Networks of Desire: 175~187.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게임 기사 분석, 2010-2020년

이은정,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한국 주요 게임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게임’에 관한 담론이 가장 역동적인 2010년~2020년 동안 ‘게임’ 담론의 구조, 언론사 정파성에 따른 담론의 양상과 지난 11년 동안 게임 담론에 대한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선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경향신문이 가장 많았고, 한겨레신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언론의 보도량이 큰 폭으로 앞서다가 2016년부터는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을 앞서기 시작했다. 4개 언론사 보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 분석 결과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키워드 대부분은 게임산업의 경제적 측면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이 높았다. LDA 결과 15개의 토픽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게임산업 동향’, ‘게임 이슈’, ‘모바일 게임’, ‘CSR’ 등 4개의 담론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정파성에 따른 결과에서 보수언론은 ‘게임산업 동향’에 진보언론은 ‘게임 이슈’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1년간 ‘게임산업 동향’에 대한 기사는 2010년대 초반보다는 최근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게임 이슈’ 담론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CSR’ 담론은 2010년 초와 비교해 최근 4년 동안 비중이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언론에 나타난 게임 담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게임연구 및 방법론을 확장하여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데 기여한다.

주제어: 게임, 언론 보도,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LDA



동양사회/동양사상2: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동양사회/동양사상2: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사회 : 안효성 (대구대학교)

1. 천도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발표 : 박세준 (덕성여자대학교)
토론 : 정승안 (동명대학교)
2.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고찰
발표 : 이미림 (성균관대학교)
토론 : 이동일 (창원대학교)
3. 원불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발표 : 염승준 (원광대학교)
토론 :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4. 불교의 공동체(승가)의 원리에서 기본소득 이해하기
발표 : 이명호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토론 :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천도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박세준 (덕성여자대학교)

기본소득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아직 후보로 뽑히지 않았을 때부터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학계에서는 복지국가의 대체 또는 보완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본소득이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은 COVID-19이었다. 우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본소득에 대해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종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교리와 의례, 공동체를 통해 기본소득을 연결하기도 한다. 누구나 기본소득에 대해 한 마디 씩 거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본소득을 받는 대상에 따라 선별과 보편의 효과를 연구하거나 적정 수준의 금액을 계산하거나, 사회복지의 대체재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곤 한다. 특히나 최근의 연구는 대선과 맞물리면서 “진영논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각 종교에서 볼 수 있음직한 기본소득을 살펴본 다음 천도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을 밝히고자 한다. 각 종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을 살펴보는 까닭은 종교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규정하고 규범하는 높은 수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서구에 나온 개념이라면 아마 서구 문화 규범 속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일 확률이 높다. 다만 그 맥락이 이동하여 지금의 기본소득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종교를 통해 기본소득을 살피는 것은 결국 기본소득의 기원 혹은 핵심 정신을 찾는 것과 같다.

각 종교의 관점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서구의 개념인 기본소득을 한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서구 그대로의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정치, 세계경제, 세계문화, 세계체제 모두 세계체제에 편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맥락과 동양, 한국의 맥락은 다르다. 서구와 한국의 기본소득을 대하는 온도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동서양의 종교에서 기본소득을 대하는 관점을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서양 개념인 기본소득을 동양의 맥락에서도 살펴보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단순히 서구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넘어야 인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천도교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을 살펴보는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을 살펴본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다만 모든 사람의 범주에서 인구의 일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도 기본소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노인 연금”이나 서울이나 성남에서 실시했던 “청년 배당” 역시 기본소득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출산 장려금의 경우 “출산”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다자녀 장려금의 경우 “다자녀”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의 역사는 서양 맥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 정신문화의 정수인 “성경”에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만나를 줌거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마태 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해질 무렵에 와서 거의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이 마지막 사람(unto this last)’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을 줬다. 희년....

기본소득의 개념은 유럽과 미국을 넘나들며 등장했다. 먼저 미국이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중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은 “땅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유지를 나누어 주자”고 제안했고, 토머스 페인은 “토지로부터 지대를 걷어서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나누어주자”고 주장했다. 특히 페인은 ‘한 나라의 부는 모든 이전 세대들의 기여에서 나오며, 오늘날 운 좋은 사람이 운이 덜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하기도 했다. 19세기의 아브라함 링컨은 실제로 땅을 나누었고, 헨리 조지는 토지 불로소득에 중과세해서 다른 세금을 대체하거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고 주장했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명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기본소득 운동을 한 것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킹은 흑인도 백인이 가는 식당에 갈 권리를 쟁취하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막상 가고자 해도 갈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흑인들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했던 기본소득 운동은 암살당하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닉슨이 기본소득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원에서 부결한다. 하지만 1980년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1인당 300달러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킹의 구상은 명맥을 잇고 있다. 이 재원은 알래스카 석유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APF)를 통해 얻고 있다.

유럽의 기본소득은 20세기 초 영국 전간기에,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와 “국가 배당”과 같은 이름 아래 진정하게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에 대한 논쟁이 유명하다. 버트란트 러셀은 “필수품을 위한 충분한”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노동당원인 데니스 밀너는 “국가의 보너스”를 제안했다. 클리퍼드 더글라스는 “사회 신용”을, 콜과 미드는 “사회 배당”을 주장했지만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으로 이들 주장은 힘을 잃고 만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쿠퍼가 “소득 보장”만이 사람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영국에서는 기본소득연구그룹을 만들었지만 “제3의길”에 막혀 큰 반향이 없었고, 독일에서는 슈미트, 오페, 샤르프가 “그릇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지만 독일 통일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고르가 20,000시간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와 결합된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각 국가끼리 연결이 없이 단독으로 이어졌던 기본소득운동은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연대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누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일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잠재력이 곧 생산력에도 이어진다는 자본주의적 발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 소비를 미덕으로 바꾼 자본주의적 가치부여와 동일한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를 겪는 이들이나 돈이 없어서 식당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동학의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을 생각해보 수 있다. 광제창생이란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가난하거나 노동의 소외를 겪는 이들을 구제해야함과 연결할 수 있다. 보국안민이란 나라의 잘못된 점을 고쳐 백성의 안녕을 꾀하는 것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정치에 실패한 국가를 고쳐서 백성의 안녕을 꾀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동학/천도교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에 대한 실천도 요원한 상태다. 조선식 자본주의의 실천이 필요할 때다.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고찰

이미림 (성균관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삶의 문제는 경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늘 '분배'의 문제는 화두가 되었고, 최근에는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철학·사회등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적 키워드가 되었다. 최근 한국사회 또한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오면서 사회 계층별 '분배'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고 정치권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균등과 분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동시에 분배의 균등성에 대한 사회적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소득제도>이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복지적 개념이 아닌, '권리'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기본소득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그것으로 생계유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존재한다. 방법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법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느날 갑자기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않고 지나간다. 이는 현대 경제학에서 과거와 같이 방법론을 익혔다고 해서 평생 분배의 대상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제외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경제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그 안의 인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마땅한 기본재 중에 자긍심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재"라고 규정한다. 롤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복지에 대한 해답은 '보편'이다. 자긍심은 그 무엇보다도 바꾸기 힘든 기본재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 복지에서는 모두가 같이 받는 공공 서비스의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의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 가장 중요한 기본재인 '자긍심'에 대한 논의는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사회는 평등보다 '공평'을 지향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공평한 사회를 향한 지름길이기도 하며,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3. 균분(均分)과 분배적 정의

『논어』 「계씨」편에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 한다.”¹⁾는 말은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백성들이 가진 것이 적다거나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변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가져가는 재화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가의 문제에 있다. 평등이 아닌 공평한 분배의 가치를 이야기 한다. 오늘날 양극화와 함께 심각해진 사회적 분열의 양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고민해 본다면, 분배의 ‘고르지 못함’이다. 그래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를 전제로 하는 경제가 아닌, 정당한 분배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4. 유교적 관점의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은 현금소득이 아주 약간이라도 존재한다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논어』 「안연」편에서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얻는 것을 뒤에 생각하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先事後得 非崇德與)”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날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기본소득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동의 본질을 소득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다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삶의 질(德)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나오는 말

유교사회는 백성을 위한 경제적 안정, 즉 향산(恒産)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향산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말한다. 그리고 생업은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로 정의된다. 오늘날 생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업으로 정의되고 그것은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노동은 임금과의 교환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가치 창출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와 정치는 철학적 가치의 토대 위에 실시되는 정책들이어야 한다. 빈곤은 물질적 부족이 아닌 잠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태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진정한 경제성장은 인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교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도>를 고찰해 보는 것은 경제의 윤리적 차원을 복구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 추구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하나의 철학적 가치가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안이다.

1) 『논어』, 「계씨」: 子曰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원불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

염승준 (원광대학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earth Network)의 공동창립자이자 현재 명예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그의 저서 『기본소득』에서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를 1986년에 설립한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본소득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주장·사회운동—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문헌과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이 책에서 기본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하고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세가지 관점(정의·자유·보장) 및 경제적 근거를 논의한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반박, 특히 ‘감당가능성’(affordability)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을 다루며, 기본소득을 실행할 때 직면할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살펴본다.¹⁾ 본 발표의 기획주제가 ‘원불교의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이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소득의 이념과 실천운동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가 현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학, 정치학, 생명공학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도움—BIEN의 네트워크가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들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을 요청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은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종교 비판을 연상시킨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유발 하라리는 전지구적 문제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1) 기술적 문제, 가령,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극심한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정책문제, 가령,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3) 정체성 문제, 가령,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농부들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과 나라 사람들 문제에만 신경써야 할까?”, 라는 세 가지 차원에 문제에 대해 종교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걸치장”²⁾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집트인들은 알라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화학자, 곤충학자, 유전학자를 찾고, 정책 문제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근대 산업 경제와 세계 금융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카를 마르크스,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근대 경제학자들의 사회과학적 분석에 의지하여 답을 구해야 하는 처지이고 다만 “종교적 지식과 권위를 활용해 과학적 해답을 이런저런 쿠란식 운문의 옷으로 포장한 다음, 대중에게 알라의 뜻이라며 제시한다.”³⁾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 경제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먼저 이해한 후 그 다음에 종교 경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방식이 종교 경전을 ‘진정한 지식의 원천’이 아닌 ‘다른 것을 뒷받침하는 권위의 원천 정도로 강등’시켰으며 결국 현실세계의 정치 사회적 문제로부터 “종교가 상관성을

1) 가이 스탠딩 지음/안효상 옮김, 『기본소득』, 파주: 창비, 2018, 14~15쪽.

2) 유발 하라리/전병근 옮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파주: 김영사, 2019,

3) 같은 책, 201쪽.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이슬람과 유대교, 힌두교, 기독교 사상가들은 근대 유물론과 영혼 없는 자본주의, 과도한 관료 국가를 비난했다. 자신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근대성의 모든 병폐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의 영원한 영적 가치를 토대로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썄, 꽤 어려차례 기회가 주어졌건만, 그들이 근대 경제의 축조물에 남긴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라고는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지붕 위에 커다란 초승달(이슬람교의 상징-윤기이), 움(힌두교의 상징-윤기이)을 올린 것뿐이다. [...] 경제 문 제에서도 종교가 상관성을 잃게 된 것은 종교 학자들이 경전 해석에서 오랫동안 연마해온 전문 지식 때문이었다. 하메네이가 어떤 경제 정책을 택하든, 그는 언제나 쿠란에 맞게 해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쿠란은 진정한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다른 것을 뒷받침하는 권위의 원천 정도로 강등됐다.”⁴⁾

원불교적 관점에서 읽는 기본소득론이 ‘겉치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근대 과학 이론 다음의 보조적인 역할”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서구의 경우 근대 초기까지 모든 학문의 뿌리였던 형이상학과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인 신과 같은 종교적 ‘형이상자’(形而上者)를 망각한 근대 과학 이론의 ‘근대성’ 자체를 원불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핵심 이념인 정의·자유·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로서 공화국의 ‘공화주의적 자유’⁵⁾의 역사적 기원과 전통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공동체에서의 시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등을 통해서 모색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전략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가이 스텐딩이 “알렉시 드 토포빌이 초기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기술한 것”—기독교적 전통의 ‘동등자(equals)의 지위’와 공동체에 ‘존엄하게 참여할 가능성’—을 “안타깝게도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⁶⁾고 판단하는 것 역시 현재 미국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유산이며, 그 결실은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야 한다.”, 라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 그리고 신이 부여한 “재능이 신의 선물이고, 불평등하게 부여되었다면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과세를 해야 하며, 가장 은혜를 적게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가이 스텐딩은 기본소득을 “종교적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물질의 개혁’으로 진단하고 현실세계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원불교를 개교한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1943)의 깨달음인 ‘일원의 진리’와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우주만물의 근원인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네 가지의 ‘도’(道)와 도의 작용인 덕(德)의 ‘단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은’(四恩)의 실천 강령 등을 통해 원불교가 ‘기본소득의 목표’인 ‘사회정의·자유·평등·보장’⁷⁾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위해 본 발표에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본래 하나의 뿌리를 근원으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시키는 서구 근대성의 이성중심주의—근대 이성의 개별화의 원리가 주체와 객체의 경계 짓는 근본 원인이다.—와 기본소득의 논쟁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젠더 차별 그리고 ‘공유지의 약탈’⁸⁾을 은폐해 온 20세기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체제를 원불교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4) 같은 책, 202쪽.

5) 같은 책, 80쪽.

6) 같은 책, 82쪽.

7) 같은 책, 119쪽.

8) 가이 스텐딩/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파주: 창비, 2019.

불교의 공동체(승가)의 원리에서 기본소득 이해하기

이명호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1. 기본소득이 이슈의 한복판에 있다. 최근의 논의는 특정 후보의 정책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 논의배경을 그 하나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기본소득 논의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신기술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험 등이 섞여 있다. 때문인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입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이러한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즉,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알래스카, 핀란드, 네델란드 등 몇몇 정치공동체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정책실험’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관련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불교의 오래된 공동체인 승가공동체의 운영원리를 기본소득 관련 ‘정책실험’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간략하게 기본소득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2. 불교계도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방향이 아직은 ‘승가공동체’의 기본소득논의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불교 교리에는 이미 기본소득에 관한 철학적 기반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즉, ‘기본소득의 전면적 실현’을 사회를 향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성에 기초하여 승가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오래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사례는 ‘정책실험’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승무(2017)는 ‘승가형 기본소득 시론’이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을 ‘탐진치의 지멸과 삼법인에 내재한 사회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기반은 삼보의 물적 토대인 사방승가 정재(淨財)의 사회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승가의 구성원들은 상가가 공유하는 삼보정재의 물적 지지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방승가의 정재는 공공재로서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일체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사실적 차원에서 고정불변한 그 무엇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의해 지지된다. 즉 불교 핵심 교의인 삼법인에 기초한 존재-관계 방식이 그 담지자인 승가와 그 구성원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는 모든 출가자에게 1인당 월5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초 수행지원 보시금’이란 명칭의 승가형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현재 조계종단의 12교구 해인사에서 ‘기초수행비’라는 명칭으로 기본소득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구본사에 소속된 출가 10년 이상된 출가자 중에서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출가자들에게 월 15만원을 기초수행비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을 승납 10년과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또한 교구본사의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먼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기본소득제는 아니다. 하지만 기초수행비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출가자로서의 기본적인 수행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승가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승가형 기본소득제라 할 수 있다. 해인사의 기초수행비 제도는 교계와 사회에 기본소득의 ‘정책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른 교구본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3. 불교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소리없이 조용한 이유는 앞서 정리되었듯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탐진치로 이야기되는 인간 본성과 그 지멸에 대한 논리, 연기론에 기초한 총체적·관계적 세계관, 그리고 무아와 무상으로 이해되는 공공성(사회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불교에는 일정한 물질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운영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적 역량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이러한 목적과 지향이 초기불교 시대의 승가공동체에서 실험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승가의 경험을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승가의 운영원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승가공동체에서 신분은 평등하지만, 직분에 의한 구분은 엄격하였다. 개인의 능력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인정이 직분에 대한 존중으로 한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승가 구성원, 즉 출가자들은 승납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승원 내의 직분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에 따른 존중과 대우가 상이하였다. 하지만 승납과 직분의 차이가 오늘날처럼 물질적 보상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래서 ‘신분’으로 여겨지는 일은 없었다.

둘째, 승가공동체의 재화는 기본적으로 공유되었고, 개인소유가 허락된 물품도 필요 이상의 소유가 제한되었다. 그리고 승가는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라는 개념으로 구분되었는데, 사방승가의 재화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만 인정되었다. 때문에 사방승가의 모든 구성원은 필요하면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승가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물질적 구속에서 독립하였다.

셋째, 충분한 합의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이는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운영원리가 충족된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온전하고 개별적 존재로서 그 존재가치가 존중받을 때 가능한 원리다. 승가에서는 ‘갈마’라는 논의구조 속에서 승가의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형식이 상이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전제로 전원참석 원칙이 존재하였다.

4. 승가 내에서 출가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민주성, 창조성은 재화의 공유를 통해 물질적 독립을 획득할 때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즉 누구나 권리 실현이 가능한 공동체,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 승가는 재화의 공유와 사방승물을 통해 그러한 역량을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였다. 즉, 오늘날의 용어로 사용하면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협상력’을 제공하여,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과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소득의 조건인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은 개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족, 인구/노년

가족, 인구/노년

사회 : 김주현 (충남대학교)

1. Profiles of met and unmet needs of cognitively impaired older Singaporean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aregiver well-being
발표 :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토론 : 이민아 (중앙대학교)
2. When Home Becomes Classroom: The Shifting Roles of Korean Immigrant Mothers in the Management of Children's Education during COVID - 19 in the US
발표 : 정고운 (경희대학교), 임세정 (The Graduate Center, CUNY),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토론 :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3.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비교: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발표 : 임서연 (충남대학교), 황선재 (충남대학교)
토론 : 송유진 (동아대학교)

Profiles of met and unmet needs of cognitively impaired older Singaporean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aregiver well-being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Sung, Pildoo^a and Angelique Chan^{a,b}

^a Centre for Ageing Research and Education (CARE),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b Health Services and Systems Research (HSSR),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distinct profiles of care needs in older Singaporeans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their association with caregiver burde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thods

We apply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variable regression to data on 266 community-dwelling older Singaporeans aged 60 and older with mild to moderate cognitive impairment and their caregivers.

Results

Four need profiles are identified: (1) no need (38% of caregivers), (2) met social needs (29%), (3) met memory needs (17%), and (4) unmet social needs (16%). Compared to the no need profile, the unmet social needs profile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caregiving burden and the met memory needs profile is associated with a poor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scussion

A person-centered approach captures heterogeneity in the care needs of community-dwelling older Singaporeans with cognitive impairment. Policymakers should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s by need profiles to protect caregiver well-being.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비교: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임서연 (충남대학교), 황선재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이주민 고령화 현상에 주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영향요인 및 혼인상태별 차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과 노인빈곤 문제는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논의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비주류 영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노후준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오으로써 한국사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주민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고령사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보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사회를 일컫는데, 한국은 206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약 절반이 고령인구인 사회에서 노년기 삶의 보장은 중요한 화두이나, 현재 단시간에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한국의 노후대비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66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이렇듯 심각한 노후빈곤율은 각종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문화사회 또한 한국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가구는 2015년 299,241가구에서 2020년에는 367,775가구로 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체류 외국인도 2019년 250만 명을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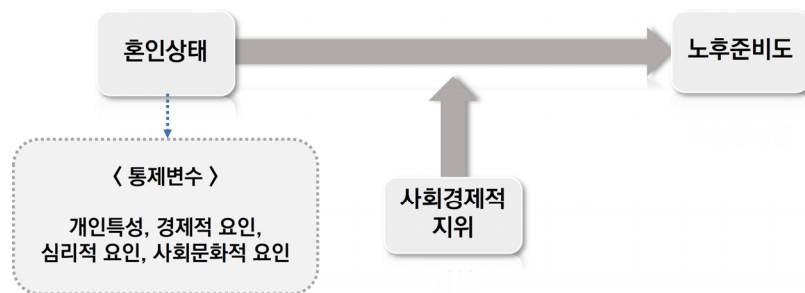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주목한다. 이는 앞선 다문화사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결혼이주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외국인 인구 증가의 흐름 속에서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지만, 이들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작지 않다. 이주 노동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만, 결혼이민자는 혼인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주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미래 한국사회 주요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후준비도에 대한 혼인상태별 차이와, 혼인상태별 노후준비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의 차이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이혼 추세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2010년대 들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0년 기준 6,174건으로 전체 이혼 총계의 17.2%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은 높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사별 위험 또한 높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이후의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에는 혼인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무배우 집단(기혼자 중 이혼·별거, 사별 상태)이 유배우 집단(기혼자 중 유배우 상태)보다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결혼이주자는 혼인 특성 상 내국인에 비해 배우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여성 집단 내부에서도 취약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우자 부재의 영향이 가중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노년기는 직업, 소득,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시기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까지 더해져 노후준비가 더욱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중 무배우자 집단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그에 따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 및 연령분포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지위, 노후준비도 현황까지 파악한다. 둘째,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혼인상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를 확인한다. 유배우와 무배우 집단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앞서 확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요인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반을 파악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 노후준비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인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혼인상태별로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노후준비도를 파악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아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이들의 노후준비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는 3.55%로 적지만, 40대가 23.70%, 50대가 10.31%라는 점에서 향후 10-20년 내 이 인구들이 60세 이상 인구가 편입되어 이주민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율이 비 전문직 비율보다 월등히 낮으며, 소득 200만 원을 넘지 않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과 빈곤 위험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둘째, 혼인상태별 교차분석을 통해 혼인상태별 노후준비도 및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 중 무배우 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배우 집단에 비해 낮아, 무배우 집단이 노후준비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전문직 비율도 유배우 집단의 절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비율이 더 높아 고용안정성도 더 낮고,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비율이 유배우보다 높아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혼인상태별 노후준비도 차이 및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는 유배우 집단과 무배우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배우 집단이 유배우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가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원 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도 높아졌으며, 반대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 분석을 통해 무배우 집단과 유배우 집단 모두에서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정될수록,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배우 집단에서 임금, 고용안정, 사회적 지위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고령화 논의에서 배제되어왔던 결혼이주민의 고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결혼이주민의 노후준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혼인상태별 차이를 연구했다는 점, 결혼이주여성 중 무배우 집단이 임금, 고용안정성,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밝혀내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질 제고 및 경제적 안정성 도모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노동

산업/노동

사회 : 황현일 (창원대학교)

1.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노사 권력관계와 이중노동시장: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성과와 한계
발표 : 최희선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토론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분석: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발표 : 남윤철 (고려대학교)
토론 : 이상지 (국회미래연구원)
3. 한국의 산업별 임금총액의 변화, 1990-2020: 다른 선진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발표 : 유한희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노사 권력관계와 이중노동시장: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성과와 한계

최희선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가 심화하면서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펼쳐왔다.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과 같은 외적 유연화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노동 숙련, 노동시간 조정, 일감 재배치와 같은 내적 유연화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는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며, 해고와 채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전략은 불확실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수단으로써 이해되어왔다. 그 결과 노동시간 유연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조직 개편 등의 목적 아래 이루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과 시간에 대한 권리는 간과되어 왔으며, 노사 간 권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쉽게 침해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노사 간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간에 대한 조직, 축소와 확대와 같은 결정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한 사례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의 제도적 기제, 실제 운용, 거시적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노사 간 권력의 측면에서 보기 위해 살펴볼 구체화된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사 합의 제도가 있는가?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제도가 제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봐야한다. 둘째,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실제 운용은 사용자와 노동자 중 누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가? 셋째, 이중노동시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는 고용은 유지한 채,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규칙적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외부 노동시장에 파급효과를 낳는지, 아니면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

독일의 노동시간은 크게 노동법, 산별노조 수준의 단체협약, 개별 사업장 수준의 사업체협약으로 규정된다. 독일의 노동법은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시간, 일 최대노동시간, 임금정산기간과 같은 법률은 근로시간계좌 운영에 큰 틀을 제시한다. 산별노조 단위의 단체협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일일 노동시간, 주간 최대 노동시간과 같은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한 큰 기준은 제시하고, 노동시간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은 개별 직장 단위의 사업체협약을 통해서 규정된다. 사용자나 노동자가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는 반드시 직장평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Hamm, 2008, 배규식 외, 2010, 이상민, 2011)

직장평의회는 노동시간 조정에 있어 노동자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독일의 직장법 제87조(§ 87 BetrVG) 공동결정권에 따르면 직장평의회는 일일 근무시간, 요일별 근무시간 분배와 같이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정하며, 노사 간의 중재자로서 노동시간 변동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사측에 비해 침해되기 쉬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직장평의회는 5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설립이 가능한데, 독일 내 직장평의회가 있는 사업체는 2017년 전체 사업체 대비 9~10%에 달하며, 직장평의회 영향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대비 약 39%에 달한다.(IAB-사업체 패널, 2017)

노동시간의 조정에 있어 핵심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상황과 기업의 업무조직과의 조정이다. 이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관리자나 사용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노사 간 노동시간 조정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이 노동시간의 적립과 채무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근로시간 기록 장치를 활용하고, 직장평의회는 노동시간 협의 전에 노동자가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신제품 발매 및 대량주문 등 업무의 중요한 변수들을 미리 고지한다. 하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기업은 사업체협약과 관계없이 노동시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조정에 있어 사측은 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노동자는 사측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기업 편향적인 합의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실사용에서 노동자의 필요에 따른 사용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eifert, 2019) 이는 독일의 노사합의제도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는 법률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일부 노동자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일정 노동시간이 확보되어야 노동시간의 차감과 증감을 통해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지속성이 낮고, 노동시간 자체가 적거나 불규칙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이 확보가 어려우므로 근로시간계좌제 활용이 어렵다. 기업은 근로시간계좌제를 내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율성, 고용 및 임금 안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유연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외부노동시장 노동력을 통해 만회하는 전략을 쓴다. 기업은 최소 단위의 핵심 인력을 고용하고, 그 외 주변 인력은 외주화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극대화한다. (Giesecke, Wotschack, Philip, 2009) 외부노동시장 노동자의 경우 교환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해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핵심 업무 외의 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한다. 즉, 노동시간 유연화의 혜택은 대부분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노동자들에게 모두 집중되는 반면,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노동자들의 혜택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불안정성과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계좌제는 내부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고용안정을 가져다주지만, 이로 인한 공백은 외부노동자가 메꾸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심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도는 노사의 권력관계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도 있다. 자본-노동-정부의 삼각관계에서 권력의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노동시간 유연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노사합의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노사 간 협의를 중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는 주로 내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절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내부·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노동시간의 문제에 놓여있다. 내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조정에 있어 자율성 실현의 문제를 갖는다면, 외부 노동자들은 짧은 노동시간, 불규칙한 노동시간, 노동의 비정기성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분절에 따라 상이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노동시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시, 외부노동시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분석: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남윤철 (고려대학교)

고용보험은 199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다수의 고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료의 주도적인 역할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설명은 행위자들의 입장과 활동 변화 설명에 약점을 보인다. 연구는 행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당화를 통해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서 도입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도입과정을 1980년대 초반 까지의 도입 지연기와 1990년을 전후로 한 도입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도입 지연기에 수용된 실업보험 아이디어는 성장으로 실업을 해소하려는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행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성 양쪽 모두를 부정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을 주장한 행위자들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제도도입에 실패하게 된다. 이에 비해 1980년대 동안 확산된 고용보험 아이디어는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노동 수요조정,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들을 포괄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도입 필요성에 기초한 정당화에 효과적이었다. 규범적 정당화 측면에서도 독일·일본 사례에 대한 추종, 복지국가의 제도적 달성, 신규 개혁정책으로서 정치적인 매력과 같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는 고용보험 도입을 반대하던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산업별 임금총액의 변화, 1990-2020: 다른 선진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유한희**

I. 문제 제기

한국의 임금구조와 관련해서는 1980-1989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Winter) 한국사회학에서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1990년에서 2020년 현재 산업별 임금 총액(정규직의 평균 임금)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이 높아지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가계를 유지하는 기본생활비에서 주택과 관련된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에 시작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정규직 형태로 늘어나는 젊은층과 중고령 노동층의 문제, 노인층의 빈곤 문제 등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현실과 맞물려 체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기업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알바나 비정규직의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 위주로 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¹⁾.

* 한국사회학회 2014년(Winter) 정치/민주화 쉼션 I에서 “한국임금고용구조는 노동정치 결과인가?”에 대한 논문을 썼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그것과 맞닿고, 시기를 1990년~2020년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2012년 7월에 취득(2013년 2월 졸업), 충남대학교 사회학과(1996~1997),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양교직학부(2013, 2014), 대구대학교(2016) 시간강사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에서는 객원연구원으로 있었고, “플타이머와 파트타이머비율의 비율을 통한 여성노동참가율 비교연구”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았다(NRF 2019S1A5B5A07107269).

1) 한국이 일본과 다르게 대졸자들의 취업, 임금구조, 수요예측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기업의 인재 채용과 관련한 방식과도 연관되겠지만,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 국내의 특정분야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검토,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인데, 즉, 취업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적극적인 인재 모집 및 고교졸업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전공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의 주제를 기존의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남녀 임금격차, 비정규직의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주제를 잡았다. 즉, 교육과 취업의 문제를 지금의 한국사회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는 기업의 규모를 키웠으며, 그 결과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졌어야 한다. 그러나 3~40대와 20대의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임금의 상승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그 원인은 한국사회 내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임금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이론적 자원 및 경험적 연구 결과)

1. 임금과 관련된 이론

- 1) 효율임금가설: 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막는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노동시장 분절이론: 임금이 높고,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1차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2차노동시장으로 나누어졌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한국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도 종신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분절론으로 임금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 3)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 일본기업의 고용관행이기도 했고, 1990년대까지도 그런 관행이 유지되었으나,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IMF이후 가속화된다.

2. 노동정치와 관련된 논의

한국이 어느 시기에 임금이 높아지고, 그러한 임금상승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이 일어나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987년 이후 한국의 임금수준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아졌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의 수는 85만2000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4.4%에 이른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3. 선진국과 비교(business 분야)

Singapore Business Review 2017에 따르면 business 분야의 세부 직업에서 경력 연수별 임금액수가 나타난다.

I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 1) 한국 산업별 임금총액, 2009~202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2009-2020
- 2) Salary Survey 2017
- 3) 한국의 임금구조

2. 방법론: 시계열 분석

- 1) 시계열 추세를 살펴본다.
- 2) 1997년 IMF와 2007년 글로벌 위기 이후 임금총액의 변화
- 3) 코로나 시기 고용의 변화와 임금총액의 변화

IV. 결론

한국의 산업별 임금총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수준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서 빠르게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제도의 관행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업무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력에 의한 스펙에 의한 이동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높은 임금이 낮은 복지제도를 보상하는 사회로 갈지, 낮은 임금과 보편적 복지확대로 나아갈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높은 임금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최저 생활도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의 중상위권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이면서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한희 2014 한국임금고용구조는 노동정치적 결과인가?, 한국사회학회 2014년(Winter), 정치/민주화세션.
“Salary Survey 2017” 2017 Singapore Business Review Issue No. 77; p. 32~35.

자료: kosis 통계표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회계층/불평등2

사회계층/불평등2

사회 : 정인관 (송실대학교)

1. 중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연구
발표 : SHAO HONGDUO (경희대학교)
토론 : 박 우 (한성대학교)
2. 대학서열과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 초기 소득불평등 분석
발표 : 이수빈, 고원태 (연세대학교)
토론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3.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발표 : 연혜원 (서강대학교)
토론 : 임영신 (서울대학교)

중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연구

SHAO HONGDUO (경희대학교)

문제제기: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남녀평등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여성 취업자를 늘려오며 사회변화를 주도해왔다. 1979년 이후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고용 패턴이 국가 통합분배에서 노동계약제로 바꾸고 이후 완전히 시장 조절로 이행되었다. 이 시기부터 여성 취업자 수량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공간이 넓어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성차별 현상은 갈수록 보편적이고 심해지고 있다. 최근 '35세 여성 직장 곤경', '직장여성은 결혼사실을 숨겨야 하는가?' 등 노동시장 내 성차별 관련 회제가 중국 대형 포털 웨이보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이라는 이슈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질문:

1.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과 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즉, 노동시장 내 성차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2. 중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3. 출산은 여성의 직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와 이론:

이론부분은 총 다섯 개 이론이 있다. 인적자본이론, 젠더 이론, 유리천장 이론과 일-가족 충돌 이론 그리고 성별 직업 분리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론과 젠더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선행연구 부분은 주로 서구, 한국과 중국의 연구가 세가지로 나뉘어서 개술했다.

중국 사회배경:

중국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는 중국 사회 특유의 사회경제구조 변혁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이 두 가지 운영체제를 거쳐 나타났으며, 이것은 중국 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의 제도 변혁과 이에 따른 소유제 형태의 개편, 기업경영체제의 전환을

시작했다. 취업 메커니즘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을 취업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문화배경은 주로 중국의 전통적인 성별문화, 성별관념과 성별 분업에 집중되었다. 현재 전통적인 성별 문화 관념은 여전히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남성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반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가장 큰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중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즉, 웨이보에 게시된 관련 댓글을 내용분석과 노동시장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내용분석 대상은 웨이보 화제 “직장여성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에 달린 총 400 개 댓글(‘좋아요’ 수의 높은 수에서 낮은 수로 순서대로 수집했음)을 선정했고 인터뷰 분석은 중국사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총 12 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나이는 25 세~33 세다.

분석결과:

우선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겪는 성차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은 남성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더 적고 문턱은 높아 남성이 얻을 기회와 맞지 않는다. 기업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채용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여성의 기준은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성차별이 은밀한 성차별로 전환되고 있다. 또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수준 높은 직종에서 배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여성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성차별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가사분업 패턴과 여성이 주요 가족부양자로 인식하는 것에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은 노동시장 진입한 후 여성이 만난 성차별이다. 여기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두 가지로 나눴다. 미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겪는 성차별에 대한 연구 결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크고 여성의 능력을 인정받지 않고 남성은 발전 기회가 있는 업무에 적합하고, 여성은 단순업무, 사무보조 등에 더 적합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여성은 자원과 승진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은 남녀 비율 차이가 크고, 여성은 경영진 진출이 적어 남성은 기업 경영에서 지배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에 민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여성의 출산에 대해 처벌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 부당한 회식 문화가 존재하고 여성은 남성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겪는 성차별에 대한 연구 결과 성차별이 주로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은 여성 직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출산은 기업이 여성의 승진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주책 임자로 보는 관념에서 비롯된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하에서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일과 가족 충돌, 이중압력을 겪고 있다. 또 여성은 출산을 경험한 뒤 직업의 하향 이동이 시작한다. 이는 강직 감봉, 해고,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출산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단은 대부분 여성들이 압력 하에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도록 유인하는 데 쓰인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모든 기혼여성은 출산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직업 중단이 발생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즉, 임신이나 출산 후 노동시장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타협하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기혼여성이 경력단절기를 많이 경험하지만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은 일시적이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중국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두 자녀 정책 배경 아래 기업들은 여성의 2 차 출산에 대한 우려와 전통적 분업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시 직업수준에 대한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여성들은 가정 돌봄과 육아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고 임금과 직업 수준 등에 대한 요구는 낮춘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경력단절기를 지나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직업발전에 지장을 받고 직업수준의 하향 이동이 두드러진다.

마지막은 노동시장 성차별이 존재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을 분석했다. 원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세 가지 원인은 법적 남성 출산휴가의 부재, 두자녀 정책의 실시, 일부 여성 직장 규칙에 대한 파괴다. 또한 여성은 주로 네 가지 대응 형태가 나타났다. 여성 결혼 출산에 대한 거부, 기업의 행동에 대한 이해, 다른나라의 노동시장으로 이동, 여성이 더 높은 학력 추구이다.

대학서열과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 초기 소득불평등 분석

이수빈, 고원태 (연세대학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소득은 누적의 효과로 장기적으로 생애 소득(lifetime earnings)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애 과정에 있어 장기적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DiPrete and Eirich 2006; Kim, Tamborini, and Sakamoto 2018) 즉, 동일한 코호트 내부에서도 집단(대표적으로 학력)에 따라 소득의 증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Cheng 2015; Torche 2015)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도 청년층이 학교-일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면서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을 노동 시간, 근로 형태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분류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다. 그러나 일자리의 특성(정규직/비정규직 등)과 임금이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성과에서 핵심적인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임금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초기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다. 노동시장 소득 불평등 예측에서 교육은 핵심적인 설명변수로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교육수준 간 불평등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육부문 내에서의 불평등 특히 고등교육 부문 내에서의 수평적 불평등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고등교육 부문 내에서의 수평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대학 서열과 전공이 주로 지목되고 있으며 (Gerber and Cheung 2008; Kim, Tamborini, and Sakamoto 2015; Witteveen and Attewell 2017), 이들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Quadlin, Cohen, and VanHeuvelen 2021). 한국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70%에 이르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졸 취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이와 같은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평등 국면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서열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전공계열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 서열의 임금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전공계열과 성별에 따른 대학 서열의 임금 효과는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상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자료를 수집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통합하여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의 서열성(selectivity)과 전공(field of study)의 역할 파악 및 그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은 1980년대부터 그 이후에 출생한 4년제 대졸자 표본을 성별에 따라 분할하여 대학 서열, 전공계열 및 졸업연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검토하며, 응답시점 연령, 졸업 평점, 청소년기 성장지, 부모 학력 및 부모 소득 분위가 통제된다. 선형 회귀분석과 헤크만 선택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확인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경우, 기초 비-STEM 전공계열에서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이 가장 높고, 기초 STEM 전공계열에서 상위권 대학 프리미엄이 가장 약하다. 여성의 경우, 응용 STEM 전공계열에서 상위권 대학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전공계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둘째, 이러한 효과의 추세, 상위권

대학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의 추이는 최근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다만 여성의 감소 기울기가 근소하게 더 높다. 셋째, 모든 전공계열에서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응용 STEM 전공계열에서 상위권 대학 프리미엄의 감소세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 STEM 전공 계열에서는 최근으로 오면서 상위권 대학 프리미엄이 사실상 사라진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응용 STEM 전공계열에서 프리미엄의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연혜원 (서강대학교)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률이 80%가 육박하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위험 저수익 저임금의 공업계 직종을 목표로 하는 직업 교육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집단이다. 공업계고등학교 연구는 산업계 변화에 따른 학교의 대응 전략 연구와 직업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직업 훈련 효과와 진로 설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체 사회 구조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성인이행기의 초점을 맞춘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30명과 교사 12명을 심층면접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인이행기 전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등 학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교육 진학 대신 취업을 목표로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 생존전략을 구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늘 학업 성과를 근거로 무능력 낙인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취업 교육을 추천받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연구참여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 취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능력 낙인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성과를 가져온 '학교'라는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학 진학 보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학교는 직업교육 과정에서 학력주의를 극복할 수단으로 강조되는 능력주의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전략을 지지한다.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과정에서 학력주의를 능력주의로 극복시키려는 중등 직업교육의 교육 이념은 고등교육 학벌과 학력 취득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를 분리하여 사고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의 원인을 개인화 하도록 한다. 공업계고등학교는 여러 정책을 통해 학력보다 능력이 중요한 사회라는 능력주의 구호를 주지시킴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낙인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지만, 학력과 직업 능력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사회의 능력주의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성인이행기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 현장실습 이후 학생들은 산업 현장의 공고한 학력주의를 깨닫게 되지만 학습과정에서 내재한 능력주의를 통해 차별받는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전가한다. 성과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이미 내면화된 연구참여자들은 학력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인이행기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집단은 진로교육 위주의 선행연구와, 대학생 위주의 청년 집단 연구에서의 배제가 교차되는 지점에 놓인 집단으로, 청년 집단으로서 이들의 성인이행기 전략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글의 연구결과는 학업 무능력 낙인에서 고졸자라는 학력 낙인으로 낙인의 영속성이 강화되는 과정에 성인이행기를 보내는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집단에게 학교의 이들의 생존전략 구상 과정에 어떻게 낙인을 내면화하고 개인화 하는지 밝힘으로써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집단 연구가 가진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보상해야 한다는 능력주의(마이클 영, 2020)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비단 공업계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 및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이미 학력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배분이다. 능력주의 신화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손준중, 2004).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업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취업 교육을 추천 받고, 나아가 공업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고위험 저숙련 저임금 노동현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진로기회가 집중되는 것은 능력주의 사회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경제권을 공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업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교육정책이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인 노선을 밟기 시작한 이래로(정진희, 2010) ‘능력중심 사회’는 꾸준히 국가 교육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을 시장이자 상품으로, 교육수용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교육수용자와 공급자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반면 경쟁의 낙오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할 뿐 아니라 ‘교부금 차등화’와 ‘교원평가제’ 등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경쟁 시킨 성과로 평가함으로써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 해마다 취업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직업계 고등학교로 하여금 갈수록 학생들에게 능력주의를 더 강하게 주입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주입된 능력주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차별적인 사회적 대우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연구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학업성과 학력차이에 의한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에는 공업고등학교 학생 집단 내에서도 젠더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업고등학교 학생 내 불균등한 성비로 인해 학생 가운데 여성을 한 사람밖에 심층면접을 하지 못하여 젠더에 따른 성인이행기 전략의 차이를 밝혀낼 수 없었던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참고문헌

- 손준중. 2004.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2호, 135 ~ 153쪽.
영 마이클. 2020. 『능력주의』. 유강은 역. 이매진.
정진희. 2010.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 마르크스21, 제5권, 95 ~ 115쪽.



특별(연세대학교 BK21):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특별(연세대학교 BK21):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 : 임정재 (연세대학교)

1.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토론과 혐오: 시민 참여의 양면
발표 : 권은남 (연세대학교)
2. 모성의 의료화: 맘카페의 모유수유 담론을 중심으로
발표 : 송민이 (연세대학교)
3. 토픽 모델링을 통한 무작위 쌍대비교 문항 분석
발표 : 송준모 (연세대학교)
종합토론 : 이선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토론과 혐오: 시민 참여의 양면*

권은남 (연세대학교)

본 글은 온라인 공론장의 등장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혐오 표현에 관해 이야기한다. 온라인 공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토론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낙관적으로 보는 라인폴드와 디마지오는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마지오(2001)에 따르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 인터넷은 정보의 접근과 확산을 촉진시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를 숙의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인폴드(1993)는 온라인 공간이 이러한 전자적 숙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리스(2002)와 선스타인(2007)과 같은 학자들은 비관론적 입장을 갖는다. 인터넷은 가입과 탈퇴가 쉬우며 자신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자와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처럼 자기선택성이 강한 인터넷의 특성상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진 입장과 일치하는 의견을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형성은 어렵다. 따라서 낙관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숙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 극단적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다른 집단과는 대립하게 되는 ‘불통’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 즉 중우정치(衆愚政治)를 조장할 수 있다.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과 비관론적 입장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인터넷 공간의 특성이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연구는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토론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개방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다음아고라’를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자료로 제19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게시물을 수집하였으며, 주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게시물의 추이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변하는 논의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Word2vec을 이용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분석을 시행했으며, 후보이름과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양성은 여러 의견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적 측면, 그리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가에 대한 참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아고라 내에서는 두 측면 모두에서 다양성이 충족되지

* 본 원고는 권은남·강정한. (2021).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토론과 혐오: 시민참여의 양면”. 조화순 편. 『네트워킹과 혐오사회』. 한울엠플러스. pp. 162-205.를 2021 정기사회학대회 특별세션 발표를 위해 재구성한 원고이다.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수와 반대수가 높았던 게시물을 살펴보면 각 후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보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이용자가 대부분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숙의와 참여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머츠(2006)에 따르면 적극적인 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집단을 선택하여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아고라 내에서는 세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라는 다음아고라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적극적이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 후보에 대한 논의의 맥락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상위 10%의 적극적 참여자들의 지지 성향을 분류하였으며, 이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PCA분석과 Word2Vec을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실시했다. PCA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 지지 집단은 다른 두 지지 집단과 달리 정치적 논의들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두 지지 집단은 대통령이라는 선거의 최종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각 후보를 논의하기보다 후보 간의 비교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문재인 후보 지지 집단은 다양한 주제들을 경쟁 후보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이 부족했으며, 다른 두 지지 집단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조차 대통령과 관련지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Word2Vec을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통해 세 후보지지 집단에서 실제로 무슨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특정 주제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기존에 형성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반대 입장들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하여 지지를 밝히기보다는 지지하는 후보의 부정적 이슈를 반박하거나 타 후보와 진영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아고라 내에는 세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이 모두 존재하기는 했지만 후보들의 지지/반대에 대한 의견적 측면과 다양한 이용자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참여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후보들의 정치적 자질을 평가하기보다 자신과 다른 입장들을 적대시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공약을 구심점삼아 논리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 감정적인 우열가리기로 흐른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 공론장의 낙관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성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내부집단의 의견을 확고히 함으로써 혐오와 갈등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등장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긍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했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토론 참여자들의 이성적인 사고와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거리의 촛불과 온라인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종류의 시민의식과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결과는 정부정책 및 현실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토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공간을 갈등의 증폭 기제로 치부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조건을 계속 탐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모성의 의료화: 맘카페의 모유수유 담론을 중심으로*

송민이 (연세대학교)

1. 서론

모유수유는 어머니와 아기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이다. 영유아나 어머니에게 갖는 여러 이점과 장점 등을 설파하는 문헌에서 보듯이, 모유수유는 그것이 갖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친밀성의 형성과 정서적 교감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여러 양육 활동 가운데에서도 모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모유의 기능적 측면은 단순히 모유수유를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다. 영유아기에 평생 건강과 면역력이 결정됨을 입증하는 수많은 의과학적 자료들은, 이 시기를 책임지는 어머니 역할과 특히 모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모유수유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¹⁾. 한국사회의 높은 맞벌이 비중,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현실적으로 모유수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모유를 얼마나 성실히 수유하는가는 모성을 실천하는 기준처럼 여겨지며, 모유수유는 모성을 경쟁하고 전시하는 상징적 행위로까지 전화된다(김보성·김향수·안미선, 2014; 장현진, 2021).

기존 연구에서 모성은 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 친밀성, 감정을 강조하는 심성학적 접근과 모성을 생물학적 여성의 타고난 본성과 같이 처리하는 생물학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김혜경 외, 2014). 이러한 관점들은 모성을 자연스러운 감정 또는 타고난 본성으로 자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성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모성을 실천하는 방식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모유수유라는 행위를 통해 모성의 실천 방식이 과학화와 합리화를 넘어 의료화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끈끈하고 따뜻한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모성이 냉철하고 합리적인 과학 및 의료기술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과학화된, 의료화된 모성은 어떤 담론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과학적 모성”(scientific motherhood)은 모성의 실천이 과학적 관리와 원칙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정당하게 간주하는 사상을 말한다(Litt, 2000: 15). 본 연구는 이러한 모성 실천 방식의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의료사회학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모성이 과학화와 합리화를 넘어 의료화 되어가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모성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모성의 의료화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가들의 공적 지식과

* 본 원고는 왕혜숙·송민이, 2021. “모성의 의료화: 맘카페의 모유수유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4(3), 213-245.”를 2021 정기사회학대회 특별세션 발표를 위해 재구성한 원고이다.

1) 유니세프의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후 6개월까지의 완전모유수유율은 18.3%로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38%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한국, ‘완전 모유 수유’ 비율 18%...이유는?”, 경향신문, 2016.11.20.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611201412001#c2b>,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어머니들의 사적 지식 및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공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한 온라인 맘카페의 게시글 가운데 ‘수유’와 관련된 글들을 분석하여, 모유수유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가 어떻게 온라인 상의 언어로 표현되고 공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무엇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이용자들이 모여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분석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300만 엄마들의 소통 공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커뮤니티는 국내 최대의 육아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으며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맘카페’는 ‘은평 맘스홀릭’, ‘속초 맘스홀릭’처럼 지역을 단위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맘스홀릭 베이비’는 전국 단위의 커뮤니티이며, 맘카페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여러 환경에 놓여있는 어머니들이 모여 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육아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중에서도 수유질문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유를 하면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는지 모유수유에 좋은 음식부터 모유수유를 보조해주는 육아용품, 가슴 마사지까지 수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맘카페의 “수유질문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16일 동안 ‘맘스홀릭 베이비’의 ‘수유질문방’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 약 5,000여 건을 웹크롤링(Web Crawling)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항목은 게시글 번호와 게시글 제목, 본문, 게시날짜이며 게시글의 본문을 주요 분석에 활용하였다. 크롤링하여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주로 명사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등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전을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명사 단어를 추출해낸다. 이때, ‘하다’, ‘하게’, ‘하면’, ‘해서’와 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어들은 불용어로 처리하였으며, ‘젖병에’, ‘젖병으로’ 등 비슷한 의미로 추출된 단어들은 ‘젖병’의 유의어로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모유’와 ‘모유수유’, ‘아기’와 ‘아이’, ‘아가’와 같이 의미가 같은 단어는 동어로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조어나 은어, 브랜딩 이름과 같은 대명사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사전에 추가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완모(완전모유수유의 줄임말)’, ‘완분(완전분유수유의 줄임말)’, ‘혼 합수유(모유와 분유를 혼합하여 수유하는 방식)’, ‘더블하트(젖병으로 유명한 브랜드)’ 등의 단어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항목의 전처리 과정 후 최종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게시글은 4,947건이다.

최종 분석대상 4,947건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이 연구는 수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유질문방’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단어의 빈도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단어간의 유사도 분석(Word2Vec) 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R(4.0.2 버전)을 사용하였다.

‘수유질문방’에서 엄마들이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기반으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텍스트 분석

기법을 말한다(Blei and Lafferty, 2007). 이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기법 중 가장 자주 쓰이는 모형인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LDA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의 잠재된 특정 토픽을 나타내며 이때 토픽은 관측된 단어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Blei et al., 2003). 즉, 단어들의 집합인 문서에서 특정한 토픽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여 클러스터링해주는 것이다. 이때 관찰되는 토픽의 수는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토픽 수를 도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R의 ldatuning 패키지를 이용하여 2개의 토픽 수부터 20개까지 존재할 경우를 테스트하였으며, 각 토픽 내 단어의 분포와 의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서 사용하는 토픽의 수를 8개로 결정하였다.

주요 단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Word2Vec 모델을 활용하여 단어 간의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Word2Vec 은 구글 연구팀이 개발한 분석 방법으로, 같은 맥락의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벡터값을 계산해준다(Mikolov et al. 2013). 이러한 벡터값은 각 단어의 위치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값을 구해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단어 사이의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단어들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수유와 관련된 핵심 단어인 ‘아기’, ‘엄마’, ‘가슴’의 세 단어를 선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10개 단어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4.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맥락 내 단어가 등장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텍스트(게시글)에 잠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수유질문방의 게시글에 나타나는 키워드를 주제별로 묶어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 1>는 주제를 8개로 설정했을 때의 결과이다. 이 표를 통해 주제별로 자주 언급되는 상위 30개의 단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표 1> 토픽모델링 결과 (30단어)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1	오늘	하루	젖병	단계	모유수유	개월	조리	유축
2	어제	새벽	젖꼭지	압타밀	생각	이유	일차	가슴
3	궁금	수유팁	문제	추천	아이	아가	직수	직수
4	아가	몸무게	더블하트	고민	병원	시작	혼합	단유
5	방법	막수	중간	프레	엄마	완모	보충	마사지
6	이상	아침	거부	소화	완모	걱정	신생아	출산
7	한번씩	저녁	짜증	퓨어락	진짜	하루	부족	유두
8	얼마	총량	사용	부탁	첫째	조언	생후	젖양
9	도움	통잠	트림	완분	다들	거부	혼합수유	양쪽
10	계속	자기	하나	산양	가능	경우	퇴소	제왕
11	공유	사이	불편	노발락	마음	조금씩	처음	초유
12	이틀	평균	사출	먹이	둘째	언제	일정	오른쪽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13	초반	횃수	사이즈	아이엠마더	완분	고민	오늘	왼쪽
14	안되서	밤수	비슷	프로	필요	안먹고	초보	자연
15	보관	여아	시도	푸트라	스트레스	우유	애기	보호
16	마지막	수유량	소리	변비	준비	부탁	초산	젓몸살
17	얼굴	오늘	꼭지	황금변	남편	동안	모유량	한쪽
18	그동안	낮잠	정체	유산균	선생님	체중	위주	언제쯤
19	질문	저희	머칠	스폰	상태	경험	도우미	통증
20	구매	기저귀	지금	위드맘	나중	부터	내일	단단
21	하루	오후	난리	배앓이	예정	선배	퇴원	오늘
22	먹는거	밤잠	자세	명작	애기	안먹어서	황달	유방
23	먹이	오전	어찌	답변	주변	남아	하나	방울
24	분만	걱정	공기	액상	효과	확인	소아과	유선염
25	잘못	꿈수	얼마	적응	백신	중기	유축한거	함몰
26	저희	다음	반복	주문	어느정도	문제	하루종일	패드
27	선택	안주	고개	임페리얼	산후	완전	육아	오케타니
28	처음	목욕	실감	풍당풍당	걱정	이전	계획	찌릿
29	전체	안해	답답	기준	대부분	속상	안나와서	아침
30	추가	완분	쿠션	앱솔루트	고생	머칠	먹이	시도

Topic1은 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응집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수유와 관련된 질문 게시글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기본적 단어 들이다²⁾. Topic2는 수유 시간과 적정량에 대한 키워드가 다수 등장한다. 이는 앞서 빈도 분석에서 보았 듯이 수유를 더욱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의도를 반영한다. 특히 Topic2에서는 수유 방법을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계량적 용어들과 함께 아이의 신체적인 상태와 특징과 관련된 단어들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수유팁’, ‘몸무게’, ‘총량’, ‘수유량’). 특히 <표 1>의 빈도분석 에서 확인한 맘카페 회원들만이 사용하는 특정한 조어, 줄임말들이 Topic2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제보다도 수유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규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회원들끼리 쉽게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Topic3는 수유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인 ‘젓병’과 ‘젓꼭지’ 물기에 대한 단어들도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젓병’이 핵심적인 단어라는 점에서, 분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이 겪는 문제들로 파악된다. 이는 어머니 들은 분유를 젓병과 젓꼭지를 통해 수유하는 방식에 대한 아기들의 반응이 주요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이 보이는 ‘거부’, ‘짜증’, ‘불편’과 같은 반응은,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상상하여 표현한 단어들이다. 이는 여러 조건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고 분유를 수유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안녕(하세요)”와 같이 수유 관련 질문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단어들이다. 간단한 인사와 같은 표현은 전처리과정에서 제외하였으나, Topic1에 포함된 질문 내용에 포함된 평이한 단어들은 분석에 그대로 포함 시켰다.

Topic4는 주로 분유수유와 관련하여 분류 브랜드에 대한 추천 및 질문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직접적으로 상품명이 거론되며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상품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다 수를 이룬다. 여기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유 브랜드가 언급되며, 이러한 분유들의 효과를 아기의 배변 상태(‘소화’, ‘황금변’, ‘변비’)와 연결하여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상품의 질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Topic5 는 모유수유, 완모 등의 단어들에 언급되는 맥락을 통해 분유가 아닌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들이 올리는 글들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Topic6 과 Topic7 은 초보 어머니들이 겪는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주를 이룬다. ‘첫째’를 ‘처음’(Topic5) 출산하고 육아를 경험하는 초보 어머니들이 처음 맘카페에 가입하면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부탁하는 단어들(‘궁금’, ‘도움’, ‘공유’: Topic6) 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신생아’, ‘퇴소’, ‘생후’, ‘혼합’, ‘포기’(Topic7) 등의 단어의 등장 역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대해 고민하는 주제의 글들임을 알 수 있다³⁾.

Topic8의 경우 핵심 주제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신체 부위인 가슴과 모유수유를 연관시키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이 올리는 글이다. 특히 여기서는 어머니 자신의 가슴의 형태(‘양쪽’, ‘오른쪽-왼쪽’, ‘유두’)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가슴이 모유(‘젖양’, ‘모유량’)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관리하는 방식(‘젓몸살’, ‘마사지’)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상위에 나타난다. 이러한 단어들의 등장은 모유수유를 위해서 어머니 자신의 몸, 그리고 핵심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유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머니들의 고민을 반영한다. 또한 앞서 본 모성의 의료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이의 신체로부터 어머니 자신의 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더욱 세밀하게 아이(Topic2) 와 어머니 자신의 몸(Topic8) 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통제와 관련된 담론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게시글들을 대상으로 단어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아이’ 및 ‘엄마’ 뿐만 아니라 특히 모유수유에서 중요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중심으로 한 단어들의 응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유사한 주제의 맥락에서 언급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엄마, 아이, 가슴의 단어유사도검사 결과

	‘엄마’ 유사 단어	코사인 유사도	‘아이’ 유사 단어	코사인 유사도	‘가슴’ 유사 단어	코사인 유사도
1	초보	0.790	크다	0.931	단단하다	0.806
2	초산	0.776	작다	0.844	멍치다	0.784
3	낳다	0.716	때문	0.762	딱딱하다	0.782
4	키우다	0.674	너무	0.741	말랑하다	0.770
5	에게	0.674	크게	0.736	통증	0.768
6	육아	0.660	심해지다	0.727	오른쪽	0.730
7	육십	0.657	정체	0.723	누르다	0.725
8	미안하다	0.645	정상	0.718	유방	0.711
9	그동안	0.634	심하다	0.711	열	0.706
10	고생	0.629	찌다	0.701	부분	0.700

3) 특이점은 Topic6 에 ‘백신’이 등장한 점이다. ‘백신’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모유수유가 가능한지 이야기하는 글들이 다수이다.

분석 결과는 ‘아기’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단어와 ‘엄마’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단어들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먼저, ‘엄마’라는 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은 주로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욕심’, ‘미안’)들이다. 이는 수유를 포함하여 출산과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엄마(‘초보’, ‘초산’)의 미숙함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또는 그렇게 상상되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엄마’와 높은 유사도의 단어들은 주로 정서적, 감정적 단어들이다. 반면, ‘아기’와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단어들은 아기의 성장발육을 수치화, 계량화하는어들(‘크다’, ‘작다’, ‘정상’, ‘찌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놀라우리만치 단순하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기슴’의 상태, 질감, 통증을 묘사하는 자세하고 정밀한 언어들로 비교해보면 ‘아기’에 대한 묘사와 표현의 단어들의 단순성은 더욱 대비된다. 이는 아기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공감,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동시에 아기의 몸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객관적 접근을 하는 이중적인 모성의 과학화, 합리화의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Topic2에서 확인했듯이, 다양한 은어, 줄임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합리적 태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반면, Topic2 에서 확인했듯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증상을 표현하는 언어들로 구사하는 점은, 자신의 몸을 의료화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세밀함을 통해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을 관찰하는 의료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의료화의 주체이면서, 객체라는 동시성을 드러낸다.



특별(한중)2

특별(한중)2

사회 : 김부용

1. 코로나확산 후 부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의 변화에 대한 소고

발표 : 예동근, 조아약 (부경대학교)

토론 : 주아평 (중국 난주대학교)



대학원1(노동)

대학원1(노동)

사회 : 황현일 (창원대학교)

1. 야간노동자의 여가시간활용 연구: 2019 생활시간자료를 중심으로
발표 : 민우정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2. 한국 기업의 다양성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
발표 : 이지연 (고려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3. 2010년대 한국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노조효능감에 대한 성차를 중심으로
발표 : 김기성 (연세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4. 노동시간이 청년층의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조예지 (고려대학교)
토론 : 황현일 (창원대학교)

야간노동자의 여가시간활용 연구: 2019 생활시간자료를 중심으로

민우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소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 노동시간대의 배치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야간노동자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 전반에 대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야간노동자와 주간노동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두 집단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활용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은 야간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떤 삶을 경유하는 것인지, 그 과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들고 있으며, 이러한 24시간 소비사회를 야간으로 확장된 노동시간이 지탱하고 있다(김경희 등, 2016). 통상적인 교대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도 나인 투 식스(9 to 6)를 벗어나는 비표준노동시간대(non-standard working hours)인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흔한 노동형태가 되었지만, 노동시간대배치의 문제는 장시간노동이라는 노동시간의 양적인 문제만큼 주목받거나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김영선, 2014). 그러나 비표준노동시간대 노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야간노동도 장시간근로만큼이나 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박영남 외, 2007; 김기연, 조만수, 갈원모, 2013; 김채봉 외, 2015; Arlinghaus et al, 2019; Costa, 2005; 배수현, 김기연, 2019). 요컨대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발달과 변화한 소비방식을 따라 다양화된 노동세계를 고려하여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elliher, Richardson, Boiarintseva, 2017).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논의는 노동시간의 양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대의 배치와 그것이 직조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시간은 노동세계와 생활세계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주은선, 김영미, 2012).

노동시간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시간량, 즉 장시간노동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류지아, 2017; 안주엽, 2017; 문지현, 권현지, 2019),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간노동자의 일상과 사회적 삶에 대한 연구는 통상적으로 교대제를 요구하는 특정 직군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있거나(채여주 등, 2017; 이말숙, 2019; 신승화, 김수현, 2020a; 신승화, 김수현, 2020b), 질적인 연구로 이루어졌다(이종희, 이영룡, 2012; 신정임, 정운영, 최규하, 2019). 이러한 연구들은 낮과 밤이 반전된 시간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야간노동이 신체리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삶의 리듬과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야간노동의 구속성을 확인하기엔 다소 부분적인 논의라고 생각된다. 전국단위의 조사 자료인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최근의 야간노동연구는 밤 근무자들이 낮 근무자들에 비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승렬, 2020).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일-생활 균형 논의에 있어서 노동시간대 배치 고려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

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 직군에 한정되지 않는 야간노동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 전반에 대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외의 다양한 연구들이 낮과 밤의 환경주기는 대부분 주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어 야간노동을 포함하는 비표준적 노동시간대 배치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식을 포함하는 경험적인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presser, 2005; Fagan et al, 2012; Täht, & Mills, 2015; Iskra-Golec, Barnes-Farrell, Bohle, 2016; Prickett, 2018; Arlinghaus et al, 2019). 그 중에서도 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비표준 시간대 노동자들의 집단 간 시간사용패턴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Craig & Powell, 2011; 2012; Cornwell & Warburton,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을 통해 노동 세계와 생활세계를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간들 간의 관계와 현대사회에서 노동시간의 구속력 그리고 사회적 리듬의 실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야간노동이 어떻게 개인들의 생활세계를 구조화 하는지를 사회적 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시간활용에 있어서 주간노동자와 야간노동자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6호는 노동시간 길이에 대한 규정 없이 야간노동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야간노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22시에서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밤 근무’로, 18시에서 22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저녁 근무’로 설정하여 근무시간의 일부가 야간으로 연장된 야근을 하는 노동자와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이 야간시간대에 분포되어있는 야간노동자를 구분한 근로환경 조사의 조사항목을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시간대인 5시에서 18시 사이의 노동을 ‘주간 노동’으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야간노동자의 표본은 607명, 주간노동자의 표본은 5,885명으로 측정되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된 표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별 일한사람 비율과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노동시간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했으며, 이는 두 집단의 노동 시간을 비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가시간활용은 ‘문화 및 여가활동’, ‘교제 및 참여활동’이라는 대분류와 중분류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을 통해 분석했다. STATA 16을 활용하여 야간노동자와 주간노동자의 여가 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시간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test와 여가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시간량을 종속 변수로 하고 근무시간을 주요 독립변수, 성별, 연령, 건강, 혼인 상태, 교육, 직업,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야간노동자는 주간노동자에 비해 교제 및 참여활동 시간량이 적고, 여가활동의 경우 휴식, 게임 및 놀이 등 정적인 여가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간노동자들은 야간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변동성이 더 강했다. 즉 야간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여가활동의 선택지가 주간노동자들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야간노동이 구조화한 특정한 여가시간활용의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시간활용에 있어 야간노동자들의 낮은 변동성은 ‘제도의 구속성이 클수록 삶의 양식, 따라서 문화적 동일화도 크다’는 문화로서의 시간에 대한 선행연구(안정옥,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다양성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

이지연 (고려대학교)

한국의 노동시장에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력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들은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성 관리는 소수자가 자신의 범주에 따라 고용이나 승진, 교육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성과를 인정받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 등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교, 교육, 언어, 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성관리제도는 할당제와 다르다. 할당제는 기업의 도덕적인 의무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성 관리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다양성관리제도는 단순히 소수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포괄적인 방법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관리하는 제도에 성별, 학력, 지역, 종교, 결혼, 연령, 성적성향, 노조가입여부를 포함한다. 기업이 다양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차별이나 편견, 고용불안 등을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성과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조직몰입과 성과향상의 효과가 있다. 다양성 관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 학계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기존 연구는 다양성관리 제도의 흐름이나 기업성과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의 제도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다양성제도가 아닌 모성보호제도, 혁신적 인사제도 복지제도 등의 인사 제도에 국한되었다. 연구는 2,07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에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다양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인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업에 인사정책을 관리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양성 관련 정책 도입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인사위원회가 없는 기업보다 다양성 관련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약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나 해고관리정책은 인사관리의 핵심으로 기업의 인사정책에 이상적인 규범을 제공한다. 기업의 인사부서는 조직의 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규범적인 틀에 맞춰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네트워킹은 다양성 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가 외부네트워킹에 참여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4배 가량 높아졌다. 기업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성을 얻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은 다양성관리제도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다양성 관리제도 도입 가능성이 1.7배~2.8배 증가했다. 기업에 장애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성별과 관련 다양성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1.3배 증가했고, 지역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1.3배 높아졌다. 해고관리정책 또한 모든 모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소수자 등의 인력자원 활용에 적극적인 기업이 다양성관리 제도 도입에도 포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직혁신을 한 기업은 조직혁신을 하지 않은 기업보다 40% 이상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시간 근로는 다양성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별, 학력, 지역, 종교, 결혼에 관한 다양성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약 30-40%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근로 문화가 만연한 기업은 기업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비율과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는 남성에 비해 저숙련 업무에 포진되어 있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부족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관리자의 경우 직급에서는 상위에 있지만 젠더적으로는 하위에 있어 애매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는 행동의 보수화로 이어져 현재의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다양성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존재와 외부 네트워킹 활동은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은 동형화 과정을 통해 조직 장이 만들어낸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다. 인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기업에게 제도적, 환경적 압력을 통해 조직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제공한다. 최근 차별금지법 등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정책이 다양성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다양성을 잘 관리하는 기업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모방해 다양성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 외부자원을 내재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다양성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조직을 혁신하거나 이미 육아휴직제도, 해고관리정책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다양성관리 제도 도입에 수용적이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의 다양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인 만큼 잠재적인 시장과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다양성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이며 다양성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이 많다.

셋째, 장시간근로문화는 다양성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장시간근로가 조직의 충성도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근로자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이며, 이 규범에서 벗어난 근로자는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기업은 이상적인 규범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며, 그러지 못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넷째,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은 다양성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해당 제도를 옹호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은 핵심부서보다 지원부서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이 제도 도입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직급이 높은 여성관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젠더권력이 남성관리자보다 낮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제도 도입을 지지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조직환경의 압력에 따라 정당성을 얻기 위해 행동하므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제도가 조직이 추구하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의 이상적인 규범을 만들고 주도하는 협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제도도입의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며, 성공적인 역할 모델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자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다양성관리 정책 도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아, 기업이 이러한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장시간근로문화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시간근로문화는 다양성관리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의 실효성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장시간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인 근로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대 한국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노조효능감에 대한 성차를 중심으로

김기성 (연세대학교)

2010년대 이래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노동조합은 어떤 때에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한 노동자들의 동반자이자 지원자였다가, 어떤 때에는 국가를 뒤흔든 정치적 이슈의 선두에 나섰던 깃발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권익 개선 요구에 있어서 동행하고 싶지 않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그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개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받는 정치적 지지의 기초를 형성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발생시켜 노조조직률 증가로 이어지며, 노동자 계급의 권력자원으로서 국가의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결과의 바탕이 된다(Korpi, 1983; Rosenfeld, 2010).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두드러지는 노동형태의 변화는 더이상 노조조직률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렵다(Ibsen and Tapia, 2017;

Rosenfeld, 2019).

노동조합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노동조합의 구성이나 조직, 활동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속성이나 경험에 의해 상호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개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와 관계맺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경험이나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다(Cornfield and Kim, 1994; 유형근, 2017).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성차(gender differe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노동과 관련하여,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노동의 양과 질은 임금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이 수치로 드러나는 지표 이외에도 노동과 관련된 대표적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Chang, 2003).

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나아가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항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조합이 구조적·문화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대표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며 심지어는 노동 현장에서의 성별 격차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하는 기구로 여겨질 수 있다(Milkman, 2016; 박태주, 2014; 박현미,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제 12~23차(2009~2020)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노조효능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성별이며, 이외 임금/정규직여부/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노조효능감에 대한 인식은 여성일수록, 고임금일수록, 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임금이 노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임금이 노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분명했다. 임금이 높을수록 노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남녀 노동자 모두 그러했다. 그러나 임금이 낮을 경우의 노조효능감에 있어서는 남성노동자가 그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저임금 노동자라도 노조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곧 노조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나 환멸에 대해 덜 느끼고 있었다. 이는 거꾸로 남성 저임금 노동자가 노조에 대해 강한 불신이나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2010년대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남성에게서는 고임금 중심의 노동자에게 복무했고, 여성에게서는 최소한 남성에 비해 저임금 중심의 노동자들에게 복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남성의 얼굴을 한 노동조합과 여성의 얼굴을 한 노동조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개인에게서 노동조합의 기능이나 역할, 효과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태주. 2014.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 . 매일노동뉴스.
- 박현미. 2020. “노동조합과 성별임금격차: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제17집 1호: 25-57.
- 유형근. 2017,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는가?: 노조 태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 산업관계연구 제27권 제1호: 107-137.
- Chang, Tracy. 2003. “A Structural model of race, gender, class, and attitudes toward labor unions”. *Social Science Journal* 40: 189-200.
- Cornfield, Daniel. and Hyunhee, Kim.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Unionization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73: 521-532.
-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ilkman, Ruth. 2016. “Gender and Trade Unio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Ruth Milkman (eds.) *On Gender, Labor, and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osenfeld, Jake. 2010. “Economic Determinants of Voting in an Era of Union Decline”. *Social Science Quarterly*. 91(2): 379-396.
- Rosenfeld, Jake. 2019. “US Labor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Understanding Laborism Without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 449-465.

노동시간이 청년층의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예지 (고려대학교)

노동의 시공간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전적 노동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의 한 단면을 살펴는데 있어 노동의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얼마나 긴 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어떠한 공간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분절되어 비정형화하는 노동시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대에 의해 증가하는 호출형 일자리, 야간노동, 초단시간 일자리 등 노동시간은 쪼개지고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성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이중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층들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시간적 측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성별, 고용형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이며, 35세미만의 임금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은 길어질수록 일자리만족을 감소시켰으며, 시간제, 교대제, 호출형 노동 여부로 파악한 비정형 노동도 일자리만족을 감소시켰다. 이직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더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 이용 여부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는 것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임금, 일자리 혜택은 증가할수록 일자리만족도 상승하고, 일자리와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도 역시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일자리만족을 높인다. 동시에 이직을 준비할 확률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에게만 비정형 노동시간, 정규직 여부가 일자리만족을 감소시켰고, 남성의 이직의도에는 노동시간과 임금이, 여성의 경우 통근시간과 수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에게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비정형 노동과 통근시간, 권역 외 통근여부가 정규직에게는 일자리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비정규직의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정규직에게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비정형 노동시간과 정규직 여부가 일자리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노동시간과 일자리혜택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시간적 요인이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의 시간적인 요소는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는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과 같이 좋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 상승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있느냐, 또는 어떠한 일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일자리만족과 이직 의도의 양상은 달리 나타나고,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는 복잡한 층위를 가진다. 보다 복잡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청년층의 일자리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일자리 가치와도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의 조건을 조망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원2(젠더)

대학원2(젠더)

사회 : 박주연 (연세대학교)

1. 초등학교실에서 수행되는 젠더교육의 현실: 교사의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 : 서세혁 (경희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2.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형태와 우울: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 최지원 (고려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3.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균열으로서의 젠더
발표 : 김가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초등교실에서 수행되는 젠더교육의 현실: 교사의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서세혁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사회에는 첨예한 젠더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젠더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젠더교육에 관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많은 미비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젠더교육은 일부 관심이 있는 교사들 개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의 수행 주체인 교사의 인식과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는 아동, 청소년 시기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들이 지니는 높은 수업자율성으로 인해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정체성이 젠더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교사의 성정체성과 교사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 축을 통해 현행 젠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젠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 경험을 듣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사들의 내면화된 정체성이 그들이 가지는 젠더교육 인식과 교육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젠더교육을 수행한 18명의 남·여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사례를 파악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사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 교사들이 젠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젠더교육 수행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들은 크게 온라인상의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공감하는 집단,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만 레디컬한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레디컬 페미니즘을 ‘한국식’ 페미니즘으로 지칭하고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규정하는 성 평등을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뉜다.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공감하는 집단은 페미니스트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기존의 도덕적 잣대로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레디컬한 방식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집단의 경우 성별과 연령이 다양하며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특정한 성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집단은 성 평등, 젠더 갈등 해소, 사회적 통합 등의 가치를 지지하지만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 집단은 대체로 남성 참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으로

서의 성정체성을 강하게 내면화하며,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의 모습으로는 첫째,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 일상의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드는 산파로서의 교사, 둘째,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지적 성장을 돕는 전달자로서의 교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젠더교육을 페미니즘 교육, 인권존중 교육, 공감실천 교육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젠더교육을 페미니즘 교육으로 이해하는 집단은 사회에서 이해되는 페미니즘의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레디컬 페미니스트'로의 낙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걱정은 이들이 지니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점에 기인하기보다는 교사 집단 내의 시선과 교사가 지니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교사정체성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젠더교육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은 젠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범위 안으로 포섭하고자 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일부로서 젠더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교과 수준 내에서 이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가 추구하는 성평등을 교육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교사정체성과 레디컬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젠더정체성 사이의 내적 혼란을 증대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인권교육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공감의 실천 측면에서 이해하는 참여자들은 젠더교육을 탈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지식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젠더감수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발휘하여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수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젠더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남성 참여자들은 젠더교육의 내용상의 측면에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성에 대한 공감을 전제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관련하여 남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난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성정체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로의 낙인에 대한 의식 역시 그들의 성정체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젠더교육 수행교사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교사로서의 자기확신의 부족, 가이드라인과 교사 연수의 질적 한계, 보수적인 교육계의 분위기, 동료 교사들의 이해와 지지의 부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성정체성과 교사정체성은 모두 젠더교육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교사들의 성정체성은 젠더교육을 바라보는 태도와 젠더교육 실천 계기,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등에 영향을 미쳤으나 젠더교육 실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관련해서는 젠더교육 교사로서의 교사정체성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가 지니는 성정체성과 교사정체성은 젠더교육 수행에 있어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사 개개인이 가지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젠더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형태와 우울: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최지원 (고려대학교)

요약문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국 여성들이 일과 모성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갈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유급노동은 경제적·심리적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갖춘 정규직 일자리는 정신건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모성 이데올로기 통념 하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지만 유자녀 여성들에게는 자녀 양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양질의 일자리와 정신건강 간의 정적관계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형태와 정신건강 간 관계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력과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우울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응답자 중 1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702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유급노동시간 및 무급노동시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무급노동시간 또한 비취업 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취업 여성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무급노동시간도 정규직 및 비취업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았다. 둘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우울수준은 낮았다. 동일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는 항상 우울수준이 더 낮다. 셋째,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형태와 우울의 관계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 비정규직 여성은 준거집단인 비취업 여성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 격차가 감소하여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비취업 여성보다 우울수준이 낮았다. 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우울수준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우울수준이 낮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균열로서의 젠더

김가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 즉 투표 선택에 젠더에 따른 격차가 있는지 살펴본다. 대다수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진보적 정치정향을 보이는 현상이 공고한 것에 비했을 때, 한국에서는 전체적 수준의 정치적 성차가 명확히 발견되진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젠더가 주요한 투표균열의 축으로 연구되어온 바가 적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기존 논의들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정치정향을 보이지 않는다고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주로 보고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에 젠더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의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정향의 성차를 집합적 수준의 전체 남성, 전체 여성 간의 차이가 아닌 세대별로 구별한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정치적 젠더 균열과 관련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현대적 젠더갭의 등장이 다른 정치문화 변동과 마찬가지로 세대교체(generation replacement)(Norris, 1999; 김옥·이이범, 2006; Shorrocks, 2018b)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 간과 되어 왔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보다 진보적 정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누적되면서 전체 인구집단 수준에서 성차가 등장하게 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의 실제 선거결과들에서도 청년세대 내에 정치적 성차가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들은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행태에 있어 젠더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대'가 정치지형의 새로운 균열로 화두가 된 것에 더해 2010년대 이후로는 '젠더'가 적어도 청년세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균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주목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젠더 범주가 선거라는 제도적 정치참여나 정치적 행태의 차이에까지 기여하는 요인으로 주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선거 경험에서 분명하게 관찰되는 이러한 젠더균열의 원인에 있어서는 '청년'세대의 공통된 특성을 뭉뚱그려 설명하면서 세대 내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반대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완전히 상이한 집단으로 규명하거나 낙인 짓는 식의 설명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현재 청년세대의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의 정치행태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지금까지 한국에 축적된 경험적 논의에 공백이 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젠더 균열에 대한 분석이 세대 구분 없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이 특정 세대 내부에서 목격되는 젠더갭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젠더 간 정치적 분화가 등장한 원인은 무엇이고, 서구의 공고한 젠더균열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찰된 정치적 젠더갭이 한국에서는 다른 경로를 거쳐 상이한 종착점에 다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적 위기들과, 2010년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여성혐오와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에서 이런 갈등이 정치화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 한국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은 존재하는가? 둘째,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젠더균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먼저, 한국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0 - 2018 년도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 누적자료를 위계적 연령-기간-세대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장기 자료에서 청년 남성 특히 90년대 전반생의 남성이 같은 세대 여성에 비해 보수적 투표정향을 보이고 있었다. 청년세대인 8090년대생들에서 성별에 따라 정치적 선택의 차이가 나는 현상,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과 시기 및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된 결과다.

이어,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이 젠더균열과 맺는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시행된 <국민가치관과 사회인식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먼저 청년세대의 투표선택에서의 젠더갭은 2020년 선거대상의 자료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분석결과, 청년세대의 젠더의식은 성평등 및 성차별 현실에 대한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가 교차하여 존재하고, 젠더에 따라 태도의 유형이 상이함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도 유형이 2020년 선거의 투표선택에서 발견된 청년세대 내 정치적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집단들보다는 성차별에 대한 현실인식에서 남성들이 한국에서 역할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집단들이 이러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균열로써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이 연구는 세대와 젠더의 교차점에 위치한 청년세대의 정치정향의 경향과 젠더갈등의 지형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함의를 가진다.



대학원3(교육)

대학원3(교육)

사회 : 정인관 (송실대학교)

1. Converging Intention but Diverging Intensity?: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Use in Childcare from 2004 to 2019
발표 : 이수정 (연세대학교), 최성수 (연세대학교)
토론 : 인 정 (옥스포드 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2.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발표 : LUO JUNJIAN (경희대학교)
토론 : 인 정 (옥스포드 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Converging Intention but Diverging Intensity?: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Use in Childcare from 2004 to 2019

이수정 (연세대학교), 최성수 (연세대학교)

Objective: This paper analyzes parents time use in two types of childcare (developmental and secondary) by parental education and gender and assess whether the educational gap has widened or narrowed over the period of 2004-2019.

Background: Given that a growing number of studies address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in children's outcomes, much attention has been drawn on studies on childcare, making them an urgent research agenda. However, most of the studies analyze time use disparity on developmental childcare only, which can confound the parental time use gap due to intensive parenting norm and time constraints. To explore this, we compare two different types of childcare (developmental and secondary care) on weekend and weekdays.

Method: Using time-diary data from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2004-2019' (N=33,564),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estimate minutes per day mothers and fa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6 spend on developmental and secondary childcare.

Results: There is a significantly different time usage on weekends and weekdays both in terms of types of care and parental education: compensation for childcare on weekends was captured only for highly educated parents, particularly for highly educated mothers. Moreover, there is a large disparity in secondary childcare between two educational groups on weekdays, corroborating the story arguing for the possibility of outsourcing care and housework. Furthermore, the intensive parenting norm appears to be more prevalent for fathers than mothers, resulting in fathers' behaviors that are markedly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father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education.

Implication: Time constraints appear to drive parents' heterogeneous childcare time, which reaches to the intensity of childcare, in addition to the intensive parenting norm. Our findings have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childcare inequities based on cultural and economic status. To begin with, childcare takes several forms. Due to their longer work hours on weekdays, parents with a higher education spend less time in secondary childcare than parents with a lower education. Different platforms should be studied in order to identify the pipeline as moms' working hours expand and it becomes easier to utilize and receive information on outsourcing. It could also indicate that the two educational groups continue to hold opposing views on what constitutes "good parenting." Even if the reason

is not economic, a cultural argument for different time usage may be valid. While those with a lower level of education may see “always being present” as a sign of good parenting,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knowledge see a completely different picture. Seco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eekday and weekend time consumption. As our main result shows, parents spend weekday and weekend time in a significantly heterogeneous way. The concept of “free time” among highly educated people may differ from that of less educated people.

Key Words: parental time use, parent education, inequalities, childcare, time constraint, secondary childcare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LUO JUNJIAN (경희대학교)

세계화와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주 집단(노동이주, 결혼 이주)과 달리 유학생 집단은 새로운 국제 이주 집단(교육 이주)으로 빠른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 중에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학교 내부 교육현장에서 주요 문제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도 한국 생활 적응문제 때문에 종종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대학 국제화전 략과 한국 다문화사회의 발전에도 점차 영향을 끼쳤다.

기존의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연구 초기에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대부분 연구는 주로 '한류열풍'에 의한 한국 문화영향의 확대, 미국이나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 및 취업 경쟁력 등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유학동기를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중국유학생의 생활과 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생활실태조사 연구에서 최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연구가 전공수업의 어려움, 친구 교제의 한계, 교수와의 관계, 사회적, 문화적 차이, 외로움과 우울, 아르바이트 경험 등 주제로 범주화되고 있다.

선행연구 중의 연구대상은 대부분 1980, 90년대 초반 출생의 중국인 유학생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어학당과 학부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후 출생이다. 중국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따라서 이런 세대 특징을 반영해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주 이론을 이용하여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 동기와 문화 적응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 1)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점이 있는지, 어떤 요인으로 나타나는지?
- 2) 중국유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유학생 집단은 새로운 이주 집단의 형태이면서 교육이주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이론 시각에서 '이동성'에 대한 연구, 이주 과정을 분석할 때 개인 행위자 문화 자본에 대한 추구,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국가 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이주 과정 중 유학 동기와 문화적응 부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토마스 파이스트(Thomas Faist)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통해서 이주 과정 중의 이동성을 분석하고 비슷한 분석틀을 가지고 유학생의 국제 이주에 대한 개인 행위자,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국가, 시민사회와 여론, 이민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서술하였다.

중국 사회문화 배경 부분에서는 먼저 중국 유학의 대중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중국의 유교문화에 있어 교육에 대한 중시 그리고 중국의 전통 문화로부터 교육이주와 유사한 부분이

찾을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의 수급 모순 문제가 심화되고 중국 학부모들이 해외의 우수한 고등교육 자원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유학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발전을 하고, 발전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유학교육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을 보면, 이 연구는 경희대 학부에 재학하고 1990년대 후반, 2000년 이후 출생하는 중국인 유학생 20명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보면 유학동기에 대한 분석은 세 가지 결과로 개괄했다. 첫번째, 외국문화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 다문화 체험과 국제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 개인의 자질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유학을 선택했다. 두번째, 인터뷰 결과 한류문화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오는 연구참여자가 예상과 다르게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한류문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해지는 원인은 중국정부의 '문화적 자신감' 전략, 그리고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내 '국학(國學)'에 대한 홍보, 또는 사드사태 이후 민간 차원의 '한한령(限韓令)' 운동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도 중국학생들이 geopolitical power를 가진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줄 수 있다. 세번째,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많은 중국 유학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던 것에 비해 중국 유학생들이 귀국함에 따라 특히 한국 유학생들의 귀국에 따라 중국 유학생 또래 집단 사회 네트워크의 정보 공유, 여론이나 유학생 또래 집단이 서구 나라 안전에 대한 우려감 등 면에서 이제 교학 국가 선택할 때 사회네트워크 영향의 강화를 볼 수 있다.

문화적응 부분을 분석한 결과는 어학당 시절에 재한 중국 유학생 유학 과정의 '첫 방문'으로 전체 유학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이 시기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과 학교 진학차원은 물론 한국유학 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기조가 마련돼 후속 유학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어학당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어학당 시절에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극적인 문화 체험자의 태도를 보였다.

학업적응부분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공수업의 어려움, 한국인 친구 교류의 한계, 그리고 교수, 학교와의 거리감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증되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방식이 오히려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호응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비대면 수업은 교수님이 강의를 더 필기를 통해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시고 영상 수업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력해도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학습력이 뒤쳐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교외(校外)생활 적응부분은 먼저 중국인 커뮤니티의 양면적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인 커뮤니티가 한국 유학생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다문화체험, 문화적 충돌에 따른 시야의 넓힘, 독립성 단련 등 유학 동기부분 언급한 자신의 유학을 선택한 초심(初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외 생활 과정 중의 외로움과 우울, 그리고 극복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가지는 이해와 동시에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학생 정체성의 반성, 재사고 과정이 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 자본에 대한 추구, 한류문화 영향에 약화와 중국 유학 또래 집단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론의 영향의 강화 세가지 부분을 발견하였다. 문화적응 부분에 있어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부에 재학 당시보다 한국어학당에서 학업시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어학당 시절 그들이 더 적극적이었던 문화체험자였던 것은 어학당 재학시에는 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한 초심이 작용하는 시기이자 그 당시에는 학업 스트레스 없이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인 유학생 학부모들이 학업에 적응할 때 언어 장벽, 한국인 친구 교제와 교류에 있어서의 한계, 교수와의 거리감, 학교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열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원

인을 살펴보면, 어학당과 학부의 언어 요구 격차, 양국의 정치와 여론이 조성한 학생 간의 대립, 서구의 친구처럼 평등한 사제관계의 로망과 한국 학생과 교수 간의 소원한 관계 간의 격차, 그리고 한국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의 관리와 중국 대학교의 학생 집중 관리 방식의 차이점으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외(校外)생활 적응할 때 한국 현지인의 사회문화적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자취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아르바이트할 때 무시과 차별을 당하고 민족정책성에 대한 재사고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중국인 커뮤니티의 양면적 효과, 자립능력 부족, 그리고 중국학생들이 geopolitical power를 가진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 사회에서 받는 대우 사이의 격차로 보일 수 있다.



대학원4(사회심리)

대학원4(사회심리)

사회 : 김상학 (한양대학교)

1. 빈곤 원인 인식의 이질적 구조
발표 : 김일송 (고려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2. 한국 반개신교현상의 원인 탐구: 절대성과 다양성의 대립
발표 : 김선한 (전북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3.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갈등: 이주여성 중심으로
발표 : 권격격 (경희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4. Social Trust and Learned Helplessness as Civic Design Elements: A Case Study on the Spy Camera Detector Application “Relief’s Map”
발표 : 배윤빈 (서강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김상학 (한양대학교)

빈곤 원인 인식의 이질적 구조

김일송 (고려대학교)

국외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은 대중이 빈곤층에 대한 경험과 인지적 자원들을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구조를 양가적인 빈곤 원인의 근거로 인식한다는 ‘이중 의식’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중적 의식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개인-사회구조의 스펙트럼이 특정 조건에서 변질되거나 중첩되어 나타나는 유형이 아니며 특수한 구성 원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수준의 인지적 구성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개인-사회구조의 이원적 방식으로 대중의 인식이 결정된다는 이론적 논의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귀인이나 이념중심적인 판단이라는 일방적 근거에 따라 빈곤 원인 인식이 구성된다는 이원대립적인 연구들에 대한 반박은 현대적 의미에서 다원적인 빈곤 경로를 상정한다. 반면, 정치이념이나 인구적 특징을 변수를 중심으로 한 국내에서의 연구들은 이론적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이원 대립적으로 묘사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 원인 인식에 대한 이론적 변화와 한국이라는 경험적 맥락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빈곤 원인 인식 유형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는 다른 대안적인 분석 틀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중 의식이라는 빈곤 원인 인식 유형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 및 경험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빈곤 원인 인식을 일종의 태도와 신념의 체계로 상정하고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탐색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도출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중 의식이 단순히 부수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이 제안하는 이원대립적 인식 유형과 질적 차이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대중의 빈곤 원인 인식 상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이질성이 가진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빈곤 원인 인식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 검토 부분에서 연구자는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 하면서 이중적 의식을 다룰 수 있는 대안적 분석적 틀로서 문화 도식 접근을 채택한다. 문화 도식 접근은 개인들이 태도나 신념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지적 자원과 그 관계적 구조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인구 집단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질적 체계의 응답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문화 도식 접근의 탐색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이질적인 빈곤 원인 인식 집단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이념적 귀인 이론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기반으로 전체 인구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한다.

실질적인 분석 부분에서 연구자는 2019년도 제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연구자료로 하여, 문화 도식 접근의 주요 방법론인 관계계층분석을 적용한다. 관계계층분석은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신념 및 태도 체계 분석에 활용되어 왔다. 연구는 총 11개의 빈곤 원인 인식 조사 항목을 기반으로 인구 집단 내에 *이념적 인식*, *불가지론 인식*, *이중적 인식*이라는 세 유형의 빈곤 원인 인식이 존재함을 밝힌다. 구조적 이질성을 띠는 빈곤 원인 인식 집단 구분은 정치적 이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는 각 집단이 가지는 이질적인 빈곤 원인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별

서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각 집단 내에서 정치적 이념과 정부 지출 지지 태도 사이의 도식적 차이에 대해서 분석한다.

연구의 대략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열 로지스틱 선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이념의 강도는 이원대립적 인식과 연관성이 있으나, 그 외의 구성 원리와는 무관했다. 다시 말해, 강한 정치적 이념을 가질수록 빈곤에 대해 이원대립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 지출 지지에 있어서 세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이념적 인식* 집단은 정치적 이념의 지배적 효과가 나타나며 빈곤 원인 인식의 개별 요소들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부 지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불가지론 인식* 집단은 빈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만이 정부 지출 지지와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중적 인식* 집단은 개인의 동기와 노력이나 차별 등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요인들의 변이가 정부 지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전체 인구 집단 내에는 크게 세 유형의 빈곤 원인 인식 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분석틀이 포괄하기 어려운 양태로 존재한다. 이 세 집단 중 이원대립적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집단에서만 정치적 이념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원대립적 빈곤 원인 인식이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세 집단은 정부 지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오직 이념적 집단만이 정치적 이념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부 지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집단 내에서도 정치적 담론과 이슈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의 도식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방식의 빈곤 원인 인식이 구성되는 사회적 메커니즘과, 포괄적 의미에서 다른 분야의 신념 체계가 구성되는 원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반개신교현상의 원인 탐구: 절대성과 다양성의 대립

김선한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반개신교 현상의 심층적인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 사회는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병존했었고 그것이 전면적인 종교 갈등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던 사회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종교 갈등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종교 갈등은 전면적인 사회갈등의 한 축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 개신교가 있었다.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반개신교 현상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으며 이러한 반개신교 현상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혹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그로 인한 종교적 원인을 축으로 한 더 큰 사회갈등이 가능성들이 예측된다. 이러한 종교 갈등의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폭발적인 종교 갈등의 중심인 반개신교 현상의 원인들을 파악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의 다양한 모습들과 구조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 반개신교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제시되었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원인들을 탐색했던 연구는 최우영의 연구였다.¹⁾ 본 연구는 최우영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고 그 한계를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최우영은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계기로 형성된 반개신교 담론이 간과되어 왔었던 한국사회의 종교적 긴장들을 표면적이고 전면적으로 드러내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의 대리전으로서, 전통 종교-개신교 간의 의미 갈등의 결과물이 당시 한국사회의 반개신교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한국의 지난 전후의 반세기 동안 제도적으로 개신교에 의해 유교를 필두로 한 전통 종교의 의미가 문화적, 제도적으로 도전받고 정체성을 훼손당하면서 전통의 소외와 원한(레상티망)의 감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켜진 것이 반개신교 담론의 기저에 있던 원인이라고 파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우영의 설명은,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을 나이, 혹은 세대와 상관없이 유교적 전통의 인간관을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전통의 원한이 반개신교 현상의 원인의 전부라면, 유교적 전통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반개신교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대를 구분하며, 새로운 세대의 심층적인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반개신교 현상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개인화'이다. 개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설명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사용하려는 이론적 틀은 먼저 앤서니 기든스의 협상과 경계이다.²⁾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순수한 관계를 지향하며, 이 순수한 관계는 자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자유롭게 협상하고 설정해나가는 관계이다. 이러한 개념을 한국사회의 반개신교 현상과 연결시켜보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계와 협상 가능성들을 한국 개신교는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태도, 그리고 타 제도종교와 다른

1) 최우영. 2009.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 사회와이론, 313-351.

2) 앤서니 기든스(배은경, 황정미 옮김). 2001.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팽창적 절대성이 이러한 개인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자유로운 협상의 가능성들을 차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개신교에 대한 반정서,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이러한 경계는 개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협상해나가고 만들어나가는 일종의 준거체계이며, 자기규범이다. 이는 무수히 많은 각 개인의 삶의 태도이다. 이는 개신교가 아닌 다른 제도종교의 입장이든지, 개인적인 종교의 입장이든지, 무신론적 입장이거나, 과학적 합리주의의 입장이든지, 종교적인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자기규범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규범의 개념은 개인의 종교적 영역을 직접적으로 개신교가 침범하는 경우나, 비종교적 영역이더라도 의식적으로 외부의 반개신교의 특성들을 자신의 자기규범과 결부시켰을 때에만 반개신교 현상의 반응들이 생겨나는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 개신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특성들이 간접적으로만 배경에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적 경계의 침범이라면 그것이 반 개신교 현상으로서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지만, 간접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존재하는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들에 대해 어떻게 전면적인 반개신교 현상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설명이 이 지점에서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규범 경계를 통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중의 경계' 개념을 제시한다. 단순한 1차원적인 경계뿐 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경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개인화의 또 다른 측면인 '다양성'의 차원이다. 개인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원리, 질서가 아니라, 수 많은 병렬적이고 개별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다양한 개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성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원리는 비교적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뒤르켐 식으로의 표현으로는 일종의 집합적인 도덕인 것이며, 자연스럽게 체화된 삶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경계인 다양성의 원리는, 수많은 자기규범들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원리이며, 종교적인 영역(제도종교거나 개인종교이거나) 또한 이러한 다양성의 경계차원 안에서 성립할 수 있다. 다양성의 경계는,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와 특성들(근본주의, 정치적 편향, 습속의 고정화, 물질적 성장주의, 팽창적 절대성)과 맞닿으며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반개신교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신교는 이제 일원론적인 절대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절대성과 다양성의 대립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다양성의 차원은 종교적인 영역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개인들이 이제는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³⁾ 반개신교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경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반개신교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개신교 분석 자체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슬람과 관련한 반 현상들을 설명하는 등 타 종교 영역으로도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종교 갈등의 근원적인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한국갤럽. 202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보고서.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갈등: 이주여성 중심으로

환격격 (경희대학교)

I.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국적은 주로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중국, 한국과 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중국의 이주여성은 23,692명으로 전체 여성이주 중 2위, 다문화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 사람과의 국제결혼은 안정됐지만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주여성 가족관계의 갈등 특성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갈등과 남편과 아내 외부의 갈등을 분석한다. 이주여성의 한국 가족문화적응 갈등 분석과 가족구성원과의 갈등관계 분석을 통해 이주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주여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분석

제1절 선행연구

한국의 국제결혼 현 상황과 중국의 이주현황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하는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소개를 했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여성의 특성은 한국말 잘 못하고, 남편보다 나이적이며, 한국 가정생활 부적응 등이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과 남편 간의 부부사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소통의 갈등, 문화차이로 식문화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이주 현 상황에 대해 한중 국제결혼 증가하는 이유는 4가지로 나타낼수 있는데 환경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개 했다.

제2절 중국과 한국의 사회배경

중국사회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는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국의 이주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해 한국에서의 적응에 많은 갈등을 생성된다.

제3절 이론분석

이론분석부분은 주로 가족갈등 이론, 베리의 문화적응 이론, 문화적응 문제로 인한 한중가족 갈등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III.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검색과 한국어로 이주한 중국여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진행된다. 연구 대상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이주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전화 인터뷰와 위챗 통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인터뷰는 주로 SMS 질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IV. 연구 분석 및 결과

연구분석 부분은 참여자의 배경은 연구자의 사회학 특징, 한국부부 자원, 가족구성으로 세 부분이 포함 되어 있고, 주로 연구자의 남편의 나이 차이, 초혼여부, 이주여성은 한국의 거주시간, 시부모와 동거여부 등으로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가족 갈등은 부부 내부 갈등과 부부 외부 갈등으로 분석을 했다. 부부 내부 갈등은 의사통 장벽, 식문화갈등 남녀관념의 갈등 등으로 나타냈다. 부부 외부 갈등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시부모님의 태도, 이주여성은 한국 가정문화 가족인식 부족으로 나타냈다.

V. 결론

첫 번째, 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하는 능력이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한국남편의 중국어 능력과 이주여성에 대한 관용은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남녀 관념에서 중국여성은 한국 남성보다 가족의 온전함을 더 중시 한다. 네 번째, 시댁과 동거하는 이주여성들은 가족 갈등을 더 많이 야기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주여성은 임신과 육아기간 동안 가족과의 갈등이 더 많다.

Social Trust and Learned Helplessness as Civic Design Elements: A Case Study on the Spy Camera Detector Application “Relief’s Map”

배윤빈 (서강대학교)

What it means to design technologies for and with minority communities is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within HCI. This case study is concerned with the social context of Korea’s epidemic spy camera installation in public places for shameless purposes such as taking women’s photos or videos and oftentimes selling them on internet pornography websites. With the question of design and technology’s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or to help minority communities, I analyzed how the digital product, spy camera detector application, offers vague means to understand women’s safety from spy cameras in Korea, and even has the potential to abuse women’s fear and learned helplessness on spy cameras. Furthermore, I suggest the importance of application administrators’ trust work with digital civics. Although the application is not made for sole non-profit purposes, it is pivotal to realize that trust is a prerequisite for the product to fully operate since it is based on the users’ participation to fill out the spy camera’s existence in public places within the app’s map. Additionally, I suggest that emerging technologies should not be designed for the status quo nor even aggravate the marginalized people’s existing fear. Through this case study, I urge the importance of acknowledging the complexity of the minority group’s social psychology centering around angst, learned helplessness, and indignation, to design to empower minority groups and liberating them from angst and learned helplessness, at least to some extent.

Keyword: Trust, Community Engagement, Social Desig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Learned Helplessness



대학원5(팬데믹/건강)

대학원5(팬데믹/건강)

사회 : 임정재 (연세대학교)

1. 2001년 이후 국경관리 동향 탐색: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중심으로
발표 : 최효원 (연세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2. 전염병 시대의 양극화: 20세기 페스트와 21세기 코로나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발표 : 윤병연 (고려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3.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지향이 정부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노을, 이율리, 김기성 (연세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4.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 우울 담론의 사회적 구성 탐구
발표 : 배진태, 조수민, 김영서, 윤병연 (고려대학교)
토론 : 임정재 (연세대학교)

2001년 이후 국경관리 동향 탐색: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중심으로

최효원 (연세대학교)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재점화되었다. 그동안에도 안전은 국가변영의 기본 원리이자 국가의 영속성과 직결되는 보편적인 원리였다. 국가는 변영을 지향해가지만, 만약 국가가 구성원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 자체의 존속과 영구화 능력은 소멸되므로, 변영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그동안 서구 선진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변영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다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큰 관심이 쏠렸고, 성장 중심의 발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어가는 이익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안전관리는 우리의 건강을 온전한 형태로 보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것, 국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처의 노력,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노력이 국민 또는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안전관리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이 국민국가 형태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안전관리는 바로 '국경'에서 시작된다. 안전관리는 구성원의 생명을 관리하는 일로서, 국가는 누구를 국경 안으로 받아들일지, 일단 국경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로서의 국경관리는 곧 구성원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인구관리와도 직결된다.

그간 전염성 질병이 안보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인간안보의 측면보다는 군사안보에 미치는 함의 때문이 컸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전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실 전염병과 질병은 오랫동안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지역으로 전파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Plague of Justinian)은 비잔틴 로마제국의 몰락을 촉진한 전형적인 국가안보의 이슈였고, 14세기의 흑사병과 1918년부터 1920년 사이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피해는 전쟁보다 가혹했다. 감염병의 확산은 인구의 이동,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온 인구들이 섞일 때 발생하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인재,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동이 강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묶여있다는 사실도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도관이 된다. 식량의 생산 및 이동은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특정 질병의 확산, 병원균과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개발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의 강화, 항생제의 남용도 도리어 감염병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 이동성(global mobility)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지역의 검역 및 방역의 강화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처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글로벌 이동성을 배경으로 하여 보건의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시작점인 국경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경관리란 출입국장에서 행해지는 출입국관리인 국경통제(border control)와 영공, 영해, 영토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선 및 관련 시설을 경비하는 국경순찰(border control)을 포함하는 개념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분자를 색출해 내기 위한 국가안보 체계는 더욱 강화되어, 개인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안보의 개념과 역행하면서 국경관리의 안보적 기능만이 강하게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관리의 다른 기능들, 즉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 인권의 문제와 어우러지는 인권보호의 기능, 국경지대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적 기능과 같은 영역은 경시된 채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한 '통제'의 성격만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경 관리는 국가 주권의 발현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권과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때로는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도 인권보호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국경관리행정은 '통제'의 성격 그 이상이다. 이때에는 국가안보 개념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안보의 측면이 강조되어, 비로소 국가가 개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인권의 향상에 기여하는 매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발표는 국경관리의 작동 이론을 연구하는 큰 범주 안에서, 시기를 특정하여 '세계의 국경관리 동향'을 묘사하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 논문에서 환경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연구의 주요한 맥락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염병 시대의 양극화: 20세기 페스트와 21세기 코로나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윤병연 (고려대학교)

1. 연구의 목적

전염병은 언제나 정치적, 상업적, 의학적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존재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두 팬데믹인 20세기 페스트와 21세기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담론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사회적인 제반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두 전염병을 둘러싼 정치, 의료, 시민 행위자들의 소통의 구조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 전보를 통한 전염병 담론 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담론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비교하여 21세기의 전염병이 가지는 담론 형성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두 사례 비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전염병 관련 정보 유통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보 유통의 도구에 따른 담론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추적하고 소통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진단한다.

2. 연구 자료와 방법론

샌프란시스코 전보 자료는 1900-1904년 미의무총감의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of the United States)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1900년에서 1904년까지의 페스트 관련 565개의 전보와 편지 자료(N=84)를 수집했다. 전보의 발신자와 수신자(N=84)는 연방정부 정치인 및 관료, 주정부 소속의 주지사와 주 상원의원과 주 보건위원회, 연방 보건당국과 시 보건당국,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시행정부 소속의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트위터 2020년 자료는 주지사, 상하원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특별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던 행정부 수장, 경제 및 조합단체, 정치단체 총 599개의 주요 계정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작성된 트윗 중 128,740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트윗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2021년 코로나 자료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2021년 1월 2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601개의 계정으로 부터 57,718개의 트윗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트윗을 수집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트윗을 추출하기 위한 키워드로는 'covid-19', 'coronavirus', 'covid'와 같이 코로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거나 리트윗과 멘션을 한 경우를 포함했다. 2020년 128,740개의 트윗 중 25,453개의 트윗이 리트윗이었고 2021년 57,718개의 트윗 중 11,569개의 트윗이 리트윗이었다. 각 리트윗은 사용자 고유 아이디(user_id)를 사용해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했다.

전보와 리트윗 자료를 활용해 팬데믹 시기 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요 행위자를 식별하고 정보 전파의 흐름을 분석한다. 담론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 토픽 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기법 중 하나인 구조 토픽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이하 STM)을

활용한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은 각 문서의 메타정보를 토픽과 토픽별 단어 분포를 추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1]. 행위자-담론 네트워크는 STM분석의 결과를 활용해 구성한다. 행위자-담론 네트워크는 행위자(actor), 주장(statement), 집단(group), 의견(agreement or disagre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2]. STM 분석에 사용된 개별 트윗의 작성자를 행위자로, 작성자의 소속 집단 및 정당을 담론 네트워크의 집단으로, 개별 트윗은 담화가 되며 트윗의 주장은 STM에 의해 도출된 토픽으로 치환한다. 행위자와 개별 토픽을 연결해 2모드 네트워크(Bipartite Network)를 형성해 행위자의 담론과 양극화 양상을 판단한다. 트윗 수집은 Python의 Twint(2.1.20 버전)을 활용해 수집되었다. 분석 트윗 텍스트를 대상으로 R 소프트웨어 stm 1.3.6 버전을 활용해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시행했다.

3. 연구 결과

첫 번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보와 트윗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상호작용이 양극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집단별 전염병 담론의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전염병의 규모는 다르지만 정치 및 보건 행위자들이 양극화되는 정보 유통 네트워크의 초기 패턴은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전보와 트윗의 기술적 차이로 인해 시기별 정보 전파의 횡수가 다른 모습도 확인되었다. 전보는 개인 간의 통신 수단이기때문에 소수의 중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트윗의 경우 동일한 소속의 집단별 연결의 강도가 높아지며 다수의 군집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두 번째, 정권 교체 이후 두 전염병의 담론 분화 양상이 달라지는 점도 확인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페스트의 경우 주지사의 교체, 지역 정치인 및 경제계의 이해관계가 연방 보건당국과 일치하는 변화와 함께 양극화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못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러한 소통의 양극화가 네트워크 변수를 기준으로 심화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페스트에서 1900-1902년과 비교해 1903-1904년 이전 시기에서 갈등을 빚은 주정부 및 연방 보건당국과 시 보건당국의 행위자들의 상호 연결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리트윗 네트워크의 경우 정권 교체 이후에는 오히려 상호 간의 연결이 줄어들고 동일한 정치적 성향의 노드를 더 선호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페스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정치적인 성격의 양극화였기에 네트워크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세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미국내의 핵심적인 의료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에 대한 담론 네트워크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페스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 시기에도 의료진인 파우치 박사를 매개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염병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현되었다. 이 같은 모습은 파우치 박사를 주제로 STM을 활용해 구성한 행위자-담론 네트워크에서 확인된다. 파우치 박사에 대한 트윗별 담론의 분포는 2020년과 비교했을 시 2021년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을 보인다. 2021년 담론 네트워크에서 파우치 박사에 대한 옹호적인 주제와 비판적이며 음모론적인 주제로 공화당과 민주당 트윗의 분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의료진에 대한 협조 및 담론의 합치가 이루어진 20세기의 전보를 통한 네트워크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두 팬데믹의 전보 자료와 트윗 자료를 활용해 팬데믹 시기 전염병을 둘러싼 양극화된 정보

유통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두 팬데믹의 정보 유통 네트워크는 주요 정치 및 보건 행위자를 중심으로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담론 네트워크를 고려함으로써 이 연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팬데믹의 정보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행위자와 전염병 담론을 식별한다.

또한 특정 행위자에 집중되었던 전보와 달리 트윗은 정보 전파가 지속될수록 집단별 양극화의 양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팬데믹 시기 통신 수단의 기술적 차이에 의한 정보 유통과 양극화의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정보 유통 도구에 따른 분석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Roberts, Margaret & Stewart, Brandon & Tingley, Dustin.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 10.18637/jss.v091.i02.

[2] Muller, A. (2015). Using Discourse Network Analysis to Measure Discourse Coalitions: Towards a Formal Analysis of Political Discourse. *World Political Science*, 11(2), 377-404. <https://doi.org/10.1515/wps-2015-0009>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지향이 정부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김노을, 이율리, 김기성 (연세대학교)

The Effects of Social Trust and Political Ideology on Government Evaluation: The Case of Covid-19 in Korea

이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지향이 정부의 정책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방역과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개인의 방역 수칙 및 공공 보건 지침 준수, 백신 접종 의향 등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전문가나 정부 등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여 판단을 한다. 그리고 정책 대응평가에는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와 같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는 2020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사회과학조사(Korea Academic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 자료를 통해 18세 이상 74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차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차 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변화'이다. 응답자의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성향을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분석 방법은 최소제곱법(OLS)을 통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평가의 변화는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에 대한 정치 성향 변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해보았을 때, 신뢰의 효과는 정치 성향의 의해 조절되었다. 또한, 집권 정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정책대응 평가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가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입장을 따른다. 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였던 2020년 3월과 9월에 조사된 자료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신뢰 정도가 정부의 대응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 우울 담론의 사회적 구성 탐구

배진태, 조수민, 김영서, 윤병연 (고려대학교)

1. 연구목적

현재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인구는 2.8억 명(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며 전세계의 항우울제 시장 규모는 매년 2.15%씩 성장해 2025년에 1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nstitute of Health Metrics, 2021). 우울은 실로 현대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보편적인 정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적 삶을 특징짓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정신적 삶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울은 보편적인 신경학적, 생리학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은 우울을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한다 (Kleinman, Good, & Good, 1985). 이는 우울이 경험되는 방식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의료적 치료, 향상의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우울은 다른 정신적 증상들과 함께 19세기부터 질환으로 정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로 DSM(정신진단장애편람)-3에서의 생물학적 정신의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프로자 등의 새로운 유형의 항우울제의 개발과 폭발적인 성공은 이러한 흐름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었다(Conrad, 2005; Dworkin, 2001; 김환석, 2014). 서구에서의 의료화와 생의료화 논의들은 건강과 질병을 둘러싸고 자본, 미디어, 전문직과 환자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고자 경합한 시도들을 탐구해낸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울 감정이 생물학적 실체인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행위자들이 질병을 경험하는 방식은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체계 내에서의 적극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Conrad & Barker, 2010). 가령 Crossley and Crossley (2001)는 1957년과 1996년 두 시기의 정신 질환자들의 서사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 운동의 활성화, 자조 산업의 발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이 특수하고 개별화된 경험에서 집합적인 경험으로 전환된 것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질병이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구성된다는 지적은 환자 경험에 대한 직접적 탐구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사와의 상호작용, 약물의 복용과 중단, 스트레스의 경험 등 질병 경험의 모든 과정이 특수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arp & Birk, 2013; Rie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우울 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한국에서 우울은 질환으로 인지되고 있는지, 우울이 다른 개념들과는 어떤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계와 언론에서의 우울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행위자들이 우울 담론에 대해 규정짓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개인 수준의 미시적 담론 구조를 경험적 탐구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특정 담론장 전체에 근접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우울 담론의 거시적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뉴스 인용문 자료와 논문 서지 자료이다. 뉴스 인용문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인 Bigkinds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신문 기사 내 ‘우울’ 혹은 ‘우울증’을 포함하는 인용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인용문을 발화자 정보와 함께 수집했다. 이는 언론과 발화자의 서사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우울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접근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논문 서지 자료의 경우 Web of Science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목에 ‘우울’ 혹은 ‘우울증’이 포함된 경우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한국인 저자들이 KCI에 출간한 논문 코퍼스(KCI data)와 국제 학술장에 출간한 논문의 코퍼스(WoS-K data)를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연구 후원 기관 등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된다. 이 자료는 학술적 장에서의 우울 담론 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설명은 표1에 제시되었다.

표1. 자료 설명

Source	Duration	Keyword	N	Abbrev.	Lang
BigKinds	1990-2021.03.18	우울, 우울증 (quoted statements)	20,851	News data	KOR
Web of Science	1980-2019	우울 (Title)	6,396 (4,019)*	KCI data	KOR
	1900-2020	Depression, Depressed (Title)	3,685	WoS-K data	ENG
	1900-2020		74,365	WoS-US data	ENG

* abstract data included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워드 임베딩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Evans & Aceves, 2016).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에서의 의미 구조를 표상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는 1) 각각의 데이터에서 연도별 문서 분포를 확인하고, 2) 주제 분류를 통해 담론 구조를 분석한 후, 3) 주요 행위자와 담론의 관계를 분석하고 4) 뉴스 인용문 자료와 논문 자료에서의 단어 근접 정도를 비교하는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3. 연구 결과 및 함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언어와 학술적 개념으로 우울의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뉴스 자료와 논문 자료 양쪽에서 2000년대 이후로 우울이 포함된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뉴스 자료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우울은 노인/노화, 직장/스트레스, 가족, 치료/환자, 범죄, 코로나 등 다양한 주제의 맥락에 위치하여 활용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우울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맥락을 가로 지르는 범용성 있는 문화적 증상이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 위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논문 자료에서는 주된 연구 경향이 의료 모델에 따른 연구와 인문주의/사회과학적 관심에 따른 연구로 양분됨을 파악했다. 셋째, 뉴스 자료에서 의사 등 의료 행위자와 법원, 경찰 등 법률 행위자가 주된 영향력을 행사한 담론 주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의사들은 특히 환자와 치료에 대한 주제 외에도 일상의 건강관리 및 생활 습관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구성했다. 한편 논문 자료에서는 대학과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어 근접 정도의 비교는 워드 임베딩을 통해 이루어졌다. 뉴스 자료에서는 의학적, 제약적 치료에 대한 관점들이 두드러진 것에 반해 논문 자료에서는 요가와 명상 등 대안적 치유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의 발견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울 담론이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 위치하며 이에 개입된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인지 밝힘으로써 우울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 지형의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이 인지되고 경험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Conrad, P. (2005). The shifting engines of medicaliz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1), 3-14.
- Conrad, P., & Barker, K. K. (2010). The social construction of illness: Key insight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1_suppl), S67-S79.
- Crossley, M. L., & Crossley, N. (2001). Patient voices, social movements and the habitus: how psychiatric survivors 'speak out'. *Social Science & Medicine*, 52(10), 1477-1489.
- Dworkin, R. W. (2001). The medicalization of unhappiness. *Public Interest*, 85-99.
- Evans, J. A., & Aceves, P. (2016). Machine translation: mining text for social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 21-50.
- Institute of Health Metrics. (2021). Global Health Data Exchange(GHDx). Retrieved from <http://ghdx.healthdata.org/gbd-results-tool?params=gbd-api-2019-permalink/d780dfbbe8a381b25e1416884959e88b>
- Karp, D. A., & Birk, L. B. (2013). Listening to voices: Patient experience and the meanings of mental illness.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23-40): Springer.
- Kleinman, A., Good, B. J., & Good, B. (1985). *Culture and depression: Studies in the anthropology and cross-cultural psychiatry of affect and disorder*. Univ of California Press.
- Rier, D. A. (2010). The patient's experience of illnes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6, 163-178.
- 김환석. (2014).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정신장애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14(1), 3-33.



대학원6(이론/문화/사회운동)

대학원6(이론/문화/사회운동)

사회 : 지주형 (경남대학교)

1. 도덕 문화가 소수자 혐오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경준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2. 생태위기와 파국적 전환담론의 차원들: 김홍중과 김지하를 중심으로
발표 : 주요섭 (전북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3. 누가 거리로 나가는가?: 2013-2020년 한국의 집회·시위 참여자 분석
발표 : 전누리 (중앙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4. 정치 성향과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왕정하 (서강대학교)
토론 : 박찬종 (광운대학교), 지주형 (경남대학교)

도덕 문화가 소수자 혐오에 미치는 영향

김경준 (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도덕 문화에 따라 소수자 혐오가 달라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도덕은 사회 통합의 기능보다는 집단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곤 한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 양상을 도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레이코프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하여 보수와 진보가 가진 도덕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이트의 도덕 기반 이론을 통해 정치 성향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 기반이 다르고, 그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도덕 문화는 외집단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는 혐오인데, 이는 주로 자신보다 약한 외집단을 향하게 되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 도덕 문화 중에 결속적 접근 도덕은 부족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 내 협력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집단을 배척하게 된다. 반면에 범부족적이고 탈부족적 성격을 가진 결속적 접근 도덕은 내집단-외집단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낮출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의 시민정신 실태조사의 일반국민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덕 기반 질문지의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처럼 도덕 기반 질문지의 타당성 검증에 실패하였으며, 2요인 모형의 도덕 기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속적 접근 도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반면에 개인적 접근 도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어떤 도덕 문화와 관련되어있는지 확인하였고, 그린리 지적하는 것처럼 결속적 접근 도덕이 부족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집단을 배척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주제어: 도덕 문화, 도덕 기반, 사회적 소수자, 혐오

생태위기와 파국적 전환담론의 차원들: 김홍중과 김지하를 중심으로

주요섭 (전북대학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생태위기와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전환담론(transition discourse)’ 중에서 ‘지속가능(sustainable) 전환’ 및 ‘급진적(radical) 전환’과 구분되는, ‘파국적(catastrophic) 전환’ 담론 및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적·실천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데믹-기후위기 시대, 파국적 위기감 속에서 이에 응답하려는 사회학적 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울리히 벡의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과 라투르의 인간-비인간 네트워크와 ‘신기후체제’, 그리고 그 외 여러 색깔의 포스트휴먼 담론 등이 그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환경사회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환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파상력’과 ‘페이션시’ 등을 키워드로 ‘파국적 전환’ 담론/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김홍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발터 벤야민의 메시아 주의적 역사철학을 모티프로 하는 김홍중의 ‘파국적 각성’의 사회이론은 전환담론의 또 다른 차원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대안적 사회운동그룹 중 하나인 생명운동은 40여년 전 1980년대 초부터 종말론적 위기 감각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절박성을 주장해왔다. ‘파국적 전환담론’의 선구적 작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인 김지하는 특유의 생명사상을 토대로 ‘화염개벽’을 주창하고 ‘개벽적 대전환’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예컨대, 1990년 ‘개벽과 생명운동’이라는 주제의 긴 강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저서인 ‘우주생명학’(2018)을 통해 우주정치적 개벽담론을 예언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1)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속에서, 2)김홍중의 ‘파상력’의 사회이론을 검토하고, 3)김지하의 ‘화염개벽’ 담론을 살펴본 후, 4)김홍중의 ‘파상력’의 사회이론을 거울삼아 김지하와 생명운동의 개벽담론을 비추어보며 또 다른 차원을 탐문하고자 한다. 5)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전환담론 및 전환적 사회이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주요내용(목차 예시)

I. 서론: 생태위기와 전환담론들

- 전환신드롬과 전환담론들: 1)지속가능 전환, 2)급진적 전환, 3)파국적 전환

II. 파국적 전환담론의 차원1: 김홍중의 ‘파상력’

1. 인류세와 파국의 세계감
2. 파상력과 마음의 사회학
3. 페이션시와 자기-구원의 사회이론

III. 파국적 전환담론의 차원2: 김지하의 '화염개벽'

1. 전환기의 증후군과 개벽의 세계감
2. 모심(侍)과 영성의 생명사상
3. 묘연법과 문명전환의 비결

IV. 파국적 전환담론의 또 다른 차원

1. 체계이론과 헤테로토피아의 경우
2. 정동적 깨달음과 '예감'하는 몸
3. '가정법'과 또 다른 세계의 태동

V. 결론을 대신하여: '전환'에서 '태동'으로

3. 참고문헌

- 김지하. 1996. 『생명과 자치』. 솔출판사
- 김지하. 2002. 『김지하 전집1, 2, 3』. 실천문학사
- 김지하. 2005.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 지성사.
- 김지하. 2018. 『우주생명학』. 작가.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 김홍중. 2016. 『파상력』. 문학동네
-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1: 파국의 페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연구, 19(3), 1-49
- 김홍중. 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4(3), 163-187
- 니클라스 루만. 2014. 『생태적 커뮤니케이션 (우리 사회는 생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가)』. 서영조 역. 에코리브르.
- 브라이언 마수미. 2018. 『정동정치』. 갈무리
- Ulrich Beck. 2015. *Emancipatory catastrophism: What does it mean to climate change and risk society?*. Current Sociology Vol. 63(1), 75-88

누가 거리로 나가는가?: 2013-2020년 한국의 집회·시위 참여자 분석

전누리 (중앙대학교)

연구는 한국에서 증대, 확산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참여 현상을 주목하며,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일찍이 투표 등 제도적 참여와 구별되는 집회·시위 참여 등 비제도적 정치 참여 및 저항활동을 주목하고, 그 참여 활동의 증대, 확산 속에서 누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어떤 개인적, 사회적 특성을 지닌 이들이 그 활동을 주도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려는 시도가 이뤄져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 혹은 의향자에 있어 구별되는 특성이 발견되는지, 혹은 저항활동의 확산을 의미하는 저항활동의 표준화(Normalization of Protest)가 저항자의 표준화(Normailization of Protest)라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해왔다. 본 연구 역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저항 활동의 일환인 집회·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의 사회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정치이념 등을 지닌 이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투표 등 기존 제도적 참여와 같이 정치적 자원의 보유를 뜻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에 따라 집회·시위 참여 등 비제도적 정치참여, 저항행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 역시 이를 주목하며,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 확인된 경향들, 예컨대 성별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가 높다는 결과들이 여전히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아울러 투표 변수를 설정한다. 비제도적 정치참여 및 저항활동의 등장과 확산 속에서 기존 투표 등의 제도적 정치참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집회·시위의 참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줄어드는지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을 설정하는데, 기존의 통념과 같이, 집회·시위 참여는 여전히 진보 좌파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인지, 혹은 보수우파에게도 전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지난 1년간 집회참여 유무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집회·시위 참여 경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령의 경우, 다른 연도 데이터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2016, 2017, 2020년에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참여할 경향이 적다는 사실, 즉 기존의 연구 논의와 일정정도 부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교육수준, 학력의 경우,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다른 연도와 달리 2016년, 2019년에 초졸 준거집단에 비추어 고학력 집단에 참여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기존 교육수준과 비제도적, 저항 정치참여에 있어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 역시도 교육수준, 학력과 유사하게, 각 연도별 데이터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7년 데이터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줄어든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투표 행위의 경우, 2015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참여 경향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두 해에서는 대체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음을, 즉 투표와 집회·시위 참여 양자가 대체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의 경우, 연도에 따라 이념별로 참여 경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을, 특히 매우 보수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이 다른 이념 집단에 비해 참여 경향이 높았던 경우도 확인하며 집회·시위 참여가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수단이 아님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우선 성별과 이념에 있어 기존 사회운동의 사회 논의와 같이 집회·시위라는 비제도적 참여 및 저항 행위 수단이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연령, 학력, 소득수준의 경우, 집회·시위 참여 경향에 있어 특정 연도에 있어 준거 범주 대비 특정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연령을 제외한면, 기존 연구결과, 즉 비제도적 정치참여 혹은 저항활동에 있어서 제도적 참여와 유사하게,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소 배치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참여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투표 등 관습적, 제도적 정치행위에 있어 대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 성향과 공정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왕정하 (서강대학교)

최근 유권자 당파성 증가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공정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 복지 태도의 보수화 논란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복지 정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사회통합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정치성향과 공정성 인식이 복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이들은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분배보다 성장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때,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선별 복지를 위한 증세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어도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치 성향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이 사회의 기회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복지 태도의 비일관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보수 정당만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도 복지 축소안을 제시하고, 능력주의 원칙을 소환하는 등 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복지 정치 지형의 틀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관련하여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특별(한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현상

특별(한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현상

사회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1.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초기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토픽모델
발표 : 조원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토론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2.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발표 : 황선재 (충남대학교),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토론 : 임동균 (서울대학교)
3. 코로나19 감염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건강격차를 중심으로
발표 : 오지은 (오사카쇼인여자대학)
토론 : 최가영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일한 협동을 통한 재해복구연구: 동일본대지진부터 코로나 위기상황까지
발표 : 야마 요시유키 (칸사이 가쿠인대학)
토론 : 오독립 (와세대대학교 도시지역연구소)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초기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토픽모델

조원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연구는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한국 주요 미디어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함의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초기와 (2015년 5월 20일 - 6월 23일) 코로나19 환자 발생 초기의 미디어 보도를 (2020년 1월 20일 - 2월 23일) 수집하여 Structural Topic Model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입장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와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신문들의 감염병 보도량과 주제의 구성이, 해당 매체와 당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지 아니면 차이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에서는 감염병을 최초 발견 지역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서사가 메르스에 비해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한국 사회가 현재, 그리고 향후 감염병 대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요인을 중심으로

황선재 (충남대학교),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백신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백신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 정부신뢰와 백신수용성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로 지지 정당과 정치성향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2021년 2월에 25세부터 49세까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백신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백신수용성이 높았다. 가장 정부를 신뢰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백신수용성 차이는 18.5%p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백신수용성이 달랐는데, 여당 대비 야당에서 백신수용성이 낮았다.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야당과 비슷하게 백신수용성이 달랐다. 이러한 특성들은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백신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고, 특정 정파를 넘어서서 전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백신접종 문제는 정파적 논쟁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건강격차를 중심으로

오지은 (오사카쇼인여자대학)

일본에는 외국인 이민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력 고용 관련법을 중심으로 단편적이 정책이 추진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가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과 관광 및 의료 목적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결핵과 코로나19 감염증은 외국인에게 취업 및 노동의 제한과 사회적 고립을 불러일으켰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발표에서는 '건강격차'의 관점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일한 협동을 통한 재해복구연구: 동일본대지진부터 코로나 위기상황까지

야마 요시유키 (칸사이 가쿠인대학)

발표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설립된 칸사이학원대학 재해복흥제도연구소에서 설립초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국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협동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심포지엄 등의 기획과 성과 출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동일본대지진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까지 재해복구를 테마로 한 한일협동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한일 학술연구교류가 갖는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특별(학술)

특별(학술)

사회: 최 윤 (고려대학교)

1.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상, 실행방안
발표 : 김귀옥 (한성대학교)
2. 한국 학술생태계의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자의 연구환경
발표 :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세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센터)
3. 지역 소재 연구자와 독립연구자를 위한 거버넌스 구상
발표 : 홍덕구 (포항공과대학교)
종합토론 : 강명숙 (배제대학교), 강정석 (지식순환협동조합), 강태경 (고려대학교), 김명환 (서울대학교),
김진균 (성균관대학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중렬 (전남대학교),
신명호 ((사)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상, 실행방안

김귀옥 (한성대학교)

1.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의 필요성

2021년 우리 연구진(김귀옥, 주윤정, 최윤, 홍덕구)의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결과에서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싸고 많은 학술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이나 비정규 연구자들이 현재 정부와 대학이 만들어낸 학술 생태계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연구 상황에 대한 절망감까지 보이고 있다. 김동춘의 “고등(인문)사회과학원”이나 송승철의 “인문융합혁신연구원”, 이강재의 “학술진흥원” 방안 제안과 같은 주장에서 확인했듯이 이번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인문사회과학을 둘러싼 학술정책 거버넌스가 한국에서 왜 부재한가에 대한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학술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크게 보아 소극적인 필요성과 적극적인 필요성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소극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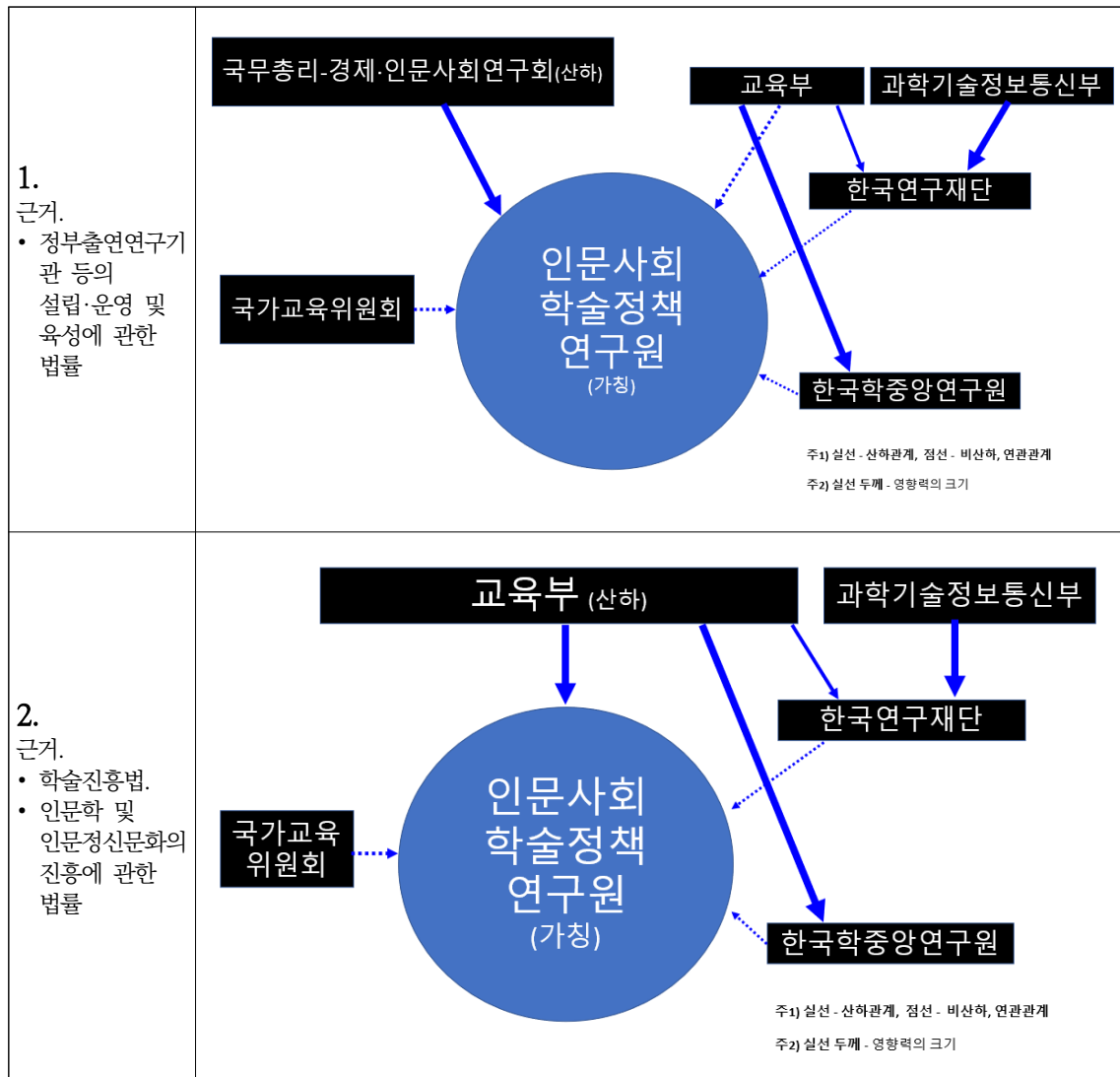
- 기초분야 인문사회과학계와 이공계에 대한 예산 및 정부 대응 상의 엄청난 격차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와 퇴행
-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의 위기 상황과 차별 구조 등

○ 적극적 필요성

-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증장기 학술정책의 필요-인문사회과학의 특성상 단기적 연구보다 증장기적 연구가 중요함. 인간과 사회적 변화의 성격
- 연구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 학술 생태계와 연구자 실태 조사-전공 분야별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정확한 규모, 그들의 학술활동을 둘러싼 연구환경, 지원 연구비, 연구 업적과 최근 관심, 성별, 지역별 연구자들의 실태 자료 부재
- 국가 재정 지원의 연구 결과물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
- 한국형 학문을 지향하는 선도형 국가정책 모색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필요

2.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가칭)의 제안과 구상

〈그림〉 인문사회 학술정책 연구원 위상안



3.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 조직도와 역할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가칭)의 비전과 목표

미션

보편적 인류문명에 이바지하는 인문사회과학 학술 생태계 조성

비전

선도형 인문사회과학 학술정책 수립과 실천

핵심
가치

자유와
책임

전승과
혁신

다양성
과 포용
성

전문성
과 대중
성

전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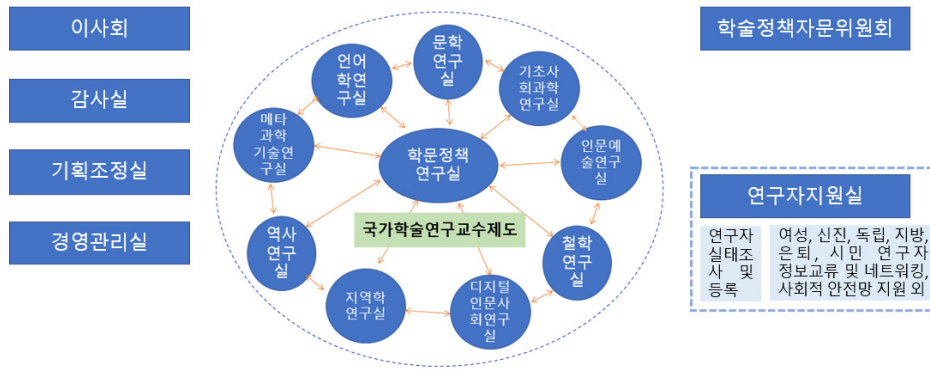
- 자율적 연구, 장기 연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 인간과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학술연구 심화
- 연구윤리 및 연구자의 책무성 확립

- 전통적 인문학 보존 및 계승
- 미래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결합
- 자연/문화의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

- 개방적 학술문화 구축
- 소수 연구주제 보호
- 포용적 학술 생태계 구축
- 학계내 격차 완화 및 미래세대 육성
- 생애주기, 젠더 등 연구자 특성을 존중하는 학술지원체계 조성

- 학술연구 방법론 및 DB, 아카이브 구축
- 학술연구결과물의 확산과 확장
- 시민인문학과 학술연구의 실천 영역 활성화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가칭)



DB, 방법론, 환류 센터

- 연구 결과물의 공공성 증진, DB화 → 국가데이터센터
- 연구방법론 소개 및 연수
- 연구 환류 체계
- 국가 - 지역 - 시민 차원에서의 인문사회 학술연구 정책화 매개

연구윤리센터

- 연구윤리교육
- 연구윤리심의 기구와 역할
- IRB 교육 및 심의 기구와 역할

Open Access센터

- 전자도서관
 -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학술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전자정보 이용 교육

기초학술연구 교류센터

- 대학 연구소 및 연구단 교류
- 국내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교류
- 남북 외 국 학술 정책 연구기관 교류

시민학술센터

- (지역별) '인문학의 집'
- 강사 (연구자)와 시민 - 수요자 연결과 서비스
- 평생교육 연계

연구원 3단계 발전 계획안

연구원 수립 이후 세 단계를 거쳐 정상화되도록 한다.

단계	기간	주요 사업
제1단계 과도기	준비기 거쳐 2024년 3~5월경 연구원 개시 후 3년 내외 국가학술연구교수 최소 2,000명	연구원 개시, 국가학술연구교수제도 출발, 연구자 홍보, 다양한 교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체제 수정 및 보완 * 정부 간 조율을 거쳐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활용안 * 정부 연구 지원 재단과 조율하여 인문사회과학(예술, 체육학 포함) 개별 연구자 지원사업의 통폐합
제2단계 발전기	3년 이후~8년 내외 국가학술연구교수 최소 3,000명	5년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연구자들의 숙의회의를 통해 보완하고 정비. 각 실과 센터 운영 점검 및 발전 방안 모색, 지역별 '인문학의 집'의 원활한 운영과 해외의 '코리아 인문학의 집' 개설. * 제3단계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 대형 사업의 통폐합. 필요에 따라 한 단계를 앞당길 수 있음. * 제3단계 본 연구원 새 청사 개원 준비
제3단계 심화기	8년 이후부터 국가학술연구교수 최소 4,000명	본 연구원 체제 안착과 함께 본 연구원 청사 개원 * 정부 결정에 따라 연구생이나 국가학술연구교수의 규모를 증원할 수 있음.

4. 맺음말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가칭)은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까지 수 차례 제시되어온 구상이다. 단순히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분야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등의 학문분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 또한 이공계 연구에 대한 역대급 지원에 대한 콤플렉스의 결과는 더더욱이 아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류의 수 천년 문명사적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구성 체계이듯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어느 시대가 되어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 질문에 대한 반응이자 필요에 따른 결과물이다. 또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저변에는 광범위하게 포진된 인문, 사회과학 등의 기초학문분야가 뒷받침해주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또한 100세 건강한 노년시대에는 평생교육, 평생연구가 가능한 지식기반사회가 구축될 것이다. 이에 대응한 평생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평생연구가 보장되는 시스템도 머지않아 필요로 되는 사회를 준비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남과 북, 해외 연구자들의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고, 세계 코리아학문의 교류의 장을 국가별 양자간 및 다자간 인문사회 학술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원 출발은 연구자들의 희망과 한국 학문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의 협력과 지지만이 정부의 3무, 즉 무책임과 무상상력, 무학술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 학술생태계의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자의 연구환경*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세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센터)

학술생태계에 대한 조사(346명 응답) 결과, 정규, 비정규 지위가 연구편수, 학회 활동,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활동의 기회, 연구비 재원의 다양성, 학술연구 소득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비정규직, 소득 변수 등이 연구 산출물, 연구활동, 기회, 네트워크 등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국가연구의존성, 생계를 위한 연구 활동, 연구업적 관리의 어려움, 학회 활동 수의 적음,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반의 사회적 활동의 기회 역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불안한 지위, 생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업적 편수와 결과 활용 역시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업적의 편수와 연구기반 지식공유 활동의 부족이, 정규직/비정규직의 경로를 가르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학술생태계의 여러 경로, 학계 이력(Career)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학술생태계 정규/비정규직과 상관 없이 학계내에 상당히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 연구자들보다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여성이 학술생태계에서 취약한 지위인지 혹은 차별감수성이 높기에 이를 보다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인이자 교육자 집단 내에서 이렇게 차별이 학계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사회에서 가치와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재해석을 하며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집단, 미래세대들에게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술연구자 집단 내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술연구자와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고등교육,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이 상당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는 한국의 학술생태계 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연구역량의 차이 그로 인한 기회의 편재의 문제, 학술생태계의 업적주의/능력주의 차원으로 볼 경우, 이것은 학술생태계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결과물이며, 이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다차원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의 부족과 그로 인해 개인적 차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상당한 국가재원의 지원을 통해 연구자로 성장하고 활동하게 된다. 상당한 공공재원이 투자되며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학술생태계 속에서 상당한 격차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술 활동의 결과에 까지 영향을 준다면, 학술생태계의 디자인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쟁을 당연시하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개인들은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의 역량을 높여야 하는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과잉산되고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조절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격차의 존재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한다면 학술생태계의 자원배분, 기회구조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접근, 고민을 통해 이 격차를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진행중인 연구이므로 저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지역1): 지방인구의 현재와 미래

특별(지역1)
지방인구의 현재와 미래

사회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기조연설: 지역 발전의 당위와 현실

발표 : 전상인 (서울대학교)

1. 지방인구 위기와 인구 이동

발표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지역청년의 마음 읽기

발표 : 고우림, 조영태 (서울대학교)

3.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시설 사회화: A시 사례

발표 : 박효민, 안준희 (서울시립대학교)

종합토론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정은 (창원대학교)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8일(토요일) | 플레너리세션2



플레너리세션2: 진보와 보수를 넘어: 탈진실 시대의 사회학

플레너리세션2:
진보와 보수를 넘어: 탈진실 시대의 사회학

사회: 장덕진 (서울대학교)

진보와 보수를 넘어: 탈진실 시대의 사회학

좌담: 장원호 (서울시립대학교), 한 준 (연세대학교), 신경아 (한림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권현지 (서울대학교), 임동균 (서울대학교)



특별(지역2): 지역사회와 삶의 질

특별(지역2)
지역사회와 삶의 질

사회 : 송유진 (동아대학교)

1. 동남권 청년들의 일 경험과 구직: 창원, 울산 남성 청년들의 사례
발표 : 양승훈 (경남대학교)
2.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다: 지방 도시의 쇠퇴와 청년의 경험
발표 :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나윤영 (서울대학교)
3. 문화도시로의 지역 도시 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발표 : 안지연 (상명대학교 글로벌예술교육연구소)
4. 노인의 고립과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의 조절 효과
발표 : 박소현 (서울대학교)
종합토론 : 박천웅 (전북대학교), 김주현 (충남대학교)



정치/사회운동

정치/사회운동

사회 : 임동균 (서울대학교)

1.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단결하는가?: 독일의 배달 노동자 조직화 사례
발표 : 신슬아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토론 :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2. 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발표 : 서찬석, 이 상, 김효경, 신광영 (중앙대학교)
토론 : 하경희 (아주대학교)
3.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발표 :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토론 : 김형주 (5.18연구소)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단결하는가?: 독일의 배달 노동자 조직화 사례

신술아 (중앙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시·공간적으로 유동적, 파편적, 분절적인 조건을 갖는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 사례로서 배달 노동자가 어떻게 집단화하고 조직화하여 연대하고 있는지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유형화하고,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강점과 약점을 논한다.

21세기 자본주의하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된 생산체계, 경제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며 재화, 서비스, 노동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고, 노동과정이 조정되는 형태를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콜별·건별 노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있다. 이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노동자 간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동료의식을 갖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와 같은 공간적 분산과 시간적 분절로 공동의 경험과 행동 기회가 적어 집단화와 조직화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 드러나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노동자 집단으로 배달 노동자를 주목하였다. 2천 년대 초반부터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온 유럽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독일의 배달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대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효용을 확인하는 것은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네 개의 라이더 조직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조직명	딜리버우니온 (Deliverunion)	리펀 암 리밋 (Liefern am Limit)	코라 (Khora)	고릴라스 노동자 연합 (Gorillas Workers Collective)
조직 시기	2017	2018	2019	2021
조직화 유형	독립노조가 조직화	거대노조에 가입	협동조합	느슨한 결사체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인 독일자유노동자동맹(FAU)이 주도하여 조직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식품·요식업 노조(NGG)로 편입	기업과 노조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음식 배달 서비스앱으로 플랫폼 구축	노조 결성하지 않고 산발적, 불규칙적으로 파업 등 공동 투쟁 이어가며 집단 형성
소속	자유노동자동맹(FAU)	식품·요식업노조(NGG)	세계자전거배달협동조합 연합(CoopCycle), EU프리랜서 협동조합연합(SMart)	
배경	유럽 각국의 라이더 조직화 확산	급여명세서 오류 등 임금 지급 불투명 문제, 노동환경과 조건에 대한 불만	2019년 독일 딜리버루의 사업 철수와 라이더 대량 해고	동료의 해고, 고속배달 요구, 통제시스템 등의 노동환경 및 조건 불만

조직화 주체	자유노동자동맹(FAU)	켈른 딜리버루 라이더	딜리버루 해고 라이더	고릴라스 라이더
목표	분산된 라이더 집단화	직장평의회 설치	민주적인 협동조합 플랫폼 구축	직장평의회 설치

네 사례의 공통점으로는, 1)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문제 상황, 그러나 무엇보다 해고, 임 금체불, 노동통제 등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자주적 권익 보호의 긴급성이 대두되었다. 2) 조직화를 위한 조직화가 아니라 노동자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구체적 이슈, 사측의 횡포에 대응하는 공동행동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화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거대노조(DGB-NGG, -Ver.di), 독립노조 (FAU), 언론, 정부, 국내 또는 초국적 시민사회단체 등 기존의 제도화된 행위자 중 최소한 일부의 지원이 조직화 과정에 필수적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4) 왓츠앱, 텔레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사회 소통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물리적 장소성과 시간적 지속성의 부재라는 약점 을 보완하고 있었다.

반면, 각 사례의 개별적 특성으로는 기존 노조에 가입한 1) 리펀 암 리밋(Liefern am Limit)은 초기 조직화 이후 독일노총 산하 노조로 소속되었으며, 배달업체 내 직장평의회를 건설하여 공동결정제 (Mitbestimmung)를 통해 임금, 근무 및 휴게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제도적 보호에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이라는 강점을 보였다. 2) 딜리버우니온 (Deliverunion)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하는 독립노조의 주도로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 파업과 임금협상은 어렵지만, 유연한 조직구조와 빠른 직접행동 이라는 조직 특성이 신속한 연대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3) 코라(Khora)는 노조를 결성하는 대신 세계자전거배달협동조합, 유럽프리랜서 협동조합과 연합하며 국제 연대로 비자본주의 인클레이브를 구축하고 있었다. 4) 고릴라스노동자연합 (Gorillas Workers Collective)은 공식 조직으로 제도화를 목표하지 않고 느슨한 연결망을 유지하며, DGB, FAU 등 노조와 전략적 연대를 맺고 있었다.

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서찬석, 이 상, 김효경, 신광영 (중앙대학교)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던 한국은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민주화가 미친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 중 하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등장이었다 (Koo 1993). 민주화 이전에는 반독재 민주화가 주된 의제였다면,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시민사회 내에서는 노동, 여성, 환경, 경제정의 등 다양한 의제를 전면에 내건 사회운동들이 성장했다 (신광영 1991; 유팔무김호기 1995; 홍덕화구도완 2014). 이들 사회운동은 과거에 누적된 억압과 부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열리게 된 시민사회라는 공간에서 정신장애운동은 다른 사회운동들과 달리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들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운동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난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장애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장애 당사자 및 비당사자들의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운동은 왜 민주화 이후에 쉽게 등장하지 못했는가? 또한, 왜 정신장애운동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일제감점기부터 지속되어 온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정정신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은 정신장애운동의 부재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뒤늦은 등장까지를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민주화에 대한 정치사회학 이론과 사회운동의 성장에 대한 사회운동 이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내부의 조직화를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가 정신장애 인권운동에 미친 작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운동의 확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McAdam and Rucht 1993; Strang and Meyer 1993). 하나의 사회운동은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 하에서 다른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Tarrow 1998; McAdam 1995; Meyer and Whittier 1994), 이 같은 과정에는 인적 네트워크 등의 직접적 메카니즘 (Gould 1995; McAdam 1988; Morris 1984; Wang and Soule 2012)과 운동의 프레임과 같은 간접적 메카니즘이 작동하곤 한다 (Andrews and Biggs 2006; Myer 2000; Soule 1997). 본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왜 정신장애운동을 위한 조직적,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반독재 민주주의' (홍성태 2018)와 함께 대두되었던 '인권' 담론 (나영정 2015; 윤수중 2005)이 노동권, 정치권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정신장애운동이 2010년대에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운동을 가능케 했던 인적 네트워크 및 조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운동 참여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Corrigan-Brown 2012; della Porta 1988; Gould 1991; Klandermans and Oegema 1987; McAdam 1988; Opp and Gern 1993). 특히, 비정

치적 결사체에서의 활동이 사회운동의 참여로 이어지는 측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고 (Diani 2004; McAdam and Paulsen 1993; McVeigh and Sikkink 2001; McVeigh and Smith 1999; Passy 2001), 최근에는 사회운동이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지적해왔다 (Caren, Andrews, and Lu 2020; Castells 2015; Earl 2013; Earl and Kimport 2011; Vasi and Suh 2016).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운동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는데 있어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들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Petri 2018).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참여를 통해 ‘환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또는 ‘생존자’, ‘장애인’,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획득 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김현민·유진선 2018; 하경희 2021), 2000년대에 등장한 자조모임들이 어떻게 2010년대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전면적인 등장에 기여했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운동 일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착안하여 (고춘완 2005; 김도현 2007; 김정열 2005), 정신장애 운동을 크게 네 시기, 즉 가족단체의 설립, 자조모임들의 등장, 인권운동 단체들의 등장, 그리고 연대체의 등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정신장애 운동단체에 대한 문헌조사 및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빅카인즈 외에 장애인론단체인 비마이너 및 정신장애언론단체인 마인드포스트의 기사를 조사했다. 다양한 정신장애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홈페이지 및 관련 기사들 역시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본 논문은 정치 민주화가 정신장애운동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자율적인 시민사회 내에서 ‘인권’ 담론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즉, 민주화는 정신장애운동의 출현에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었지만 필요조건이기는 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에 있어 정신장애인들의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사회문화적 편견에 둘러싸인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 오프라인 자조모임 및 온라인 공간이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장애운동단체 사이의 연대가 확장되고 ‘인권’을 매개로 정부-정당-운동단체 사이의 연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장애운동조직 간 갈등 및 비장애 운동과의 점점 부재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점까지도 결론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를 중심으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1. 연구 목적 및 개념적 정의

그간 신체적·직접적 피해에 국한된 5·18 피해-보상 담론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범죄로서 5·18의 본질에 적합한 사회적 피해 담론을 구축하는 데 실패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5·18 피해 및 트라우마 담론에서 주변화되었던 5·18 목격자들의 집단 트라우마를 국가범죄 피해자학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통상 국가범죄 또는 국가폭력이 전개되고 다루어지는 사후 과정에서 목격자(witnesses)라는 범주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Felman and Laub(1991)와 Yenigül(2012)는 목격자를 다음의 두 차원에서 정의한다. 첫째, ‘경험이나 사건을 겪고 살아가다가 이후에 그것을 진술하거나 증언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사건의 순간에 구경꾼(onlooker)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은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Yenigül, 2012: 8-9). 요컨대 국가범죄 목격자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정치적 폭력의 유산을 극복하는 이행기 정의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직접적) 피해자의 지지자가 되는가 방관자가 되는가에 따라 이행기 정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희, 2016).

한편 최근 미국정신의학회가 편찬한 DSM-IV와 DSM-5에서 목격자의 정신적 외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범주로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학적 진단명은 5·18 목격자의 트라우마가 지닌 피해자성과 역동성(dynamics), 나아가 집단적 성격을 아울러 포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이 글이 제안한 복합적 집단트라우마(complex collective trauma)라는 개념은 국가범죄 생존자이자 피해자, 동시에 증언자/전달자로서 5·18 목격자들의 트라우마가 지닌 복합적 특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5·18 목격자’란 ‘직접적 피해자’와 구분하여 5·18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상이(부상)·구속을 경험하거나(직접적 피해자) 유가족, 일선대응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5·18 목격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참여적 목격자다. 이들은 실제 항쟁과정과 대항적인 무력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나 직접적 피해자로 분류되거나 민주유공자로 보상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들은 잠재적인 피해생존자로서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로, 우연적 목격자다. 이들은 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우연적으로 5·18 학살과 군대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셋째, 광주 거주자로서 목격자 또는 현장 거주자들이다. 이들은 5·18 항쟁 당시에 광주지역의 거주자로 10여 일간의 시위항쟁을 목격하거나 피해상황을 견문하거나 항쟁의 마지막 날 밤 가두방송을 청취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립감과 공포감, 죄책감, 무력감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서술한 목격자의 유형과 규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5·18 목격자 모집단의 분류와 규모(1980)

구분	정 의	규모(명)
참여적 목격자	제 항쟁과 무력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항쟁 과정에서 불이익처분을 모면한 사람,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상피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 등	34,000
우연적 목격자	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살상피해를 우연적으로 목격한 사람 등	15,000
광주 거주자로서의 목격자	항쟁 기간에 주로 광주에 거주하면서 피해 상황을 전문하거나 가두방송을 청취한 사람	727,627

2.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의 개략

이 같은 잠정적 정의에 기초해 본 연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주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 조사 연구〉(연구책임자 김명희)의 일환으로 5·18 목격자 16명의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생애사 방법론과 근거이론을 활용해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 목격자는 가해자인 신군부로부터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의 위협과 침해를 경험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의 패턴과 발전 경로가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범죄의 직접적 피해자가 지닌 트라우마의 유형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5·18이라는 이름의 국가범죄가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의 성격을 지니며, 5·18 목격자들의 트라우마가 1980년대 제반 신군부의 통치 장치들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구조화된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인다.

둘째, 하지만 5·18 목격자의 생애경로와 트라우마 패턴은 - 직접적 피해자와 사뭇 달리 - 국가범죄 희생자/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면서 (1) 목격자-피해자, (2) 목격자-방관자, (3) 목격자-전달자라는 세 유형의 인과적 속성을 드러냈다. 각 유형은 단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맺기 방식에서 상호작용 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 ‘목격자-피해자’ 유형이 피해를 재경험하거나 피해자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면, ‘목격자-방관자’ 유형은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생애전략을 내 보였다. 이와 달리 ‘목격자-전달자’ 유형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상호작용 전략을 형성했다. 즉 ‘목격자-전달자’ 유형은 ‘목격자-피해자’ 및 ‘목격자-방관자’ 유형과 달리 광주의 진실을 전달하고 5·18의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를 만드는 작업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일치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이 같은 양가적 속성은 5·18 집단트라우마의 자장 안에서 목격자의 위치가 갖는 정치사회학적 함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후속 고찰과 국가-사회 차원의 해법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요청한다.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조명은 개별적인 금전보상 중심으로 진행된 제도적 과거청산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자(와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립과 소외, 고통과 폭력의 사이클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며, 피해자-사회 중심의 치유(진영은·김명희, 2020)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 : 김상학 (한양대학교)

1. Religion Shapes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발표 : 정중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토론 :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2. 가치 연구의 복원: 인지사회학적 방법론 적용

발표 : 김지혜 (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상학 (한양대학교)

토론 : 민응기 (목원대학교)

3.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위험에 대한 태도 연구

발표 : 홍은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천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Religion Shapes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정종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bstract: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empathic concer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is to examine how religion modifies this association. Using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s in the 2011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N = 1,506), the analyses reveal that empathic concern is not associated with happiness net of religious and demographic controls. However, each of the two indicators of religion—religious attendance and salience—modifies this association. Specifically, in the context of high levels of religious attendance, empathic concer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Yet, in the context of low levels of religious attendance, empathic concern is not associated with happiness. Similar moderating patterns have been observed with regard to religious sali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 religiosity is a critical contingency in the link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oretical views about the interplay of empathy, relig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theory: Value congruence hypothesis

Data: The 2011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Metho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Focal Measures:

- 1) Happiness: “If you were to consider your life in general, how happy or unhappy would you say you are, on the whole?”
- 2) Empathic concern: “I feel sympathetic and become anxious when I see someone who is not happier than me,” and (2) “I feel like to protect when I see somebody who is exploited sometimes.”
- 3) Religious attendances: “How often do you attend religious services?”
- 4) Religious salience: “(If you have a religion) Do you call yourself a strong, or not a very strong follower of your religion?”

Control measures: age,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income, employment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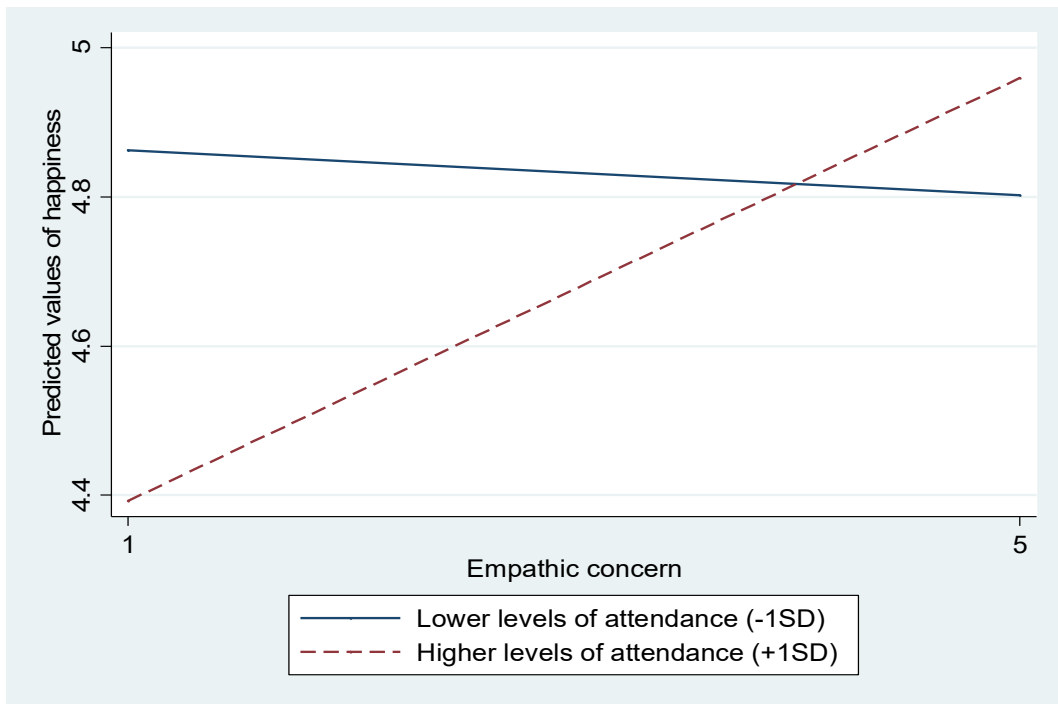
self-rated health, and religious affiliation.

Major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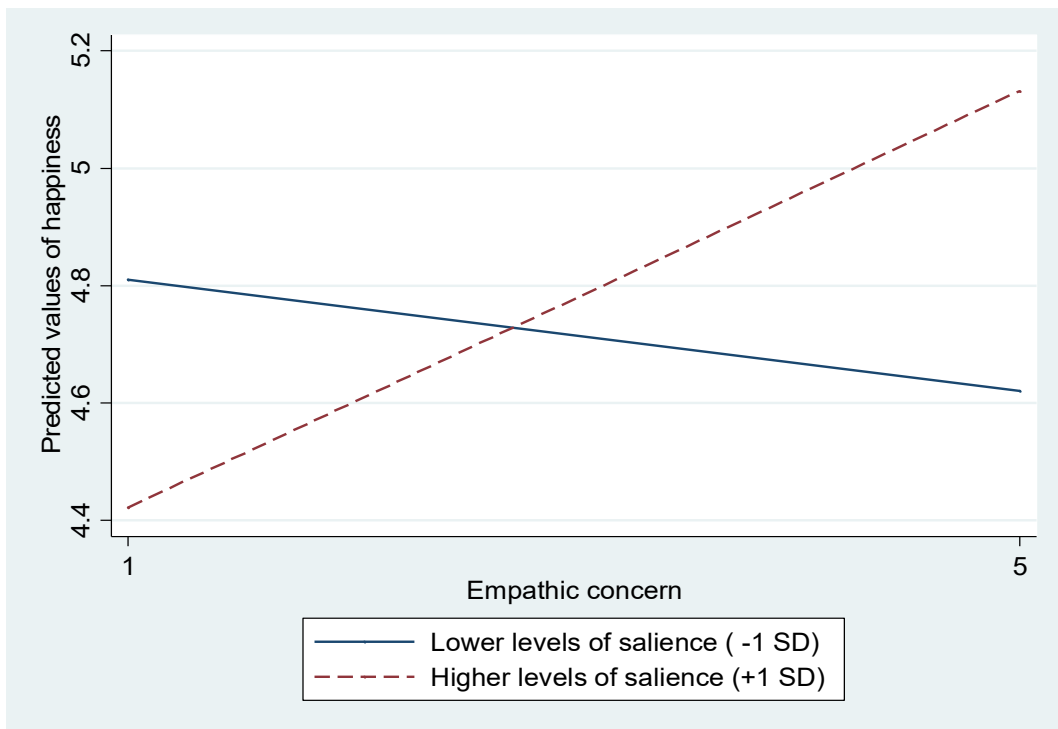
- 1) Empathic concern is not associated with happiness, adjusting for demographic and religious controls.
- 2) Religious attendance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Specifically,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is positive only in the context of higher levels of attendance. Yet, in the context of low levels of religious attendance, empathic concern is not associated with happiness.
- 3) Religious salience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Specifically,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is positive only in the context of higher levels of salience. Yet, in the context of low levels of religious salience, empathic concern is not associated with happiness.

Graphical illustration of key findings:

〈Figure 1〉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by levels of religious attendance



〈Figure 2〉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by levels of religious salience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위험에 대한 태도 연구

홍은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천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영역에서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II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¹⁾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일자리 소멸과 고용 불안정, 불확실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준비를 위해 주요국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사회 직업변화는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발생할 일상이나 직업변화에 대해 개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시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세워지는 정책은 실효성이 확보되기 힘들다.

일자리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은 아니지만, 기술들의 융복합으로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은 본인의 직무에 충실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응을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은 많지 않다. 결국 개인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므로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발생할 일자리 위험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일자리 위험에 대한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위험에 대한 편향성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위험을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준과 개인(본인)에게 발생할 수준을 상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위험이 사회적으로는 발생하지만, 본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낙관적 편향과 사회적 발생 보다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비관적 편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낙관적 편향은 일상생활에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Perloff, 1987; Taylor, Collins, Skokan, & Aspinwall, 1989)도 있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들을 고려할 때 '낙관적 편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낙관적 편향은 감염병이나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 위기나 질병위기에서의 낙관적 편향 연구는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김봉철·이동근(2006)의 연구는 기업체 위기에 대한 낙관적 편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위기관리 전략 수용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있어 낙관적 편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

1)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기존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지능적으로 고도화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네트워크(인터넷, 데이터 연결 등) 기반의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기술을 의미한다.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낙관적 편견을 가지는 것은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개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 연구에서 편향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주로 낙관적 편견(OB, optimistic bias) 또는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위험이 자신들보다 남들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좋지 않은 사건들의 경험 가능성이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것(Weinstein and Klein, 1996)으로 정의된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위험 정보의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낙관적 편견이 달라지는 실증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져 있으며(이민영·나은영, 2016; 이민영·이재신, 2009; 김인숙, 2012), 더 나아가 낙관적 편견은 건강행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된다(이민영, 2016).

낙관적 편견은 사회수준의 위험판단과 개인수준의 위험판단의 차이로 정의되므로(이민영·이재신, 2009) 그 차이 값이 양인 경우 낙관적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관적 편견(pessimistic bias)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적으로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개인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개인의 위험 수준과 사회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여 그 둘 간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 위험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준과 개인(본인)에게 발생할 수준의 차이값으로 차이가 0인 경우 동일 집단, +인 경우 타자위험 집단(사회적 위험)개인적 위험), 개인위험 집단(개인적 위험)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기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변인은 성별과 직업(일부)이었으며, 타자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직업(일부)과 위험지각, 성과기대, 통제가능성, 정부신뢰로 확인되었다.

〈편향성 집단 결정요인 분석: 다항 로지스틱〉

	타자위험 집단			자기위험 집단		
	B	S.E	Exp(B)	B	S.E	Exp(B)
(상수)	.286	.909	1.331	-3.818*	1.540	.022
성별	-.247	.145	.781	.541*	.260	1.718
연령	.008	.007	1.008	.009	.011	1.009
ln소득	.081	.119	1.084	.115	.199	1.122
대재 및 대졸	.058	.161	1.059	-.153	.266	.858
대학원 재학 이상	-.014	.244	.986	-.486	.427	.615
자영업자	-.426	.298	.653	-.327	.457	.721
판매/영업/서비스직	-.672*	.288	.511	-.939	.482	.391
단순노무직	-.274	.307	.760	-.609	.483	.544
사무직	-.564*	.242	.569	-.835*	.394	.434
경영 관리직	-.308	.335	.735	-.622	.530	.537
위험지각	-.368***	.075	.692	.100	.122	1.105
관여도	.160	.114	1.174	.126	.194	1.135
정보부족	.187	.101	1.205	.231	.169	1.259
성과기대	.442***	.107	1.555	.190	.178	1.210
통제가능성	-.474***	.110	.623	.077	.186	1.081
정부신뢰	-.242*	.104	.785	-.252	.169	.777

$\chi^2=137***$

-2LL=2114

Cox & Snell $R^2=.038$

Nagelkerke $R^2=.082$

집단 준거: 동일집단/학력 준거 : 고졸 이하/직업 준거 : 전문직/성별 준거 : 여성



젠더1

젠더1

사회 : 김영미 (연세대학교)

1. 한일 성역할태도 비교: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 사사노미사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오지혜 (경남 여성가족재단)
2. 혼인 상태별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젠더 이데올로기 지형
발표 : 문지선 (고려대학교)
토론 : 박주연 (연세대학교)
3. '빅카스 아줌마'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종로3가 중·고령 성매매의 행위자 네트워크
발표 : 이희영 (대구대학교), 윤선미 (중앙대학교)
토론 : 정고운 (경희대학교)

한일 성역할태도 비교: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사노미사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지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를 사상 처음 경험했다. 통계청이 2021년 2월 24일에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졌으며 OECD 평균 1.61명(2019년)의 절반을 밑돌았고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 동안 모두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가족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¹⁾. 일본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1.34명으로 과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했다. 일본 후생노동성²⁾이 발표한 2021년 6월 2일 기사에 따르면 2020년의 출생아수는 2019년보다 2만 4천명 적은 84만여 명 수준으로 1899년의 조사 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재생산 위기(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먼저 경험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만혼 및 미혼 증가, 만산화 및 저출산, 이혼의 증가,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일련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동아시아에서도 1990년대부터 뚜렷하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가족의 형태적 변화에는 가족가치와 성역할태도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치관 변화를 중요한 설명변수로 여기고 이론화시켜 왔다. 서구 주요 이론에서는 주로 남녀역할 변동에 따른 규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성역할 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다. 여기서는 가부장적 전통에서 양성 평등적인 가족가치가 대두되면서 가족의 형태 또한 변해왔다고 이해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와 젠더 불평등한 역할분업, 유교 가부장적 가족가치 등 1.제도적, 2.형태적, 3.가치관 차원에서 한일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공통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에 주목하면 한일 간의 속도 차이를 기존 이론이나 분석모형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출산율 하락 시점은 일본이 앞섰는데 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저 수준까지 출산율이 하락했는가?

출산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에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명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구 기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성역할태도 변화에 주목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2012년도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이며 한국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출산 배경이 유사하다고 지적되어 온 일본과 비교했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이론적/방법론적 전략을 취했다. 첫째, 가치관이 사회발전에 따라 이론적으로 전통에서 진보를 향해 선형 이행해 간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가치관의 다원적 양상을

1) 「조선일보」, 2021/06/09(2021/10/20 접속)

<https://www.chosun.com/opinion/podium/2021/06/09/RAPNPH6JSBA7LD7UA674U3MTGA/>

2) 후생노동성 「2020년 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수)의 상황」(2021/10/20 접속)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0/index.html>

포착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했다. 가치관은 가치측면에 따라 상이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며 복잡한 가치구조를 가지는 다원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거시적 시각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평균값을 사용해 사회전체 동향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집단 내부 차이(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 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한국처럼 ‘압축적 근대화’를 이룬 사회에서는 코호트에 따른 생애변화가 크기 때문에 가치관 차이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값을 이용한 비교에서는 그러한 편차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가치에는 어떤 코호트에서 어떠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 집단 차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한일 성역할태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여성에게 경제적 기여 책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이 코호트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여성을 중심으로 젊을수록 성역할 분업보다 평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진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남녀평등지향적 가치와 근대가족 지향적인 가치가 결합한 일본형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남녀평등지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특히 젊은 여성 사이에서 그러한 가치규범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남녀역할분업을 부정하면서 여성에게 가계 기여 책임의식을 부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지지하는 점에 있으며 일본 기혼 여성의 취업형태가 대부분 파트타임 노동으로 유지되는 구조적인 배경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귀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역할 분업보다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한국에서 대졸자, 미혼, 1986-1995년 코호트에서 나타났고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대졸자, 미혼, 여성, 1986-1995년 코호트에서 성역할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녀 평등지향적인 가치가 지지되었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이 결과는 성역할규범 변화가 전통에서 평등으로 단선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평등의 의미는 그 나라가 처한 갖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양국에서 지지되는 성역할 평등 형태는 공사 영역을 포함한 역할분담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양국 사회에 남녀가 배치된 구조와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고 양국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형태의 성역할평등을 향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성역할태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보수-진보로 단선적인 선형 이행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성역할태도 평등의 의미가 각 사회 맥락에 따라 다르듯이 불평등의 의미 또한 서로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을 둘러싼 가족변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하더라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혼인 상태별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젠더 이데올로기 지형

문지선 (고려대학교)

그간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는 일관되지 않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예컨대 여성에게 가정도 잘 돌보면서 경제활동도 기대하는 태도는 ‘변형된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 ‘신전통적 성별 분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성역할 태도가 다차원적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 그러나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 부양자 이데올로기 등 일부 성역할 태도의 특성으로 추정된 결과였다. 또 성역할 태도 문항을 이용한 양적 분석도 측정문항을 합하거나 평균을 내 전통적 또는 평등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전통주의부터 성평등주의까지 단선적 연속체의 정렬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성역할 태도 응답들의 관계를 놓치는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다차원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여성의 가솔돌봄 의식’, ‘여성의 자녀돌봄 의식’, ‘여성의 주부역할 의식’, ‘남성생계부양자 의식’, ‘맞벌이 의식’이라는, 다섯 가지 젠더 규범을 반영한 성역할 태도 문항들을 모두 이용하여 혼인 상태별로 잠재집단분석을 했다.

이미 Knight와 Brinton(2017)은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에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럽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통주의, 성평등적(일지향적) 가족주의, 유연한 성평등주의, 자유주의적 성평등주의’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 글은 한국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 지형이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전통주의, 일지향적 가족주의, 성평등주의’로 구성되며, 다만 기혼자의 경우 ‘일지향적 가족주의, 전통주의, 성평등주의’, 미혼자는 ‘성평등주의, 일지향적 가족주의, 전통주의’ 순으로 강하여,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더 성평등주의적 가치를 지향함을 보였다. 성별 로도 보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을 제외한 젠더 규범들의 수용률이 높았지만, 미혼자는 젠더 의식의 남녀 차이가 일관되지 않아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더 젠더 규범에 순응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돌봄역할도 강조하는 ‘일지향적 가족주의’가 여성을 중심으로 강했고, ‘성평등주의’는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을 수용하는 전통주의 특성이 일지향적 가족주의보다 더 강했다. 이는 ‘성평등주의’가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의 수용률이 높은 남성에 의해 내부에서 ‘유연한 성평등주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성성 관념에 반대하면서 그렇다고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동의하는 것도 아닌 ‘유연한 성평등주의’가 한국사회에서 명확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평등주의 내부에서 남성생계부양자 의식이 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맹아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성평등주의의 분화가 여성의 육아 역할과 일가정갈등 외에도,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을 유지하려는 전통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다차원성은 Knight & Brinton(2017) 논의대로 전통주의와 비전통주의 가치가 혼합된 모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인 ‘성평등적(일지향적) 가족주의’와 ‘유연한 성평등주의’ 같은 성평등주의의 분화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한국은 ‘여성 주도의 일지향적 가족주의와 남성 주도의 유연한 성평등주의’의 모습을 보이며, 특히 ‘성평등주의’ 내부에 ‘유연한 성평등주의’의 특성이 발견되어

성평등주의자이면서 남성생계부양자 의식이 강한 남성에 의해 성평등주의가 유연한 성평등주의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젠더 이데올로기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기혼자의 경우 고학력 고소득 가구의 기혼자가 성평등주의를, 저학력 저소득 가구의 기혼자는 전통주의를 지향했고, 정규직도 비취업자보다 더 성평등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 남편 대비 여성의 상대소득이 높은 여성생계부양자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남성생계부양자 가구보다 더 성평등적인 부부일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여성이 정규직이고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약할수록 부부가 함께 성평등주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커서,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여성 취업 장려 정책보다 여성에게 정규직같이 고용이 안정되고 가계경제를 이끌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를 보급하는 정책이 중요했다. 또 미혼자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성평등주의를 지향한 만큼, 청년층의 페미니즘 교육을 체계화하여 이들이 자율성과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된 적응과 타협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성평등주의 성향이 강화되게끔 돕는 대책이 요구된다.

‘박카스 아줌마’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종로3가 중·고령 성매매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희영 (대구대학교), 윤선미 (중앙대학교)

1. ‘박카스 아줌마’ 호출의 정치

2021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재난이 사회적’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시간, 돈을 갖지 못한 사회집단에게 방역수칙은 사치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로 위계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기에 종로3가의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질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박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사회의 중·고령 성매매 현실을 고찰한다.¹⁾ 1990년대 후반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한 ‘박카스 아줌마’는 성적으로 ‘소외된 노년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여성으로 재현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박카스 아줌마’는 여전히 ‘도시 괴담’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권마키 Youtube, 2021.04.21.),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들로 소비된다. 그러나 중·고령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추적과 사회, 구조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관점에서 ‘박카스 아줌마’라는 블랙박스의 주요 행위자를 추적하여 재구성하고, ‘박카스 아줌마’로 재현된 중·고령 여성들의 성매매,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 연구 과정과 주요 질문

2019년 서울지역 성매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희영, 2019)를 토대로 2020년 (사)막달레나공동체가 종로3가 지역에 대한 아웃리치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신뢰 관계 속에서 2021년 7~8월 12명의 중·고령 여성에 대한 생애사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했다. 또 1991~2021년 뉴스빅데이터 검색 사이트에서 ‘박카스 아줌마’ 등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및 온라인 자료에 대한 주요 담론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종로3가 중·고령 성매매의 주요 행위자인 여성들의 생애 경험과 남성 구매자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넘어, 성매매방지법과 경찰 및 법원에 의한 단속과 처벌, 한국사회의 성담론 등의 영향력과 관계를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 3가 중·고령 성매매의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주요한 번역(translate)의 매카니즘은? 둘째, 주요 행위자인 중·고령 여성들의 종로3가 성매매 경험이 드러내는 특징은 무엇인가? 여성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매매’는 어떻게 의미화되는가? 셋째, 중·고령 여성들의 성매매와 가족, 노동시장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 넷째, 종로3가 중·고령 성매매 현실이 시사하는 사회학 및 사회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1) ‘박카스 아줌마’라는 호칭은 탑골공원 등의 장소에서 박카스 드링크 혹은 커피 판매를 매개로 성거래가 이루어진 것에서 유래하였다.

3. ‘박카스 아줌마’의 블랙박스와 번역의 특징들

1) 성산업 주변의 독자적인 행위자 네트워크

1990년대 중반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가 사회적 환경(공원 성역화 사업, 단속 정책 등)에 따라 종로3가 지하철역 그리고 피카디리 극장 주변 골목 등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한편으로 ‘종로3가’라는 서울 중심부 남성들의 일상공간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독장사(single seller)’의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또 종로3가 성매매 경험을 가진 남성들이 ‘뉴페이스’(new face)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전단지 돌리기, 식당 일 등을 하는 중·고령 여성들에게 종로3가 성매매를 하나의 대안으로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행위자들이 조직되고 있다. 즉, ‘박카스 아줌마’는 중·고령 나이에 속하는 개인이 지역의 공원, 지하철, 골목 등의 거리(street)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 행위자 네트워크를 지시하는 상징이다. 겸업형 성매매(룸살롱, 맥양주집 등)나 신변중업소(오피방 등)와의 차이점은 업주, 포주 등의 조직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성매매 연구에서 언급된 ‘성산업(sex industry)’과 구별된다. 또 한국 성산업의 지형도, 즉 생애주기에 따라 10대의 가출패배 조건 만남, 20-30대의 겸업형 및 신변중업소, 40대 이후 집결지로 이어지는 “다양한 성매매 유형 중 마지막 고리”라는 진단(이희영, 2020: 37)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중·고령의 나이가 되어 “싼 성매매”인 종로3가로 오는 것이 주류가 아니라, 대부분 가족과 자신의 생계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거리 성매매에 결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 또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후 ‘풍선효과’로 형성된 ‘변종 성매매’의 형태라는 언급도 근거가 빈약하다.³⁾

2) 경제 위기에 처한 고학력 중년 여성들의 거리 성매매

‘박카스 아줌마’는 저학력 빈곤 여성들의 성매매라는 상식과 달리 1940-50년대 출생한 여성 중 상대적으로 ‘엘리트’에 속하는 여성들이 1990년대~2000년대 초 40-50대의 나이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비숙련 저임금 노동을 거쳐 거리 성매매에 결합했다.⁴⁾ 이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는 1960-70년대에 고졸 혹은 대학 중퇴의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 혹은 ‘결혼 퇴직제’에 의해 전업주부가 되었다가, 중년이 된 시기에 사별, 이혼, 사업부도 등을 겪으며 젠더화된 취업 시장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종로3가로 왔다.⁵⁾

3) 위기를 탈출하고,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지속적 활동

채무 변제 혹은 생계 압박 속에서 거리 성매매를 시작하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생매매가 생존을 위한 일시적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계 및 친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순선, 선숙)은 199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오전 10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 ‘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 가족부양을 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수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작은 집을 마련하였다. 2021년 구술자의 대부분은 종로3가 생활을 통해 매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서 대출금, 주거비, 식비, 자녀들의 생활비 지원 외에 “각종 경조사비”를 감당하고 있다. 종로3가 생활의 경우 중·고령 여성들이 시간 제약, 중간 매개자, 술과 약물 등의 중독 없이

2) 다수의 집결지를 거쳐 종3으로 온 경우는 12명의 구술자 중 순미가 유일하다.

3) “박카스 아줌마란? “노인 상대 성매매하는 중년여성들”(아시아경제 2011.06.17).

4) 구술자 중 선숙, 복순, 현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5) 기존연구 중 오랜 기간 미용실을 운영한 여성이 사업에 실패하자 미용기술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집결지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 및 구조에 대해 분석이 있다(김주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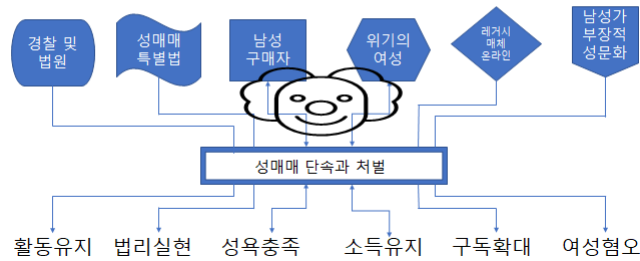
본인의 성실함과 '신용'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적당히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중요하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떠돌이 성매매를 하는 불온한 여성'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박카스 아줌마'라는 도시 괴담의 주요 행위자는 중·고령 생계부양자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성매매는 생계 부양, 자녀교육, 가족공동체의 유지 등 (정상)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4) 단속과 처벌은 '박카스 아줌마'라는 블랙박스의 의무통과점(OPP)

'박카스 아줌마'라는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로는 성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성구매 남성 및 생계 위기의 여성이라는 인간행위자 외에 '종3 동서'로 압축되는 가부장적 성문화,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 경찰과 법원, 담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를 들 수 있다.

〈그림 1〉 '박카스 아줌마'의 블랙박스

종로3가 성매매의 주요행위자와 목표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경찰은 집결지와 종로3가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 건수를 확보하여 활동력을 증명하고, 법원은 즉결로 넘어온 여성들의 '태도'에 따라 처벌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성문화를 체화한 남성들은 일상에서 성차별적 욕망을 정당화하고 실천한다. 각종 언론매체는 종로3가 중·고령 남성의 성매매는 '소외된 노인들의 성문제'라는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묘사하는 반면, 종로3가의 여성들은 불쌍한 남성들을 유혹하여 성병을 옮기는 불온한 존재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 구매자와 여성 판매자들은 단속과 처벌에 의해 각자의 목표 실현과 상충하는 경험을 하며 비가시화 된다. 즉 남성구매자는 사라지고 여성들만 '박카스 아줌마'라는 유명화된 존재로 떠돌게 되는 것이다.

5) 전국의 000 아줌마와 남성들의 유흥공간

1991~2021년 뉴스빅데이터 검색사이트에서 '박카스 아줌마'로 검색된 기사 중·고령 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233건이었다.⁶⁾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는 박카스 아줌마 외에 다람쥐 아줌마, 드링크 아줌마, 커피 아줌마, 들병 아줌마, 산새 아줌마, 모포 할머니, 박카스 할머니가 있었다. 이 용어들은 언론에서 종묘공원, 서울 관악산, 전국의 고속도로 주변 졸음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여성들을 지칭하며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박카스 아줌마'는 종로3가라는 특정한 공간에 고착된 성매매를 넘어서 전국의 등산로, 역전, 터미널, 포장마차, 졸음쉼터 주변으로 조직화된 중고령 성매매의 상징이다. 전국 각지에서 성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여가 및 유흥공간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성판매가 결합되면서 중고령 성매매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동하고 재구성된다.

6)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1년 11월 중 검색.



과학/정보사회학1

과학/정보사회학1

사회 : 백경민 (송실대학교)

1. 한국의 오픈마켓 플랫폼 만들기, 1998-2009
발표 : 김경필 (고려대학교)
토론 : 정지연 (나라살림연구소)
2. 위기의 한국 공학 전문직주의
발표 : 한경희 (연세대학교)
토론 : 유은혜 (송실대학교)
3. 늘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민주화
발표 : 최봉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토론 : 백경민 (송실대학교)

한국의 오픈마켓 플랫폼 만들기, 1998-2009

김경필 (고려대학교)

이 글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이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은 인터넷 인프라와 이용자, 사업자금, 시장 신뢰를 증진시키는 제도와 법, 혁신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작동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정 역사적 조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은 1997년 IMF위기 이후 국가의 위기극복 및 발전전략과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었다. 정부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과 IT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신뢰제도와 법을 구축하는 한편,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택배산업 규제완화도 단행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옥션과 G마켓 등의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여러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모으고, 판매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고,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오픈마켓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은 독과점과 택배업 노동조건 악화 등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위기의 한국 공학 전문직주의

한경희 (연세대학교)

대선 국면의 치열한 진영 대결 중 영똥한 곳이 돌을 맞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연히 돌을 맞고 있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대 건축학부의 이경훈 교수는 “토건족의 비애”라는 칼럼에서 전문가적 양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토목과 건축 전공자들이 토건 투기 세력으로 치부되는 사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짜 토건족에 무겁게 귀를 기울이시라.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처우와 사회 인식에 서운함과 불편함을 표출하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5G가 제공하는 통화 품질이나 체감 속도, 콘텐츠가 이동통신사가 약속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비난과 우려가 높고 국가 재원을 활용한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과장 광고가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선도독식(leading takes all)”의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사실 엔지니어들이 토로하는 이런 종류의 불만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회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엔지니어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직업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와 과정,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와 세계의 변화와 전망을 상상하며 실현하는 엔지니어의 역량과 활동 역시 지역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과학기술 발전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 이거나 지배적 관념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역시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역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 연구는 엔지니어의 역량과 활동,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기대하는 엔지니어 집단 내부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이 엑스퍼티즘(expertism)과 엘리트주의로 수렴되고 있다고 본다. 이 현상은 오랜 뿌리를 지니며, 한국 근대화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기술한국’이라는 용어에 그와 같은 신념과 가치가 녹아 있다. 이 용어 자체는 어떤 면에서 낡고 오래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왔다. 이 연구가 제기하려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국내외에서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지구의 생존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발전이라는 질주 본능을 제어하고 새로운 방향의 기술 발전을 상상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엑스퍼티즘과 엘리트주의로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 공학 전문직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논의하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직으로서 엔지니어 집단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 정체성에 대해 사회학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새로운 세기를 만드는 데 열심인 엔지니어들의 실천과 가치에 대한 사회학계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직업 집단으로서 엔지니어를 단일하고 독특한 발전주의적 주체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기술사회를 진단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엔지니어 집단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가시화되어왔다. 첫째, 국가와 산업 발전의 견인

차이 가능성으로서 등장했다. 이 경우,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끈 주체는 불특정 다수로 전제되며 발전에 기여한 기능적 역할 수행자로 대상화된다. 박정희 집권기 조국 근대화의 기수, 산업역군으로부터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 인적 자원, 국가 연구개발 인력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두 번째는 미래 사회의 발전을 이끌 프런티어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독자적인 역량을 보유한 '기술 주체'로 부각되는 경우다. 최근 원전이나 누리호 발사체 이슈에서 나타나듯이, 정부 혹은 산업 부문의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자원 동원과 배분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많다. 세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이슈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다. 현대 사회의 기술은 더 이상 개인 발명자나 개별 연구자의 산물이 아니다. 기술은 사실상 기술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 재난의 성격도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시스템 차원에서 실패와 위기를 관리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 전문성과 조직이 연관되는 이슈에서 엔지니어나 전문가의 위상이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과학 기술계 엘리트들에 의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엔지니어가 가시화되는 이 세 유형들에서 엑스퍼티즘과 엘리트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고 작동되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전문직으로서 엔지니어와 현대 기술에 대한 사회학계의 인식 부족은 공학 전문직주의의 위기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위기와 직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전문가 대 시민이라는 단순화된 대결구도는 문제 진단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를 대상화하면서 자신도 대상화되는 모순에 빠질 뿐이다. 이 연구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주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고' 자리매김 '된' 엔지니어들 자신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식에 있어서 박정희 집권기의 산업화 패러다임과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경쟁력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늘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민주화

최봉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선도국가를 추격하던 추격형 시대(catch-up era)를 넘어서면서, 탈추격형 연구개발 체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 팬데믹 등 미증유의 세계사적 도전 앞에서 인류 사회의 공통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선회를 위해서는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정책 형성 및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화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해 제기된 활동들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높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정부 연구개발 투자예산의 “배분 및 조정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4차 산업혁명의 기대 속에서 탄생한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 플랫폼(R&D PIE)”의 등장과 전개상황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기초하여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행위자(actors)를 기술하고, 고찰하였다. 정책입안자, 과학기술전문가 이외에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Data)의 상호작용을 추적하면서, 정책 결정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data) 기반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도입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과학기술 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키워드: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증거기반 정책, 책임지는 연구혁신, 행위자 연결망 이론, 과학기술 민주주의

Keywords: R&D PIE, Evidence-based policy,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 Data Politics, Actor-Network Theory, Science and Technology Democracy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8일(토요일) | 오후 세션3



특별(한국사회과학자료원):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이야기하다

특별(한국사회과학자료원):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이야기하다

사회: 배 영 (포스텍)

기조발제: 소셜미디어데이터를 연구에 쓰기 위한 방법

발표 : 구혜란, 김혜진, 허혜옥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배윤경, 홍리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백영민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김란우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재관 (카카오 정책팀 부장), 김용학 (Tapacross 대표),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국제정치사회학

국제정치사회학

사회 : 박해남 (원광대학교)

1. 5월 광주를 둘러싼 국제 정치: 1979-1982년 외교 문건을 중심으로
발표 :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김학재 (서울대학교)
2. 메가아시아의 발현과 아시아의 변동: 아시아화 vs 중국화?
발표 :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3.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발표 : 박해남 (원광대학교)
토론 : 박치현 (대구대학교)
4.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인 이민자의 시민권 정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발표 : 박 우 (한성대학교)
토론 : 송영호 (동국대학교)

메가-아시아의 발현과 아시아의 변동: 아시아화 vs 중국화?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오늘날, 아시아는 점차 서로 연결되고 상호 연동되는 '메가 지역'으로 탈바꿈되어가는 듯 하다. '아시아의 세기', '아시아의 시대'란 담론 속에서 서구의 타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 스스로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증대하는 가운데, 현재 발현하고 있는 '메가-아시아'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해해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도전적 과제다. 확실히 지금 아시아는 운명의 교차로에 있다. 어떤 학자는 이미 아시아의 세기는 지났다면서 아시아가 유의미한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근대 이후 아시아의 부상이 갖는 세계사적, 문명사적 의미는 이제 비로소 논의될만한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아시아화'(Chang, 2014)란 관점에서 아시아의 변동을 이해하고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세계적, 특히 아시아 내의 논란들을 참고하여 아시아화와 중국화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시아의 아시아화' 관점은 '아시아의 부상'을 단순히 세계 질서에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empowerment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금융, 교육, 인구, 사회, 정치, 문화,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내부의 상호작용과 흐름이 극적으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되어 이해해야 함을 제시한다. 개인, 사회 및 산업제도, 커뮤니티, 도시, 민족/국민 국가, 하위 지역(subregion), 아시아 전체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내부의 대부분의 사회적 주체들과 단위들이 (그 다양한 정도와 상이한 결과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초국가화되어가고 있다. 지금 아시아 내부의 사회적 주체들과 단위들이 상호 연결되고 이를 호명하고 상상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아시아를 하나이자 여럿인 실체로서 발현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를 둘러싼 서구적인 시선을 넘어 새로운 이해와 상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시아를 인식, 이해, 호명하는 역사적·현재적 담론을 '아시아주의(들)'(Asianisms)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타자화된 아시아주의, 기존의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를 인식, 이해, 상상해볼 수 있는 담론과 실천들은 현재진행 중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시아의 부상'이 과거 전통 문명으로의 회귀나, 기존 지역 및 문명 강대국들의 귀환으로 인식될 우려다. 특히, 현재 아시아의 부상이 아시아의 아시아화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국화로 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중국화'(sinicization / sinification)란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발표에서 아시아의 아시아화와 중국화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담론, 실천들을 탐색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시아의 부상이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아시아화가 아시아의 중국화로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에는, 중국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하는 '아시아의 중국화'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아시아를 내포하는 '중국의 아시아화' 또한 간략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재 발현되고 있는 '메가-아시아'의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최근 점점 매력적이지 않게 변해가고 있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차이나 리터러시'를 증진할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박해남 (원광대학교)

이 글은 1930년대부터 가족을 중요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에 있어 복지엘리트라 불리는 지식인 혹은 관료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2차대전 이전 프랑스 가족 정책의 도입을 시민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길항의 결과로 설명하거나, 프랑스 가족정책 통사를 독립변수에 놓고 이것이 출산율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왔다. 하지만 이 글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통사를 복지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이 프랑스 가족 정책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엘리트란 에콜 폴리테크닉,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국립행정학교(ENA) 등을 졸업하고 복지 영역에서 전문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 프랑스 사회보장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을 일컫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윌리엄 제니에즈(William Genieys)와 파트릭 하센퇴플(Patrick Hassenteufel)은 이들을 복지 엘리트(élite du Welfare)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국가귀족(La Noblesse d'État)'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복지 엘리트들라는 명제를 증명하고자 한 이들의 연구와 달리, 이들이 복지엘리트라 불린 이들이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초기부터 관료들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1920년대까지 민간기업들이 시행 하던 가족수당 제도는 출생축진주의자(nataliste)들에 의해 인구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장려되었는데, 이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입법을 한 것은 아돌프 랑드리(Adolphe Landry)와 알프레드 소비(Alfred Sauvy) 같은 지식인-관료들이었다. 전자는 고등연구실천원(É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경제 및 인구담당 교수를 역임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케이스로, 기업주들로 하여금 두 자녀 이상의 노동자 가족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1932년 최초의 가족수당법을 입안하였다. 후자는 1930년대 자유방임 주의가 만들어 낸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 생시몽주의적 테크노크라트들의 모임인 X-Crise의 일원이었다. 인민전선 정부에서 경제정세연구소 소장이 되었다가 전후에는 국립인구연구소 소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1938년 법안을 통해 가족수당을 보편화하였고, 소득과 관계 없이 자녀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들었다. 이듬해 가족법의 형성에도 관여하여 1차녀 수당을 폐지하고 3자녀 수당을 늘리며, 전업주부 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통적 성별분업을 유지하면서 다자녀가족이 형성되도록 촉진하고자 한 것이었다.

X-Crise 그룹은 2차 대전 이후 더욱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생시몽주의와 뒤르켐주의에 입각한 계획국가이자 규제국가였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 하에서 1946년 '국가기획원(Commissariat générale au Plan)'이 만들어졌고, 이듬 해 산업근대화 계획인 이른바 '모네 계획(Plan Monnet)'이 만들어 진다.

전후 프랑스 가족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였다.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출신으로 아돌프 랑드리 친구 아들이었던 그는 영국 망명당시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를 접했고, 이로부터 통합적 사회보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전후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이 때 질병, 노령, 수납, 가족을 4대 부문으로 만든다. 그리고 가족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족수당, 외벌이수당, 주택 수당, 전업주부수당 등을 만들고, 다자녀 가족의 소득이 무자녀 가족의 소득과 같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의 전업주부화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수당은 초기부터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4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정책은 1960년대부터 균열을 맞는다.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부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났고, 여성들의 임금은 전업주부수당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전업주부수당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한편으로는 배제된 이들(les exclus)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또한 196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얻으면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하나씩 폐지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끄 들로르(Jacques Delors) 같은 관료들은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가족 정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자끄 샬방-델마(Jacques Chaban-Delmas) 총리가 추진한 '새로운 사회(nouvelle société)' 프로젝트를 통해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가족수당 제도를 바꿔갔다. 1970년대 초 고아수당, 미성년 장애수당, 성인장애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특별수당 제도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서 1970년대 중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정부 시기에는 시몬 베유 장관 하에서 실무자로 일한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베르트랑 프라고나르(Bertrand Fragonard)가 주도한 1976년 한부모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과 1977년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등이 선별주의적 가족 수당으로 도입되게 된다.

사회당(Parti socialiste)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은 2차대전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공산당과 연정을 이룬 미테랑 정부는 사회주의적 및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2년만에 포기한다. 1986년에는 우파인 자끄 시라크(Jacques Chirac)를 총리로 입각시켰고, 1988년 대선에서는 승리하지만, 1993년 총선에서 패하자 다시 보수적인 에두아르 발라뒤르(Édouard Balladur) 내각을 출범시킨다. 미테랑을 이은 시라크는 1997년 총선에서 패하자 반대로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에게 조각권을 주었다.

이처럼 좌우를 넘나드는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은 비교적 일관되었다. 복지엘리트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질 조아느(Gilles Johanet)는 사회당정부가 출생장려주의적 정책을 지속하도록 만들었고, 반대로 시라크 정부 시기에는 미셸 바르자흐(Michèle Barzach)가 신자유주의적 가족정책의 도입을 막아냈다. 오히려 당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실업문제의 해소와 가족 정책을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고용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0년대 초에는 다시 베르트랑 프라고나르가 전면에서 등장한다. 그는 발뤼디르 정부의 출생장려주의적 가족 정책을 굴절시키고 보편주의적 가족 정책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복지 엘리트들은 가족수당을 보편주의와 출생장려주의에서 선별주의로 변화시켜갔으며,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대신 일과 가족의 양립 혹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주의적 가족 정책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일관성은 한국의 사회문제 대응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도 당대의 사회문제에 결코 둔감하지 않은 정책입안자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계획기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경제기획원만 아니라 사회기획원 역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인 이민자의 시민권 정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박 우 (한성대학교)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러스학 또는 생물학적 논쟁과 함께 기존의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및 중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정치적 시선들의 논쟁을 증폭시켰다. 중국 관련한 무역, 홍콩, 소수민족, 인권 등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한 게 2018-2019년이였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매우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포퓰리즘과 공화당 강경파들의 언행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중국 외교 당국과 재외공관 외교관의 언행도 거칠고 공격적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두 나라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일 것이다. 중국에 있는 미국인보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규모가 월등히 많았기에 팬데믹 하에서, 그리고 미국의 인종주의 부활과 함께 중국인 나아가 아시아인이 차별받거나 폭행당하는 뉴스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격하게 팽창한 상황에서 중국출신 이민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2020년에 중국계 이민자가 설립한 S단체를 중심으로 이 단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S단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도 열성 회원들이 있는데, 이 “한국지부”도 뉴욕에 본부를 둔 S단체의 활동과 연동하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지하다시피 사드이슈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 차원에서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 초의 “중국인입국금지” 국민 청원, 3월의 소위 “차이나게이트”, 그리고 2021년 강원도의 “한중문화타운” 건설 반대 국민청원,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윤동주 국적 문제, 모 드라마의 월병과 중국풍 문제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동시적 변화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 지부를 둔 중국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정치의 양상과 성격을 결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영미권의 중국 관련 여론, S단체의 설립과 구성, S단체의 활동 방식과 방향, S단체의 한국지부의 활동 방식과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8일(토요일) | 오후 세션4



법사회학

법사회학

사회 : 한민경 (경찰대학교)

1.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

발표 :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민경 (경찰대학교)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법의 지배는 정치권력을 지니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에 기속시켜 정치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이다. 법의 지배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법의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지니고 있든지 간에, 법의 지배가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의 지배’라는 단어를 빌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2. 2. 6.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돌림 및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 조사 방법에서부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이행,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 및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지배’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매뉴얼이 상세해질수록 매뉴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학교폭력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야 하는 등의 수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매뉴얼을 숙지한 후에는 큰 고민 없이 일사천리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고, 추후에 사안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도 큰 문제없이 해결되는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매뉴얼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대가로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과 경험에 바탕을 둔 학생과의 상호 작용, 교사들 사이의 성찰과 협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학생 지도의 실천 등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사 자율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범죄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나 기존의 형사사법에서 소외된 피해자를 향하여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고찰 하에, 처벌과 응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형사사법에 관점을 바꾸어 치료와 화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형법학과 형사정책학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이념이 이론적으로 소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회복적 정의 원칙을 형사사법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는 2006년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는데, 2010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되면서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제41조—제46조). 또한 2007년에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 보호사건에서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화해권고도 도입되었다(제25조의3).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 회복적 정의의 적용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2013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복적 정의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회복적 정의 이념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프로그램에서, 6건의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시범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형사재판 절차에의 회복적 정의 제도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회복적 정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기존의 형사재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과 대면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함께 논의하고 금전 또는 금전이 아닌 형태로 피해의 회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법의 지배 현상’은 법이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에 침투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이 변용되고 법률 이외에 도덕이나 양심, 윤리의식 등 다른 기준이나 질서, 해결방안은 모두 사라지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지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더 이상 관련 당사자들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창의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법이 정하여 둔 ‘평균인’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평균인이 되어, 평균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평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균인에게 기대하는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법의 지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기준인 법만이 남아 역설적으로 ‘법의 지배’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젠더2

젠더2

사회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1.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혜경 (전북대학교)
토론 : 김 영 (부산대학교)
2. From Solidarity to Fluidarity: Young College Women's Flexible Feminist Identity Formation and the Corset Free Movement in South Korea
발표 : 정고운 (경희대학교)
토론 : 김조은 (KDI)
3. 해방 후 국가에 의한 성폭력과 과거청산 과제
발표 :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토론 : 김명희 (경상대학교)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경 (전북대학교)

I. 연구목적과 방법론

이 글의 목적은 전북지역, 그 중에서도 전주시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페미니즘 원년”이라고도 불리는 2015년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의 “페미니즘 리부트”가 대도시가 아닌 중규모의 지역도시에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과연 디지털 페미니즘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리부트 발생의 계기가 되었는지, 혹시 그랬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왜 달랐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페미니즘 리부트 등 new feminism의 이전 시기 운동과의 연속성과 단절성(Dean and Aune, 2015; 김보명, 2020 등), 리부트의 역사성과 맥락성, 위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이라는 상황적 고려(대도시규범성을 넘어서, 미국, 서부유럽 이외 지역의 특성, Muszel, 2018 등), 저항과 참여의 방식의 특성(페미니스트 독학자의 탄생, 포스트잇 애도정치와 통감의 정치학, 김주희, 2017; 윤지영, 2016 등), 분리주의 급진페미니즘과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이원론적 담론화의 한계(실라 제프리스, 수잔 스트라이커, 교차성이론, 소위 영페미니즘과 영영페미니즘 등), 페미니즘과 세대 패러다임(generational paradigm) 등을 검토하였다.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심층인터뷰이다. 연구주체는 지역 페미니즘 리부트의 대표적 단위들의 핵심 참여자, 활동가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는 대비되는 소모임 참여자, 그리고 그에 대한 비교대상으로서 리부트 이전 세대(연대체였던 전북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 및 소위 지역의 영페미), 등으로 총 9명이며, 인터뷰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리부트 참여자들의 경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았다. 연구대상 지역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대학)의 소재지이자, 필자는 당시 교내 여성연구소의 소장직과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의 지도교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심층인터뷰의 방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필자의 경험과 관점이 결합된 성찰적 자문화기술지의 성격도 가진다.

II. 페미니즘 리부트까지의 지역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 민민운동과 지역발전론의 궤적, 그리고 사회운동의 제도화

리부트 이전까지 전북지역의 여성운동은 전북여성단체연합이라는 우산조직 외에, 여성의 전화, 여성농민회, 여성노동자회 등의 회원단체,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보호와 자활을 돕는 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이 주요 주체이나 구심점은 연대체인 전북여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성격은 교차적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가졌던 전통이 있는데, 왜냐하면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민운동으로서의 사회운동의

전통이 그랬으며, 초기 여성운동의 핵심주체들의 기독교적 배경, 금지주의 정책하의 성매매여성 지원사업과 같은 국가의 후원과 결합한 여성인권지원사업의 발전이 그러하였다. 특히 경제발전의 소외지역이라는 논리에 의해 선거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화된 여성정책, 가버넌스적 지원체제로 인한 상담사업의 활성화 및 여성운동의 제도화라는 한계 등. 여학생운동도 80년대에는 민민운동적 학생운동의 틀이라는 전통 속에서 젠더적 독립성을 전개하기 어려웠으며, 90년대에는 여학생 휴게실 설치, 2000년대 이후로는 여대생커리어 센터와의 협조적 사업 등 취약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여학생운동사에 대해서는 정리된 연구가 거의 없어서 향후 심층연구가 절실하다.

III. 리부트 이후 페미니즘의 유형과 활동

1. 연대체: 전북대학교페미니스트네트워크(전페넷)

계기는 미투운동이나 점차 페미니즘 운동 전반으로 확산되어 학내 올바른 성평등한 성문화 정착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젠더 감수성 항목을 교수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 성평등 전담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 ‘여성학 강의를 필수교양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서명운동(1,200-1,300명)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센터,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페미니즘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을 수행. 그러나 사람의 부족, 대학 반여성주의레짐(본부.인권센터의 젠더무감성과 총학생회의 기계적 정치중립성의 입장), 활동가 내 이념적 차이로 인한 이탈(교차성 vs 램프), 운동방식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등으로 활동력이 오래 가지 않았다. 2018년에 시작되었으나 2년이 지난 2020년 그 에너지는 코로나와 함께 비교적 일찍 소진되었다고 보이며, 현재는 온라인 활동만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2. 대학내 동아리와 소모임들

3. 대학 밖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소위 “독서모임”: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4. 가버넌스 기구의 활성화와 페미니즘 저변의 확충: <성평등전주> 사업과 그 참여자들

(5. 대안매체 활동: 소수이지만 팟캐스트, 유튜브 등).

IV. 분석: 온라인 여성운동은 지역의 장소적 한계를 넘는 운동을 만들어내었는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

1. 발생의 계기:

- 활동가 정체성 참여자의 경우 - 소수의 (준비된) 페미니스트.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논쟁을 숙지 하면서 페미니스트로 입문. 전페넷이라는 활동가 모임에 참여. 이미 기존의 사회운동 모임의 참여 경력.
- 소모임 참여자의 경우- “강남역 여성살해”에 대한 인지와 공감, 세월호 세대로서의 통감능력
- 안전과 위로의 공동체에 대한 추구: 백래시가 가져온 역설적 효과

2. 어떻게 다른가? 유지의 기제의 특성: “독서모임”이라는 안전한, 그러나 소극적인 저항방식.

소모임의 일상활동은 지식생산의 장으로서의 독서모임과 “함께 읽기”의 페미니스트 되기의 수행을 통해 유지됨. 이에 비해 직접적인 활동 위주의 연대체는 (학생운동) 선배들의 부재로 인한 경험부족, 헌신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진과 사람의 부족, 내부의 이론적 차이들로 인해 축소되어감.

3. 왜 다른가? 교차주의와 연대: 생존으로서의 연대와 이념적 경계의 비가시화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여긴 진짜 한줌이거든요... 연대를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여요’”

- . **퀴어운동과의 연대:** 퀴어 독서, 퀴퍼 참여. “래디컬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무 편을 가르치는 말자” 전주는 이미 2018년 이래 <전주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해 온 도시적 맥락.
- . 기존의 **조직 여성운동과의 연대-** 여연과의 협력관계. 3.8여성대회 참여 등. 여연은 물적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리부트 세대를 지지해줌. 조직운동과 디지털 페미니스트간의 거리감은 드러나지 않음.
- . **국가페미니즘과의 결합-** 페미니스트가 주도하는 민관협력 가버넌스 기구(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의 <성평등전주>)가 지역 젠더이슈 연구사업 참여와 네트워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마침 지자체의 장이 시민사회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는 입장. 또한 성평등전주는 가버넌스 방식의 <여성인권지원센터>의 10년 이상의 페미니즘 운동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
- . 소도시의 운동에서 작동하는 **관계적 자원**의 중요성- 서로간에 인맥이 중첩되어 있어서 연결이 쉽고, 그만큼 관계적 자원이 중요하게 작동함. 관련하여 **이념적 경계**를 심화시키는 태도는 기피됨. 토론보다는 모임을 떠나는 방식. 한편 중규모 도시의 익명성 부재라는 점으로 인해 핵심활동가들은 전주가 아닌 지역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타지역 출신이 경우가 더러 있었음.
- . **세대를 넘는 연대-** 미투운동에 동참했던 여성학 강사들은 학교 “선배”. 학생층의 부족한 동력은 교수, 여성연구소와 같은 기구와 협력.
- . **지역의 역사와 위치성-** 바탕에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궤적, “소외지역”이라는 발전론적 논리에 습윤된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동질성.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16년 박근혜퇴진운동에 참여한 리부트 경험자들도 존재. 현재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의 중심에 세월호에 대한 천막농성과 깃발이 상존.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연대운동의 경험치도 쌓임.

==> 결국 지역의 페미니즘 리부트는, 작(적)음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며,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내 다름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 작음(적음) 속에서의 존재양식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From Solidarity to Fluidarity: Young College Women's Flexible Feminist Identity Formation and the Corset Free Movement in South Korea

정고운 (경희대학교)

Introduction

Research on social movements have investigated the emergence, trajectori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movements (Polletta and Jasper 2001). Scholarly attempts on unpacking the causes and outcomes of collective behaviors and social movements have mostly focused on resource mobilization (Gamson 1975; McCarthy and Zald 1973) and political process/opportunity theories (McAdam 1982; Tarrow 1989), to answer the questions of how to recruit participants of social movements and mobilize members for the movement. Although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role of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s (Fominaya 2010; Polletta and Jasper 2001; Smithey 2009), there has been a paucity of work on looking into how flexible identities emerging in the globalized world have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collectively cooperate for the social movements.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dentities and social movements? How do increasingly flexible individual identities shape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rset-free-movement in South Korea. The corset refers to South Korean society's rigid standards of beauty, imposed particularly on women, as South Korea is known for its obsession with appearance and thriving makeup culture, dubbed "K-beauty", which is aligned with gendered oppression on women (Choi 2018). The corset-free-movement makes up an exemplary case to investigate how individual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movements, without state-led, organized, strategically leading players, and suggest the slowly shifting gender patriarchy in Korea. A recent survey on the 20s suggest that young people disagree the gendered expectations including dress-up labor for women and breadwinning role for men. A study also suggests that misogynic discourses recently emerged in the online space symbolically show the macrosocial changes in Korean society that cannot be reduced to a micro diagnosis of extreme gender conflicts (Ma et al 2020). In such backdrop, the current study on the corset-free-movement illuminates the causes, consequences, and mechanism of the collective ac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include:

- 1) How do young women's identity shap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rset-free movement?

- 2) What are the individu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e movement?
- 3) What contextual conditions explain the occurrence of the corset-free- movement?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Sociologists of collective behavior and social movements (CBSM) have long striven to illuminate the emergence, trajectories, and outcomes of collective action (Polletta and Jasper 2001). Along with a dominant assumption on the role of grievances in collective actions, depicting movement participants as largely irrational actors, researchers attempted to explain mobilization in favor of more structural perspectives that took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resources, organizations, networks, and political context. In their effor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se multiple sites of collective action, movement scholar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sources,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and also the agency of movement actors. Until now, several theories including resource mobilization, political process/opportunity, and cultural theories including collective identity have been applied in order to explain why social movements occur and how they evolve over time (Gamson 1975 1991; McCarthy and Zald 1973; McAdam 1982; Tarrow 1989).

In particular, scholars of social movements have understood framing processes as the means by which movement actors translate grievances into action, as a major impetus for participation in protest, and as a vehicle for creating and sustaining collective identity (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Benford and Snow 2000; Snow 2004). This symbolic work is an important tool not only for recruiting participants during the early life of a movement but also for maintaining membership and morale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targets, such as the media, the state, and movement opponents, in order to achieve both political and cultural outcomes (Cress and Snow 2000; 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McCammon 2001). In addition, research examining the dialectic relations of personal and collective identity has shed light on how organizational efforts of creating collective rituals, emotions, and boundary work have contributed to the making of collective identity. For instance, organizations cultivated activist identities through the use of politicizing personal narratives (Oyakawa 2015), and activists learn to internalize a collective moral imaginary - a cultural schema that affirm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personal motivations - to situate them within a larger social structure (Delehanty and Oyakawa 2018).

In such ways, personal identity cannot be separated from collective identity, as exemplified by the idea that "the personal is political", and feminist scholars have long asserted that everyday life can become the basis of political analyses (Taylor et al. 2009). Recent scholars looking into the new social movements, based on process-centered and identity-based perspectives, have also negated the assumption that personal, social, and collective identities are all independent, and focused on how people construct their identitie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the social movement. Therefore, a notion highlighting such complexity is coined as "fluidarity", which captures activists' rejection of

representative politics but emphasis on individuals' diversity, heterogeneity, inclusivity, and the strength of weak ties. In the new social movement model, personal identity, which emphasizes relational, contingent, and durable characteristics, become more significant, and activists are likely to identify themselves as belonging to a broader social movement. McDonald (2012)'s notion of fluidarity characterizes the shared ways of speaking or acting that empower unique personal self and voluntary expressions of activists. In this model, activists are likely to be highly educated with a culture of individual ways of doing activism, in the blurred area of private and public, personal and professional, and work and professional identities. This paper draws on McDonald (2012)'s concept of fluidarity and expand its concepts in the unique context of South Korea where gender inequality is manifested in the operation of rigid beauty standards.

Data and methods

This study draws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40 young women students who were born after 1997 and attending top-tie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to October 2021 through zoom calls. The interviews were taken place at home and lasted for 1.5 to 2 hours. The interview guide consists of three parts: 1) personal background, 2) views on feminism and online feminism, 3) perceptions of the corset-free-movements, 4) feminist identity formation, 5) dating, mating, and marriage, 6) gender fairness issue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in Korean, and for interviewees, a gift card (\$20) was given as a token of gratitude.

Findings

Interview participants did not belong to one or two clear women's organizations or movements but broadly defined themselves as a feminist. I found that young students were struggling to identify what feminist truly means for themselves and others, and they are situated in the journey of carving out their feminist identity. Feminist is clearly an imagined blurred social group since there is no one way of defining it but each interviewee had a different way of interpreting it. Therefore, their narratives showed active ways and processes of self-making to belong to and transition to feminists. Four types of feminist identity formation were appeared as pathways for individual university students to belong to a socially imagined group of feminists in Korea.

The first type is a reflexive self-making which is to discover the self-enlightenment after encountering and learning feminism. Young women experienced the transformation of their own perspectives and value systems through day-to-day lives and self-presentation in online platforms. Women considered that being a feminist is to practice "small things" in daily lives, such as showing personal experiences, experiencing the transition of their own

paradigm, and uploading their opinions on feminism on Instagram. The second type is a discursive participatory self-making, which is to participate in contentious conversations and arguing with other people about gender issues, which make them feel the sense of feminist identity. University students considered that being a feminist is to keep talking about their own ideas, shared deep stories with people around them, and do not compromise their feminist opinions.

The third type is a scholarly self-fashioning, which is to carve out scholarly feminist identity through the mastering of feminist books, theories, and research, which occurs in the collective interactions with university club peers, department friends, and classmates. They emphasized that they are not a real expert on the feminism yet and constantly emphasized their arduous endeavors to read more feminist books, take classes on gender, and discuss hot-buttoned topics with others. The fourth is a social movement participatory self-making, which is to make a firm feminist identity participating in the core feminist groups and feminist practices, including feminist club activities, progressive movements such as veganism, and feminist network across universities. By

In addition to the varying pathways of feminist identity making, I found that there is not a uniform participation in the corset-free-movement, but students practiced the corset-free-movement in various degrees. A group of students tend to show a loosely attached moderate participation in the corset-free-movement, whereas several students showed more strongly attach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rset-free-movement. Quite several students thought that the true meaning of the corset-free-movement is not to abandon all make-ups but to practice make up whenever they need to and have a voluntary mood for the make-up. By emphasizing one' autonomous will and respect for diverse thoughts, their focus lied on the operation of free, autonomous, and voluntary wills of actors involved in the corset-free movement. Several students mentioned that they strictly practice short haircut, wide-legged pants, no-bra, and no-make up, throwing away all their feminine clothing and makeup tools. The varying degrees of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women's differing ways of identity making. Women students forming their feminist identity, based on more individual-oriented style, are likely to loosely practice no make-up and moderately practice dress-up labor. They consider the movement to carve out personal individuality as well as the breakdown of masculine gaze and beauty standards.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mbedded in more group-oriented, collective forms of feminist identity making are likely to strongly practice the corset-free-movement. They tend to find the economic and other benefits of having no-makeups and getting free from rigid beauty standards.

Clearly, there are several consequences of the corset-free-movement to participants themselves as well as the broader society. First, interview participants stated that the cost of the dress-up labor is lessened by saving time and money taken for make-up. Young women have realized that it is unfair to squander money on make-up, so they tried not to spend money on them since their active or moderate participation in the corset-free-movement. Some people said that they could save time in the busy morning

which used to cause the time pressure for many women. Second, women have experienced the feelings of liberation from masculine beauty standards as women have felt forced to do dress-up labor so escaping that norm made women feel freer and more comfortable. Third, the meaning of the dress-up labor has been shifted to doing makeup for one's own desire by individual motivations. They considered make-up as a voluntary action and choosing dress-up labors whenever they want is a true realization of the corset-free-movement, rather than a militant abandonment of dress-up labor. Fourth, the scope of the expression of individuality was broadened, as many women could choose their own fashion styles and develop personal tastes of make-up, clothing, and body shape. Finally, women felt that they were empowered, with a sense of comfort and confidence about their own appearance. Women found that they become less sensitive about others' negative remarks and shaming on body shape, hairstyle, and other aspects of their appearance.

References

-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 Cress, Daniel M., and David A. Snow. 2000. "The Outcomes of Homeless Mobilizatio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Disruption, Political Mediation, and Fra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4): 1063-1104.
- Choi, Jieun. 2018. "The K-beauty Nation Begins to Question Its Obsession With Beauty." *Korea Expose* November 15 2018.
<https://www.koreaexpose.com/south-korean-women-question-beauty-obsession-remove-corset/>
- Delehanty, Jack, and Michelle Oyakawa. 2018. "Building a collective moral imaginary: Personalist culture and social performance in faith-based community organizing."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6(2): 266-295.
- Flesher Fominaya, Cristina. 2010.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s: Central Concepts and Debates." *Sociology Compass* 4(6): 393-404.
- Gamson, William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Gamson, William 1991. 'Commitment and Agency in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6(1): 27-50.
- McAdam, Doug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mmon, Holly J. 2001. "Stirring Up Suffrage Sentiment: The Formation of the State Woman Suffrage Organizations, 1866-1914." *Social Forces* 80(2): 449-480.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6 (1977): 1212-1241.
- McDonald, Kevin. 2002. "From Solidarity to Fluidarity: Social Movements Beyond Collective Identity'--the Case of Globalization Conflicts." *Social Movement Studies* 1(2): 109-128.
- Oyakawa, Michelle. 2015. "'Turning Private Pain Into Public Action': The Cultivation of Identity Narratives by a Faith-Based Community Organization." *Qualitative Sociology* 38(4): 395-415.
- Taylor, Verta, Katrina Kimport, Nella Van Dyke, and Ellen Ann Andersen. 2009. "Culture and Mobilization: Tactical Repertoires, Same-sex Weddings, and the Impact on Gay Activ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 865-890.
- Snow, David A. 2004. "Framing Processes, Ideology, and Discursive Fiel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1: 380-412.
- Ma, Kyunghye, Moongil Kim, Jihyun Choo, Sunki Kim. 2020. "An Analysis of Gender Conflict from Youth's Perspectives and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to the Inclusive N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Polletta, Francesca, and James M. Jasper. 2001. "Collective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283-305.
- Smithey, Lee. 2009. "Social Movement Strategy, Tactics, and Collective Identity." *Sociology Compass* 3(4): 658-671.
- Tarrow, Sidney G. 1989. *Struggle, Politics, and Reform: Collective Action, Social Movements and Cycles of Protest*. Ithaca, N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해방 후 국가에 의한 성폭력과 과거청산 과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났던 국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①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성폭력, ②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성폭력, ③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의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운동은 시민사회 주도로 꾸준히 전개해왔다. 그러나 해방 후 과거사 성폭력의 과거청산 문제는 아직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간 다른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 드러난 해방 후 과거사 성폭력의 주요 사례로는 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현장의 성폭력(강간, 성기 폭력, 임부와 태아 폭력, 신체 절단 등), ② 공안시국사건 구금자나 일반 형사사건 구금자에 대한 성고문, ③ 5·18항쟁, 부마항쟁과 각종 사회운동 진압 과정의 성폭력, ④ 정보기관의 사찰관리 과정의 성폭력, ⑤ 강제 격리·수용·이주·노역 사건 관련 및 국가 관리 시설의 성폭력(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에서 증언된 시설 수용 아동 성폭력, 서산개척단 사건에서 증언된 강제 결혼과 성폭력, 한센인 강제 낙태와 단종 불임 시술 등), ⑥ 한국군과 유엔군 '위안부'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학살 현장, 사회운동 공간,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수사 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포함하면 그 피해생존자는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성 평등 관점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과거청산 과정에 성폭력은 명확한 범주로 유형화되지 않았다. 여러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우선순위나 조사기준을 정할 때도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보고서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주변화되었거나 제대로 실리지 못했다. 지금 2기 진실화해위도 마찬가지다.

남아공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과거청산 영역에도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왔으며, 21세기 들어 많은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과거청산 기구를 운용하면서 성폭력 문제를 과거청산 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1995년에 출범했던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이하 '남아공 TRC')의 경우, 초기에는 젠더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여성학자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남아공 TRC는 과거사 성폭력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여성 특별 청문회를 열어 피해생존자들이 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할 수 있었고 주제별, 부문별 청문회에서 서도 여성, 아동·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젠더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 그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했다. 남아공 TRC의 이와 같은 노력은 비록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후 여러 나라의 과거청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5·18항쟁의 경우, 2021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를 진상규명 범위 및 피해생존자 범위에 포함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 상담·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제 5·18항쟁 피해뿐 아니라 해방 후 과거사 성폭력 사건 전반에 관한 과거청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진실화해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화해위 안에 '과거사 성폭력 전담 조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조사는 일반 과거사 사건 조사와 달리 젠더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 피해생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일반 성폭력 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국가폭력의 측면에서도 사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별도의 전문가로 조사관을 새로이 충원하는 한편, 기존 조사관에 가운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위원회 외부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학계 연구자와 심리상담 전문가가 결합하여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 목표와 조사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필자가 몇몇 피해생존자를 만나본 바에 의하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우선, 피해생존자 중 고령자가 많았고,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심신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군경이라는 것 외에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생존자 진술 외에는 사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생존자가 트라우마 때문에 부분적 기억 상실(해리) 증상을 보이면서 사건 발생 일시나 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해생존자가 가족의 시선을 의식해 특정 부분의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피해 배보상보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피해생존자들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이러한 조건이므로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조사목표나 접근방식은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별 신청인 구제를 중심으로 하며 채십이나 배보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도 다른 면이 있다. 특히, 제삼자 증언이나 가해자 증언, 또는 문서 기록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진실규명 불능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진상규명 과정에 2차 가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조사목표와 원칙을 수립해 「조사심의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신청사건 조사 외에도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다른 국가폭력 사건과 결합하여 일어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기존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간 다른 사건을 조사하면서 놓쳤던 성폭력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는 종합하여 '과거사 성폭력 백서'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생존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신청하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에서 과거사 성폭력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피해생존자들이 신원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비공개 청문회나 증언대회, 또는 조사 사례 보고회 등 피해생존자들이 신원 정보 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이 2차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끌어내는 공간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치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은 피해생존자 지원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접수 중이다. 이 법안에 과거사 성폭력 사건도 진상규명 과제로 명시하고 가해자 처벌, 피해 배보상과 치유 지원 등의 후속 조치 시행 조항을 담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등 여러 겹의 억압 속에 성폭력과 국가폭력의 교차지점에 있어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에 민간 단위가 아닌 국가기구가 나서서 성 평등 관점에 의한 과거청산을 수행할 때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해방 후부터 있었던 과거사 성폭력 사건은 피해생존자 상당수가 고령이므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적 치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정보사회학2

과학/정보사회학2

사회: 전 준 (충남대학교)

1. 유전자 변형 모기 환경방출실험의 현황과 쟁점: 옥시텍 Freindly™ 모기의 미국 플로리다 실험을 중심으로
발표 : 박주형 (고려대학교),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토론 : 우태민 (카이스트)
2. 미래로 만든 도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골재 이동의 정치
발표 : 김준수 (카이스트)
토론 : 박서현 (Virginia Tech)
3. 세월호의 과학기술학, 해결된 문제와 미해결 질문들
발표 : 홍성욱 (서울대학교), 황정하 (서울대학교)
토론 : 박상은 (충북대학교)

유전자 변형 모기 환경방출실험의 현황과 쟁점: 옥시텍 Freindly™ 모기의 미국 플로리다 실험을 중심으로

박주형 (고려대학교),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1. 들어가며

옥시텍은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피나아웃(spun-out) 형태로 설립한 바이오기술 회사이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 중 유전체 편집을 적용한 해충을 환경에 방출하여 전체 개체 수를 통제하는 기술을 “Friendly™”이라 칭한다. 옥시텍은 이 기술을 여러 해충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Friendly™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서 2021년 현재 실행되고 있는 Friendly™ 이집트숲모기의 환경방출실험을 다룬다. 10여 년이라는 승인과정을 거친 이 역동적 사례를 다루기 위해 먼저 이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된 시민사회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사례가 지닌 환경·보건 문제, 규제상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쟁점 등을 정리하였다. 이는 과학 사회학의 영역에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 좀 더 폭넓은 논의와 유관 연구를 촉발하기 위함이다.

2. 옥시텍 Friendly™ 모기의 메커니즘

‘1세대 Friendly™ 이집트숲모기’인 ‘OX513A’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옥시텍은 먼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테트라사이클린’이 없으면 성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치사 유전자(lethal gene)를 가진 이집트숲모기를 만든다. 이 모기가 낳은 알에 있는 후손들은 선대의 치사 유전자를 물려받게 된다. 알들은 사육 시설로 옮겨져 부화한 이후 유충 단계부터 테트라사이클린을 제공받으며 성장한다. 이후 OX513A가 번데기 단계에 이르면 암수를 분류하여 암컷은 폐기처리 하고 나머지 수컷 번데기를 방출 상자에 담아 실험지에 설치한다. 그 후 방출 상자에서 성충으로 성장한 수컷 OX513A는 상자를 빠져나가 환경으로 방출된다. 이후 이 수컷들은 야생의 이집트숲모기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해당 암컷들은 기존의 산란처에 치사 유전자를 물려받은 알을 낳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알에서 태어난 OX513A는 유충 단계에서 테트라사이클린을 제공받지 않으므로 성충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이에 따라 방출지역의 전체 이집트숲모기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옥시텍의 주장이다. 옥시텍이 2018년 발표한 ‘2세대 Friendly™ 모기’ 기술은 야생에서 부화한 OX513A 유충 중에 암컷만 모두 죽고 수컷의 절반은 살아남도록 조정하여, 이집트숲모기를 더 오래, 더 많이 죽일 수 있게 되었다.

3. 사례: 美 플로리다 GM 모기 환경방출실험

2009년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서 텅기열이 확산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0년 플로리다 키스 모기 통제 센터(FKMCD)는 자신들의 관할지역에서 옥시텍의 GM 이집트숲모기 실험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 3월 옥시텍은 OX513A의 환경방출실험 신청서를 USDA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1년 10월 USDA가 GM 모기에 대한 규제관할권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심사가 취소되었다.

옥시텍은 2011년 11월 곧바로 FDA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FDA의 수의학센터가 새로운 승인 과정의 검토를 맡게 되었다. 옥시텍이 FDA에 환경방출실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Friendly™ 모기 환경방출실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주된 쟁점은 환경보건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보 공개, 규제 과정의 투명성 요구, 옥시텍과 규제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었다.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FKMCD는 두 차례의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이에는 FKMCD 측 인사, 옥시텍 경영진과 과학자, 키스 제도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NGO 소속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1, 2차 타운홀미팅에 참가한 시민들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였다. 그들은 주로 GM 모기 실험이 환경 및 보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상세하고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 키스 제도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잡자리와 같은 생태계 포식자를 이용한 대안적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옥시텍의 GM 모기 환경방출실험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실험 승인과 관련된 FDA의 공식적 판단은 허가신청 이후 약 4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11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FDA는 옥시텍이 제출한 환경평가 '초안(draft)'을 공개하고 동시에 플로리다 키스 지역의 GM 모기 환경방출실험이 환경과 보건에 끼칠 "중대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음(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을 뜻하는 이른바 예비(preliminary) "FONSI"를 발표하였다(CVM, 2016b). 이후 공공의견수렴을 통해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GM 모기 환경방출실험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5일 FDA는 최종 FONSI를 발표하였다.

FDA의 예비 FONSI가 발표된 이후, FKMCD는 환경방출실험 예정지인 플로리다 키 헤이븐의 시민들과 키스 제도가 속한 '몬로 카운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시텍의 실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몬로 카운티 시민들의 57%가 옥시텍의 실험에 찬성하였고, 키 헤이븐 시민들의 65.16%는 실험 진행에 반대하였다. 최종 결정권은 FKMCD의 위원들 5명에게 있었는데, 11월 19일에 개최한 회의를 통해 키 헤이븐 지역에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고, 대신 위원 5명 중 3명의 동의에 따라 키 헤이븐을 제외한 몬로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의 실험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실험지가 정해지고 옥시텍이 바뀐 실험지로 다시 FDA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실험은 연기되었다. 환경방출실험 연기 결정 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FDA는 산업계를 위한 새로운 지침인 <모기 관련 생산품에 대한 FDA와 EPA 관할권의 명료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모기의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의 제품은 모두 살충제로 분리 되어 EPA가 관리하게 되었다.

2018년 옥시텍은 EPA에 OX513A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Experimental Use Permit, EUP)를 신청했다가 철회하였고, 이듬해 9월 2세대 Friendly™ 이집트숲모기인 OX5034의 EUP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EPA는 EUP의 내용에 대해 공공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승인 반대와 검토과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2020년 4월 30일 OX5034의 환경방출을 허용하는 EUP를 문서로 공식화하였다. 결국 옥시텍은 약 2년에 걸쳐 몬로 카운티에 총 10억 마리가 넘는 GM 모기를 방출할 수 있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EPA의 승인 이후 FKMCD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2021년부터 옥시텍의 실험을 진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FKMCD는 2021년 4월 26일 키스 제도의 키조 키(Cudjoe Key), 램로드 키(Ramrod Key), 그리고 바카 키(Vaca Key)에 최초의 GM 모기 방출을 위한 사육상자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옥시텍은 이후 5월 초부터 12주 동안 매주 12,000마리의 수컷 GM 모기가 환경으로 방출될 것이며, 2022년의 2단계 방출에서는 4개월 동안 약 2,000만 마리가 방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방출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갈등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4. 논의: 플로리다 GM 모기 환경방출실험의 쟁점

Friendly™ 모기의 방출과 관련하여 환경 및 보건 안전성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되어왔다. 이집트숲모기의 생태적 지위를 다른 모기가 차지할 위험성, 인간이나 포식자에게 항생제 저항성을 전달할 위험성, 모기 개체 수 감소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문제 제기, 이집트숲모기 개체 수의 경감과 모기 매개 질병 개선 간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방출실험 승인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옥시텍의 주장과 경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그에 대한 규제 체계의 준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도 끝내 실험을 승인받은 상황이나, 기존 관할권에서 드러나는 규제적 틈들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미국의 규제 절차는 신기술의 도입을 과학기술적 검증의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총 10년이 넘는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GM 모기에 대한 규제상의 정의는 모기 매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해결책’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키스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GM 모기의 환경방출을 훨씬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해충과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응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와 EPA는 이를 철저히 과학기술적 쟁점으로 다루었고, 이에 따라 이 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해석과 그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은 고려대상에서 탈락하고 배제되었다. 또한 옥시텍의 GM 모기 메커니즘은 일종의 ‘구독경제’ 상품처럼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옥시텍에게 환경방출실험은 효과성을 조사하는 과학기술적 실험입과 동시에 미국에 GM 모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GM 모기의 환경방출실험처럼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실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과학기술학의 실천적 영역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제도와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한 경험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시민 관여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성패에 대한 평가에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더 큰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지향점을 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사한 사례들에도 이러한 과학기술학의 경험과 지향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학 역시 적극적으로 GM 모기의 환경 방출실험과 연구개발 문제를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모래로 만든 도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골재 이동의 정치

김준수 (카이스트)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에 중요한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는 모래 골재 산업을 검토한다. 건조환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에 섞는 골재가 필요하다. 골재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래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원된 자연물 모래의 동원 과정을 통해 도시의 형성적 연결과정과 공간의 수직성을 인류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골재 산업이 이뤄지는 산지, 강, 바다에서 사업성 있는 모래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검토하고, 최근 대두된 다양한 환경 담론들과 모래 채취 산업이 결합하면서 벌어진 초국적 모래 이동 과정을 분석한다. 이런 과정은 도시의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는 물질의 동원 과정이 지역을 넘어 초국적 또는 형성적 차원에서 연결되는 과정임을 밝힘으로써 도시(city)라는 물리적 공간 구성의 수직적, 형성적 연결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인류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론적, 분석적 틀의 구성을 기대해본다.

공간의 수직성(verticality)에 대한 접근은 지표면의 계획, 개발, 보존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서구의 일부 비판적 지리학자들을 제외하고, 공간의 수직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Squire & Dodds, 2020; Garrett, 2013). 특히 최근 새로운 지질학적 시기를 의미하는 인류세(Anthropocene)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형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등과 같은 인식론 속에서 공간의 수직성에 대한 조명이 요구된다. 도시의 마천루, 지하공간 개발과 투기, 해저 자원 탐사, 해저 케이블 설치, 지하 공간 인프라 배치, 자원 채굴 등과 같이 도시의 경계 내(외)에서 이뤄지는 공간의 수직적 역동성은 '지표면의 정치'를 유지하거나 저항하는 이론적, 인식론적 틀로서 작동한다.

영미권의 비판 지리학자들과 정치생태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공간의 수직성에 대한 논의 속에는 행성 포식자(world-eater)로써 지하자원 채굴과 자본 축적의 문제(Dunlap & Jakobsen, 2020; Arboleda, 2016), 지하 공간의 지정학적 문제(Valdivia, 2015), 해저 개발과 탐사(Squire, 2016; Childs, 2019), 도시 상공의 안보 문제(Adey, 2010), 도시 공간의 파이프라인과 인프라(Barry & Gambino, 2019; Gandy, 1999; Garrett, 2013; Graham et al, 2014), 지구공학(geo-engineering) 접근(Bishop and Crittenden, 2011; Boyd, 2008), 테라포밍(terraforming)을 통한 형성적 통제의 정치경제학적, 문화적 담론(Masco, 2015; Pak, 2016)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들은 오늘날의 인류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적 분석의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식론적, 이론적, 실천적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골재, 모래 산업은 연간 2조 원 정도의 규모이나 건설산업 전체 용적의 80% 이상을 골재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토건 및 건조환경 산업에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 질이 건설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골재는 순환골재(재생골재)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질에 있어서 안전성과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체재 없이 천연골재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히 모래 골재는 콘크리트와 레미콘 그리고 아스팔트 등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 내는데 기초 재료이다. 따라서 골재의 공급 과정은 건조환경 산업의 전반적인 가격 조절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의 모래 채취는 강바닥, 산지, 휴경지 임대, 바다 골재 채취 등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골재 운송은 운송비용 측면에서 육로로 50km 이상 이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 2000개가 넘는 골재 채취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에 따라 골재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골재파동으로 불리는 이런 현상들은 1990년대 이래로 매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2004년 최대 규모의 골재파동이 일어났었다. 또한 바다 골재의 경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모래 채취가 가능했으나, 2019년 어족 자원 감소와 주변 환경 파괴를 이유로 서해와 남해에서 전격적으로 모래 채취가 금지되었다(그러나 최근 서해EEZ에서 공공목적 모래 채취는 허용됨). 따라서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서 골재 수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 모래를 수입하는 경로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수도권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의 모래를 수입해왔다. 보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등지의 국가에서 모래 수입이 시작되었고, 한국 정부도 국내 모래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모래 수입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 1〉 북한산 모래 국내 수입 경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건조환경의 배치 과정이 국가의 영토 내부의 자원동원 과정과 자본 순환 과정의 내파적(implosion) 과정을 넘어서 모래라는 자원이 행성적 연결망을 가지게 되는 외파적(explosion) 과정과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 채취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행성적 도시화 과정의 수직적 연결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륙 골재 채취 산업과 바다 골재 채취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동원 과정은 행성적 도시화의 다층적 측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류세의 기술적 동원 방식의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의 수직적-행성적 연결과정을 모래라는 물질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인류세의 정치지리적 분석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Adey, P. (2010). *"Aerial life: Spaces, mobilities, affects"*. John Wiley & Sons.
- Arboleda, M. (2016). "Spaces of extraction, metropolitan explosions: planetary urbanization and the commodity boom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96-112.
- Bishop, R. L., & Crittenden, R. J. (2011). *"Geometry of manifolds"*. Academic press.
- Boyd, P. W. (2008). "Ranking geo-engineering schemes". *Nature Geoscience*, 1(11), 722-724.
- Childs, N. (2019). "To Go Boldly". *Survival*, 61(1), 189-194.
- Dunlap, A., & Jakobsen, J. (2020). *"The Violent Technologies of Extractio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Gandy, M. (1999). "The Paris sewers and the rationalization of urban spa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4(1), 23-44.
- Garrett, B. L. (2013). *"Explore everything: Place-hacking the city"*. Verso Trade.
- Graham, S., & McFarlane, C. (Eds.). (2014). *"Infrastructural lives: Urban infrastructure in context"*. Routledge.
- Masco, J. (2015). "The age of fallout". *History of the Present*, 5(2), 137-168.
- Pak, C. (2016). *"Terraforming: ecopolitical transformations and environmentalism in science fiction"*. Liverpool University Press.
- Squire, R., & Dodds, K. (202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ubterranean" *geopolitics*. 25(1), 4-16.
- Squire, V. (2016). *"The exclusionary politics of asylum"*. Springer.
- Valdivia, G. (2015). "Oil frictions and the subterranean geopolitics of energy region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47(7), 1422-1439.

세월호의 과학기술학, 해결된 문제와 미해결 질문들

홍성욱 (서울대학교), 황정하 (서울대학교)

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과학기술학적인 주제들을 연구해왔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2017년에 사고 원인 조사 및 진상 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선조위에서도 역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치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러한 이견은 결국 2018년 여름에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공식적인 국가 보고서인 선조위 종합보고서에서조차 사고 원인에 관해 “내인설”과 “열린안”의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필자들은 이처럼 선조위 내부에서 세월호의 복원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못했던 과정에 관해서 연구해왔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들은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에 지녔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했고, 일부 질문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기도 했으며, 연구 과정 중에 새로운 질문을 가지기도 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필자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관한 논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자들이 충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못한 5개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질문 중 첫째는 위험의 사회적 해결 과정에서 정치적 국면과 기술적 국면을 나누는 과학기술학자 해리 콜린스의 선택적 모더니즘의 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 과정과 관련한 ‘법적 국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둘째는 선조위 내부에서 내인설과 열린안 각각의 편에 섰던 선조위 위원들과의 인터뷰 진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필자들이 가지게 된 ‘논쟁의 포로(captives of controversy)’의 문제이다. 셋째는 인터뷰를 진행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원인과는 다른 개인적인 가설과 이론을 지니고 있다는 ‘공식적 보고와 비공식적 판단들’의 문제이다. 넷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재난 프레임’ 개념을 다른 재난 사고에 확대해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상된 세월호 참사’의 문제, 즉 세월호 사고의 시각화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이해의 문제이다. 필자들은 이런 주제에 관해서 향후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사회학회에서 본 발표를 접한 다른 사회과학 연구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인권

글로벌리제이션/인권

사회 :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1. Merits of Social Protection? Correlates of Work Bank Project Performance
발표 :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토론 : 김수경 (한신대학교)
2. Moving Apart, Coming Together: The Dynamics of Coalition Building in the South Korean LGBT Movement
발표 : 정성조 (중앙대학교), 정다울 (중앙대학교), 이희영 (SUNY Albany), 서찬석 (중앙대학교)
토론 : 정진원 (카톨릭대학교)
3.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뉴욕타임즈와 중앙일보 토픽 모델링, 2000-2020
발표 : 김나현 (성균관대학교)
토론 : 백승민 (이화여자대학교)

Merits of Social Protection? Correlates of Work Bank Project Performance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Do the World Bank's emphases on social protection matter when enhancing aid effectiveness? We have little empirical evidence as to how social protection emphas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ffect the chances of achieving project success, particularly the outcomes of aid projects funded by the World Bank.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protection emphases and project outcomes is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 difficulties of measuring the notion of social protection. Consequently, any serious effort to link social protection measures to project outcomes need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the measurement. Against this backdrop, we seek to directly measure social protection emphases of the World Bank sponsored aid projects by focusing on the text data compiled by the World Bank—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s (ICRs). ICRs show the purpose, performance, and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Next, we analyze project outcomes in combination with a social protection measure alongside other national and project level factors. Specifically, we analyze the keywords of ICRs using topic modeling—generalized 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as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to compute the topic probability in each report to confirm the extent to which social protection is emphasized in each project. Our findings show that favorable project performances are more likely in countries with a large population and high GDP growth. The World Bank's development type is less likely to produce favorable project outcomes. The intervention of the recipient government is less likely to lead to an increase in success of project outcomes. The proportion of social protection estimated by topic modeling appears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nhanced project outcomes.

Moving Apart, Coming Together: The Dynamics of Coalition Building in the South Korean LGBT Movement

정성조 (중앙대학교), 정다울 (중앙대학교), 이희영 (SUNY Albany), 서찬석 (중앙대학교)

INTRODUCTION

Coalition building within and across social movements is one of the major tasks as well as challenges for any movements to bring about substantial social changes (Beamish and Luebbers 2009; Daphi, Anderl, and Deitelhoff 2019; McCammon and Moon 2015; Van Dyke and Amos 2016; Van Dyke and McCammon 2010). As much as coalition matters, potential conflict between actors within the social movement is a critical risk factor for the movement to succeed. Unreconciled friction inside the movement often leads to an unsuccessful outcome and even to the dissolution of the movement itself in the long run (Heaney and Rojas 2008).

How do movement actors with dissimilar identities overcome internal differences and sustain collaborative efforts under the same umbrella? Past studies have identified the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movement actors can maintain coalition in various contexts. As to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s the movement, past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opening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facilitates the creation of movement coalition (Chang 2008; Meyer and Corrigall-Brown 2005). For example, in the case of civil rights movement, the expanding political opportunities under the liberal presidency in the 1960s enabled liberal constituencies to work together for the passage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McAdam 1999).

Relatedly, repression from outside can have a paradoxical effect on social movements. In face of repressive events, various actors inside the movement can rather overcome internal differences and work together to deal with those threats (Brockett 1995, 2005; Chang 2008; Van Dyke and McCammon 2010). This was recently exemplified in the rise of anti-Trump Resistance movement in 2016 where social movement actors with different causes and goals successfully formed coalition as they perceiv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cy of Donald Trump as a common threat to the movement (Meyer and Tarrow 2018; Suh and Tarrow 2021; Tarrow 2021).

Moving to the factors inside the movement, leadership plays a critical role in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movement actors with different goals and identities. There are main actors in social movements who provide communication channels needed for

movement actor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coalition (Diani 2003; McAdam, Tarrow, and Tilly 2001; Mayer 2009; Vasi 2011), which is seen from the historical case of Paul Revere in the American Revolution (Han 2009) to the contemporary case of the lawyers at the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habeas corpus efforts of the Guantanamo lawyers (Suh 2014). Additionally, cultural f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forming coalition. Specifically, past studies have suggested that hybrid identities that span the boundaries of movements can be effective in recruiting supporters across movements with different issues and identities to form a successful coalition (Heaney and Rojas 2014; Wang, Piazza, and Soule 2016).

Notwithstanding the various studies on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movement coalition, what is less known is the particular dynamics of how a coalition can be formed, maintained, and transformed within a social movement consisting of various actors with dissimilar identities. Whereas past studies have identified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process of coalition building, a longitudinal approach to the relational structure inside the movement is needed to fully understand how these factors come into play in the actual dynamics of the formation of coalition. Extending the previous literature on movement coalition, our research focuses o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movement coalition in case of the South Korean LGBT movement. Drawing on the case of the LGBT movement in South Korea from 1993 to 2019, we illuminate and identify the particular dynamics of how LGBT movement organizations with dissimilar identities could avoid frictions and build coalition in the long run.

LGBT movement in South Korea serves as a good case to study the coalition of movements since it demonstrates a successful example of a strongly sustained coalition. With its history of over 25 years since its emergence in the civil society, the LGBT movement has gradually increased its strength both quantitatively, in term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organizations and participants, and qualitatively, regarding the broad list of issues the movement has raised. This successful coalition did not emerge without challenge. The movement had to experience potential conflicts and internal frictions since its emergences especially between gays and lesbians as well as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professional activists. Considering the cultural and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within the movement, it is theoretically meaningful to explo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trong coalition was built within the LGBT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case of South Korean LGBT movement is also interesting especially considering the hostile external environment the movement. Public opinion on homosexuality was generally unfavorable from its beginning, despite its ups and downs (Bong 2008; Kwon-Kim and Cho 2011; Seo 2001). Under the long legacy of Confucianism, people generally showed a hostile attitude towards sexual minorities who did not follow traditional familial values. In addition, mainstream Christian churches revealed abhorrence and antagonism towards homosexuality, treating homosexual acts as sin. Based on their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n homosexuality, mainstream Christians churches also initiated campaigns against the activism of LGBT movement such as Queer Parad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LGBT movement in South Korea successfully formed and maintained a strong alliance among movement organizations and activists in face of both internal frictions and external threats. Using a unique dataset our research team collected and combined from various sources, our findings suggest that constant external threats unintentionall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LGBT community to overcome internal conflicts and to form a coalition under a common goal. We explain this process of coalition building as a direct response to the repeated repressive events from outside. Additionally, as a response to repeated repressive events from outside, our findings suggest that LGBT groups have successfully formed and sustained their conductive communication structure.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the collaborative networks of organizations, we reveal that movement coalition was possible based on the bridging role of movement groups that mobilized under an inclusive identity such as 'human rights' or 'queer' without representing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such as 'gays' or 'lesbians'. In conclusion, we discuss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n the dynamics of movement coalition.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뉴욕타임즈와 중앙일보 토픽 모델링, 2000-2020

김나현 (성균관대학교)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공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특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낮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문화·기술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정의는 물론 그 범위도 넓어졌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비교 및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타임스(NYT)와 중앙일보의 프라이버시 관련 31,360건의 기사를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다. NYT에서는 “Privacy”를 키워드로 20,833건을 수집했고, 중앙일보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키워드로 10,527건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프라이버시 의제를 비교·분석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

인 쇄 : 2021년 12월 15일

발 행 : 2021년 12월 17일

편 집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행인 : 장 원 호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Tel: 02-722-8747 Fax: 02-722-8746

인쇄처 : 한학문화

Tel: 02-313-7593 Fax: 02-393-3016

사전 승인 없이 책자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발표논문집은 202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2021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SOCIOLOGICAL CONFERENCE FOR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Tel.02 722 8747 Fax.02 722 8746 E-mail.ksa8747@hanmail.net